

2015



기획연구

사회적 경제 사상 연구 및
실제적 적용에 관한 연구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사회적 경제 사상 연구
및 실제적 적용에 관한 연구**

2015년 12월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제 출 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5년 5월 귀 기관과 체결한 『사회적 경제 사상 연구 및 실제적
적용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2.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 사 장 박 진 도

연 구 진

| 책 임 연 구 원 | 홍 기 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 공 동 연 구 원 | 정 태 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 병 천 강원대학교 교수

| 연 구 보 조 원 | 김 연 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고유의 사상과 이론의 기초를 얻기 위해 칼 폴라니의 경제 사상을 검토하고 함의점을 뽑아낸다. 사회적 경제의 실천과 여러 제도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보았으나, 이것이 기존의 시장 경제/화폐 경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유한 특징과 성질들을 어떻게 파악되어야 하는지 나아가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의 존재가 전체 사회 경제 체제의 구성에 대해 갖는 의미와 함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논의의 시작 단계에 있다. 칼 폴라니는 ‘경제적 인간’의 ‘최적화 행동’으로 구성되는 시장 경제의 이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사회 내에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것이 제도화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을 전개한 이이며, 국제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많은 이론가 및 활동가들이 영감의 원천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상가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칼 폴라니 경제 사상의 독특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유작 《인간의 살림살이》에 나타난 바를 중심으로 인간, 사회, 경제를 바라본 그의 시각을 ‘인류학적 경제학’이라는 개념으로 개괄한다. 2부는 폴라니의 경제 사상을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사회적 경제의 고유한 성격과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잠정적인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둘째, 연대로서의 사회, 셋째, 목표로서의 좋은 삶이라는 세 가지의 개념을 폴라니의 사상에서 끌어낸 뒤 이 셋을 결합하여 ‘개인과 전체의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 사람들의 자발적 연대로 구성되는 경제 영역’이라는 잠정적인 정의를 얻고, 이것이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이론가 활동가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사회 연대 경제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인다. 3부는 시장 및 영리 부문, 국가 및 공공 부문, 사회적 경제라는 세 개의 영역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의 문제와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포함하게 될 경우 전체 사회 경제 체제가 어떠한 성격으로 전환하게 되는지라는 보다 거시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 결론으로서 생태 문제가 대두되고 경제 성장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이 더욱 중요해지는 오늘날의 경제에 보다 적실한 성장의 개념은 '다원적 성장'의 개념임을 보이고자 한다.

이 세 부분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가 첫째, 여러 다른 기능으로 편의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단일의 영역임을 말하고자 하며, 둘째, 기존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경제 성장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개인과 집단의 좋은 삶의 확보라는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윤리적인 영역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는 칼 폴라니의 경제 사상 검토에 기반한 이론적 구성 작업으로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구성된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여러 개념들이 실천 현장에서 어떠한 또 어느 만큼의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의 논의와 노력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이론가 및 활동가들과의 긴밀한 면접과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본 연구에서는 수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이론과 개념을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인 적실성을 갖는 이론과 개념으로 버려 나가는 이러한 작업이 향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약한다.

목 차

I. 《인간의 살림살이》와 인류경제학

1. 문제의 제기: 폴라니 사회경제학의 진화 3
2. 《인간의 살림살이》와 실체적 비시장경제학 7
 - 1) 출판 경과 7
 - 2) 세 가지 이론적 원천: 베버, 멩거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8
 - 3) 실체적 비시장경제학의 내용 11
3. 비시장경제의 역사 16
4. 이론적 공백과 미완의 과제 21
5. 소결 26

II. 사회연대경제

1. 들어가며 31
2.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34
 - 1) 문제의 제기 34
 - 2) ‘경제’라는 말의 짧은 역사 36
 - 3) 경제라는 두 가지 의미의 구별: 20세기 초의 시도들 39
 - 4) 칼 폴라니의 “실질 경제학” 46
 - 5) 칼 폴라니 이후: 미국과 유럽의 제도주의 경제학 56
 - 6) 소결 61

3. '연대'로서의 사회	66
1) 문제의 제기	66
2) 국가, 시장, 사회: 근대의 발전과 사회의 발견	67
3) 생 시몽과 로버트 오언: 인격적 존재의 관계로서의 사회	72
4) '연대'로서의 사회와 그 경제적 기능	76
5) 소결	87
4. 사회적 경제의 규범 기준으로서의 "좋은 삶"	88
1) 문제 제기	88
2)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	92
3) 소결	107
5. 맺으며: 살림살이, 연대, 좋은 삶	112

Ⅲ. 폴라니와 다원적 발전 이론 - 시론

1. 세계금융위기와 거대한 전환, 그리고 대응운동	123
2. 폴라니의 사상의 미시적 기초	129
1) 폴라니의 사회적 통합양식: 인간성과 제도의 다양성	129
2) 폴라니의 경제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 공공경제 시장경 제의 관계	135
3) 한국의 불평등과 소득주도성장: 폴라니의 거시경제론	151
참고문헌	162

I. 《인간의 살림살이》와 인류경제학

폴라니의 경제 사상 개관

I. 《인간의 살림살이》와 인류경제학

플라니의 경제 사상 개관

1. 문제의 제기: 플라니 사회경제학의 진화

고삐 풀린, 탈규제된 시장사회와 시장경제를 인류사에서 정상적인 것 또는 어떤 자연적인 진화의 산물로 바라보는 생각은 우리 시대의 지배적 통념이다. 이 통념의 뿌리는 매우 깊다. 그런데 칼 플라니는 바로 이런 근대 시장경제 및 시장사회 형태, 그 속에서 사는 근대 ‘시장인간’의 삶의 틀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특수 역사적 형태에 자연의 옷을 입혀 정당화하는 주류 지배적 통념이란 심각한 착각 내지 빼놓아진 편견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플라니는 그런 생각위에서 사회경제사와 사회경제학의 새 길, 그리하여 새로운 경제양식과 삶의 방식을 열기 위해 고투했다. 그는 사익을 추구하며 서로 경쟁적으로 다투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또는 ‘시장 인간’을 맷돌 돌리듯이 찍어내는 시장사회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교설인 주류 시장경제학 및 그 기초에 있는 공리주의, 효율지상주의와 경제(결정)주의에 대항했다. 그리하여 그는 풍부한, 다면적 욕구를 가진 인간,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고귀함을 복원,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렇지만 플라니는 단지 고고한 철학자나 문학자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인간의 나날의 살림살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경제주의자, 시장근본주의자의 수중에 넘겨 주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플라니는 사회경제사학자, 사회경제학자로 인간의 고귀함을 회복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인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인간의 총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경제학, 심지어 ‘인류 경제학’(anthropological economics)¹⁾의 길을 추구했다고 해도 좋다. 그는 상호 공유하며 안정된, 물질적 삶을 가능케 하는 좋은 경제 – 플라니의 용어로는 ‘실체적 경제’ – 없이는 좋은 사회도 좋은 삶도 지속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얼핏 저 유명한

1) 필자(이병천)가 만들어낸 용어다.

마르크스의 토대 상부구조론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폴라니가 생각하는 경제 및 사회의 관념, 그리고 그 상호관계에 대한 생각은 마르크스식 ‘경제적 사회구성체’론과는 크게 다르다. 폴라니 사회경제학의 핵심 화두는 사회 속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 것인가, 경제과정이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제도화되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 나아가 어떻게 다시 ‘사회에 착근된 경제’(socially embedded economy)²⁾의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때 폴라니에서 ‘사회’라는 말은 사회적 삶 및 폭넓은 사회 관계의 그물망이라는 의미와 함께 고립된 경제인을 넘는 인간 주체성에 대한 생각, 즉 총체적,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der Vergesellschaftliche Mensch)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자신의 작업의 의미를 간결하면서도 적절히 요약하고 있는 폴라니의 다음의 말이 이를 잘 말해준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생산자로서 일상 활동에서 인간을 이끌어 가는 동기의 통일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경제시스템을 다시 사회 속에 재흡수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산업적 환경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Polanyi 1947/1968, 72-73).

폴라니 사회경제학의 세계는 매우 방대하다.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된다. 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의 학문 세계는 우리 시대 시장경제 및 시장사회의 연구(A), 경제문명사적 견지에서 비시장경제의 연구(B), 시장체제를 극복하는 미래 대안 연구(C) 등 세가지 주제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대한 전환》(1944)은 첫 번째 주제군의 대표 저작이자 폴라니 사회경제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대표적인 저작에 해당된다. 셋째 주제군에 대해서는 폴라니는 많은 연구를 내놓지는 않았다. 《거대한 전환》의 출간 이전에 ‘사회주의 경제계산 논쟁’에 참여하기도 했던 1920~30년대에 쓴 글들에서 기능적 사회주의, 기능적 민주주의 등에 대한 그의 중요한 생각을 찾아 볼 수 있다. 길드사회주의, 오스트리아-마르크스주의 및 오스트리아 경제학 등에 공감을 가졌던, 이 시기 폴라니의 글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메시지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사회 대안의 모색에서도 여전히 큰 생명력을 갖고 있다.³⁾ 그렇지만 아무래도 폴라니

2) 폴라니의 키워드 중의 하나인 “embeddedness”의 국역은 우리 학계에 통일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는 착근(성)이라 번역한다.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떨어진다. 오히려 폴라니가 첫째 주제군 못지않게 크게 열정을 쏟았던 것은 둘째 주제군이었는데, 이는 《거대한 전환》 이후 후기 폴라니의 주요 관심 분야였다.⁴⁾

경제문명사라는 우회로로 진입함으로써 폴라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와 시장 사회를 자명한 것으로, 어떤 자연사적 산물로 간주하는 당대 좌우의 공통된 편견에 대항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 시장체제를 거시문명사적 견지에서 상대화, 특수화하면서 자신의 사회경제(사)학의 지평을 새롭게 확장했다. 이 주제군과 관련된 대표적 저작으로는 《초기 제국의 교역과 시장》(1957), 《다호메이와 노예무역》(1966), 그리고 《인간의 살림살이》(1977)을 들 수 있다. 《초기 제국의 교역과 시장》은 폴라니가 주도한, 컬럼비아 대학에서의 공동 연구성과이며, 《다호메이와 노예무역》은 이미 생전에 (1950년대 초) 완성되었으나 사후에 출간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살림살이》는 미완성상태의 유고를 폴라니 제자중의 한 사람인 해리 피어슨(H. Pearson)이 편집하여 발간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대한 전환》 이후 여러 연구들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살림살이》에 주목하게 된다. 폴라니의 연구 생애에서 《인간의 살림살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자신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책은 보편 경제사를, 인간의 살림살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취지에서 쓴 것이다. 따라서 십여 년 전 《거대한 전환》에서 다룬 최초의 문제의식은 이 책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거대한 전환》에서 나는 인간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더 현실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폭넓은 개념적 기초 위에 일반 경제사를 재건해야 한다고 암시한 바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컬럼비아대학 사회과학 연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948년에서 1952년까지) 5년 이상 동안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 3) 폴라니는 기능대표와 지역대표의 두 축으로 대표되는 분권적 참여 사회주의를 구상했다. 폴라니의 대안사회주의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단지 민주적 사회주의일 뿐 아니라, 콜(G.H.Cole) 등 길드 사회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국가장치로의 권력 집중을 경계하고 심지어 그기에 ‘대항하는’ 사회 자율성에 대한 사고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 4) 최후의 폴라니는 산업문명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좋은 삶은 어떻게 가능한지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문제’와 대면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잡지 《공존》의 출간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 작업은 내가 아렌스버그 교수 및 피어슨 교수와 함께 《초기 제국의 교역과 시장》(1957년)이라는 책을 편집하느라 수년 동안 지연되었다. … 《인간의 살림살이》라는 제목의 이 저작은 바로 최초의 노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Polanyi 1977, xxxix: 국역, 1권, 21, 고딕은 인용자).

여기서 폴라니는 자신이 《거대한 전환》을 쓰면서 인간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더 현실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폭넓은 개념적 기초 위에 일반 경제사를 재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살림살이》가 비시장 경제를 대상으로 삼아 《거대한 전환》의 이 생각을 가장 잘 이어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살림살이》는 폴라니가 전근대 시기 비시장경제의 형태, 그 진화 및 다양성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시장체제를 상대화하고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려는 《거대한 전환》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그가 전생애를 걸고 추구한 바, ‘시장경제학을 극복하는 폭넓은 개념적 기초’, 즉 실제적 비 시장 경제학에 대해 가장 정리된 생각을 보여준다. 우리는 폴라니의 실제적 경제학이 《거대한 전환》에서는 아직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실제적 경제학은 《거대한 전환》 이후에 새로 수립된 것으로서, 그 대략적 윤곽은 《초기제국의 교역과 시장》에 수록된 폴라니의 논문, “제도화된 과정으로서의 경제”(1957)에서 처음 제시된 바 있고 유고집 《인간의 살림살이》에서 보다 진전되고 정리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이 글은 《인간의 살림살이》를 중심으로 후기 폴라니의 진화된 사회경제학의 내용을 살펴 보려한다. 이하 본문의 제2절에서는 먼저 《거대한 전환》 이후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인간의 살림살이》의 실제적 경제학의 이론적 부분을 살펴본다. 이어 제3절에서는 전통적 비 시장 경제에 대한 폴라니의 관점과 분석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인간의 살림살이》가 남기고 있는 문제점과 연구 과제에 대해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이 논문의 논지를 간단히 요약한다.

2. 《인간의 살림살이》와 실체적 비시장경제학

1) 출판 경과

《인간의 살림살이》⁵⁾는 폴라니의 유고집이다. 이 유고집이 공간되어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대가들의 유고를 발굴하고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주 흔히 보는 일이지만, 유고가 출간되기까지는 복잡한 사정들이 있기 마련이다. 《인간의 살림살이》의 출간을 둘러싸고는 이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이 책이 미완성 상태였기 때문이다. 편집책임을 맡았던 피어슨은 서문에서 “설령 폴라니가 10년을 더 살았다 해도 《인간의 살림살이》를 출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의 방대한 구상 그리고 꼼꼼한 완벽증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출간 여부와 관련하여 특별히 강력한 반대의견을 가졌던 사람은 당시 폴라니의 제자중의 한 사람이며 이후 고대사가로 명성을 높인 핀레이 Moses I. Finley 였다. 핀레이는 피어슨이 그리스에 대한 원고를 《인간의 살림살이》에 넣지 말도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⁶⁾. 더 자세한 반대 이유를 알 길은 없으나 그리스 경제에 대한 폴라니의 생각이 자신과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인지 모른다. 여하튼 최종적으로는 원고를 컬럼비아대학 도서관에 기탁하는 시점에서 폴라니 부인의 요청에 따라 출판을 결정하게 된다.

《인간의 살림살이》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사회에서 경제의 위치”(제 1-10장)를, 제2부는 “고대 그리스의 교역, 시장, 화폐”(11-17장)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제 1부와 제2 부는 원고 원천도, 집필 시기도 달랐다. 제 1부는 《초기 제국의 교역과 시장》과 직결된 원고로서 1951년 3월경에 일단 마무리되었다. 반면 제2부는 1947-1953년 기간 중 컬럼비아 대학에서 했던 강의록으로 구성되어 있다.⁷⁾ 제 1부 “사회에서 경제의 위치” 편

5) 영문 원제는 “The Livelihood of Man”이다. 국역(1983), 일역(1980)은 “인간의 경제”로 번역했다. 한편 불역판(2011)은 “La Subsistance de L’Homme ”으로 번역했다. 필자의 영문 원제를 살려 《인간의 살림살이》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살림살이라는 우리말을 잘 살린다면, ‘경제학’도 ‘살림 공부’라고 할만하다. 필자는 현재 《인간의 살림살이》의 새 번역판 발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마니타스 출판예정).

6) Duncan & Tandy (eds.) (1994), p.25 주석 참조.

은 《인간의 살림살이》라는 제목 그리고 서문을 포함하여 출판을 위한 윤곽이 뚜렷하게 잡혀 있었다. 따라서 1부는 단순한 이런 저런 유고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폴라니가 출판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원고인 것이다. 반면에 제 2부 그리스 편은 원래 폴라니가 계획한 단행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원고로 보이며, 피어슨이 편집하면서 포함시켰던 것 같다. 책의 체계로 보면, 《인간의 살림살이》에서 제1부와 2부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피어슨의 편집안에 대해 핀레이가 반대했던 것도 이해할만 하다. 그런데 아래에서 지적하겠지만, 뜻밖에 《인간의 살림살이》에서 2부 그리스 편은 폴라니의 사회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새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로서는 피어슨에 대해 고맙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 《인간의 살림살이》의 경제이론 부분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2) 세 가지 이론적 원천: 베버, 멩거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살림살이》의 이론부분을 접하면서 우리는 《거대한 전환》을 다시 보게 되는데 그의 대표 저작 《거대한 전환》도 분명한 이론적 기초위에서 있는 책이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기본 주제로 삼고 인간들이 경제적 삶에서 상호 의존하는, 안정성과 통합을 가능케 하는 양식으로서 시장적 교환 뿐만 아니라 호혜, 재분배, 가정경제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혜, 재분배, 가정 경제 등 비 시장 형태가 지배적인 통합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화폐가 시장화되지 않음으로써 삶의 안정성과 공동체적 연대성이 보장된다는 것, 경제적·공리주의적 동기가 개화되지 않고 사회 속에 착근된다는 것이다. 폴라니는 이런 다양한 비 시장적 통합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근대의 시장 지배적인 경제가 역사적으로 정상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이론들과 관점 위에서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화폐를 허구 상품화하여 수요·공급·가격 기구 안에 집어넣는 우리시대의 시장경제, 그리고 사회전체를 시장경제논리에 종속시키는 시장 사회가 왜 지속불가능한지, 그리하여 사회의 대항을 불러일으켜 ‘이중운동’을 낳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7) Dalton, (1981), p 89, 주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전환》의 체계는 약점도 없지 않다. 첫째, 이 책의 서술구조는 역사적 전개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고 이론은 역사 안에 녹아 들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둘째, 이론적 수준에서 호혜, 재분배, 가정경제 등 비시장적 통합양식에 대한 논의는 투른발트, 말리노프스키 등 인류학의 연구 성과에서 가져온 것으로 주로 비경제적 동기에 초점을 맞춘 통합 양식론이다. 그 때문에 경제학으로서 독자적 내용이 미흡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거대한 전환》의 경제학은 분명히 ‘사회경제학’이지만 ‘경제사회학’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폴라니 자신도 이 점을 충분히 의식했던 것 같다. 그가 《거대한 전환》에서 ‘폭넓은 개념적 기초위에 일반경제사를 재건’할 필요성을 암시하고 이후 실체적 경제학(substantive economics)의 길을 모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이론적 측면에서 《인간의 살림살이》가 《거대한 전환》으로부터 새롭게 진전된 지점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폴라니의 경제에 대한 실체적 접근, 또는 실체적 경제학이란 사회에 착근된 경제의 역할과 그 독자적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 고투한 노력의 산물이다. 그것은 상이한 역사적 사회들에서 인간 욕구(human needs)의 충족 과정이 취하는 제도 형태를 분석한다. 그 기본 관심은 효율성(efficiency)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 충족(sufficiency)에 두어진다.

폴라니가 자신의 실체적 경제학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원천 또는 자원은 베버, 멩거,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생각된다⁸⁾. 우선, 폴라니는 실체적 합리성과 형식적 합리성에 대한 베버의 논의를 이어 받았다. 베버(Weber 1972/1997, 227-229)는 근대자본주의에는 두 가지 경제적 합리성 사이에 근본적 긴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한편으로 가치평가를 제거한 경제활동의 수량적 계산가능성 제고를 의미하는 형식적 합리성과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가치평가 관점에 따라 인구에 적절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 실체적 합리성(가치합리성, 실질적 목적합리성) 간의 근본적 긴장이 그것이다. 베버는 형식적 합리성의 극대화란 노동자의 기업가에 대한 복종 등, 실체적 합리성을 희생시키는 사회적 조건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베버는 통상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유뿐만 아니라 더 기초적 개념으로 경제적 효능

8) 폴라니 실체적 경제학의 이론적 원천을 베버, 멩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사람으로 제시한 연구는 보지 못했다. 폴라니와 멩거의 관계에 기존 연구로는 임종철(1998), Cangiani(2010), Yagi(2010)을, 폴라니의 베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Dale(2010, 109-110), 若森みどり(2011)를 참고하라. 폴라니가 주목한 바, 멩거의 《국민경제학 원리》 제 2판 유고의 공간은 이전에 하이에크 등 시장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지되었다.

을 낳는 온갖 기회들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전유(appropriation)라는 개념을 제시했다(Weber 1972/1997, 175, 268-324)⁹⁾. 이 또한 폴라니 실제적 경제학이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사실 베버 경제사회학의 성격은 단순하지 않다. 거기에는 근대의 합리화 과정을 마치 ‘철창’(iron cage)에 갇힌 것처럼 바라보는 생각이라든가, 국민국가의 이해를 전면에 앞세운다든가 하는 등, 보수적 지점들이 매우 많다(Bottomore 1985). 폴라니의 경우, 사회에서 경제의 위치를 바라보는 사상의 계보학이라는 측면에서 베버가 사회적 접근과 경제주의적 접근을 종합하는 시도를 했다고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폴라니는 베버가 ‘경제적’의 실제적 의미를 우위에 두지 않았다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경제사의 제문제를 해명하는데 중대한 난점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Polanyi 1947, 135-138).¹⁰⁾

다른 한편, 폴라니는 멩거가 《국민경제학 원리》 제 2판 유고에서 구분한 “인간 경제의 두가지 기본 방향”의 논의를 가져 오고 있다.¹¹⁾ 멩거가 말하는 한 가지 방향은 수단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제화의 방향’(economizing directions)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단의 충분·부족에 상관없이 생산의 필요에서 유래하는 ‘기술 - 경제적 방향’(techno-economic directions)이다. 멩거가 말하는 경제화의 방향과 기술 - 경제적 방향의 의미는 각각 베버의 형식적 합리성, 실제적 합리성 개념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폴라니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사상사적으로 경제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다.¹²⁾ 주지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1권)과 《니코마코스 윤리학》(5권)등에서 경제행위를 가정관리(oekonomia, household management)와 화식(貨殖, chrematistike, money-making)으로 대별시키면서 후자를 비판했다. 폴라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경제학이 공동체, 자급자족, 정의를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고 공

9) 베버 전유 개념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Swedberg(1998, 39, 224 ; 2011, 69-70)을 보라. 그리고 베버의 소유 개념을 파고든 보기 드문 연구로는 Ford(2010)을 참고하라. 흥미롭게도 포드는, 베버의 소유 정의가 현대 법학 및 경제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다발’로서의 소유정의와 흡사하다고 지적한다(99).

10) 若森みどり (2011, 175-186)은 폴라니에 미친 베버의 영향을 설득력있게 잘 부각시켰다. 그러나 폴라니의 베버에 대한 이 핵심 비판 지점은 주목하지 않는다.

11) 폴라니(1971)는 멩거에 대해 독립적인 논문도 집필했다. 이 논문은 1958~60년 사이에 쓴 것으로 짐작된다.

12) 아리스토텔레스의 제도경제학에 대해서는 폴라니의 글(Polanyi 1957)를 보라.

동체의 구성원은 ‘선의’(philia)의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좋은 삶과 공동체의 지속 및 물자 충족을 위해 고삐 풀린 화식행위와 시장 교역을 규제해야 생각에 주목했다. 폴라니는 이런 생각에 자신이 생각하는 실체적 경제학의 진수가 들어 있다고 보았다.¹³⁾ 앞서 지적한 멩거의 ‘기술 - 경제적 방향’도 아리스토텔레스에 닿아 있다.¹⁴⁾ 폴라니가 실체적 경제학을 구성함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멩거, 베버를 함께 끌어 들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 볼 수 있다.

3) 실체적 비시장경제학의 내용

폴라니는 이상과 같이, 베버, 멩거 및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행위와 합리성, 인간 욕구에 대한 논의를 이어 받았다. 지배적 통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이 ‘3대 이론적 원천’ 간에 공통점을 발견, 발굴한 폴라니의 생각에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거꾸로 보면 바로 그것이 폴라니의 사상사적 기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하튼 폴라니는 그들에게 내장된 진보적 부분 및 그 잠재력을 자기 방식의 이론화 작업에 녹여 넣었다.

폴라니는 주류 시장경제학을 경제의 형식적 의미에 기반한 형식적 경제학이라 규정하고, 이를 실체적 의미에 기반한 실체적 경제학과 대립시켰다. 두 경제학의 차이를 이해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이론의 핵심구조에서 제도화된 가치 또는 동기가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다. 형식적 경제학의 체계란 무한한 욕망을 갖고 경쟁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고립된 ‘경제인’, 기술적 의미 또는 ‘자연적 사실’로서의 희소성 그리고 효율적 선택을 공준의 기초로 삼는다. 즉 시장적 인간관위에 입각하여 도구적, 공리주의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학이다. 이에 반해 실체적 경제학의 체계란 다면적인 풍부한 욕구를 가지고 사회속의 자유와 공동체적 연대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인간’, 문화적·사회적으로 정의되는 희소성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에 보편적인 물질적 필요의 제공을 공준의 기초로 삼는다.

폴라니는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더 높은 ‘좋은 삶’을 추구하는 고귀한

13) 폴라니는 《인간의 살림살이》 이후 최후의 시기에 좋은 삶과 좋은 사회라는 관점에서 한층 더 아리스토텔레스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서는 若森みどり (2011, 241-246) 참조.

14) Yagi (2010, 35) 참조.

존재라는 것, 욕구가 아니라 수단이 물질적이라는 것, 총체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질적 기본수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은 경제 즉 실제적 경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간은 결코 고립적으로 물질적 수단을 얻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은 자연에 그리고 자기 동료에 의존한다. 이로부터 ‘자연적 사실’로서의 희소성과는 무관하게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는 제도화된 상호작용 과정” 또는 ‘인간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 수단을 조달하는 행위’라고 하는 실제적 경제의 정의가 나타난다. 《인간의 살림살이》란 말은 바로 이런 실제적 의미의 경제를 가리키고 있다. 폴라니는 이 실제적 의미의 경제야말로 보편적이라는 것과, 형식적 의미의 경제란 시장경제에 특수한 것일 뿐임을, 두 의미가 결합된 것은 우연에 불과하다고 역설한다.

폴라니는 실제적 경제를 떠받치는 제도화 그리고 상호작용 과정, 이 둘의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그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따른 물질적 수단의 상태 변화를 위치 변화(changes of position)와 소지자의 변화(changes of hands)라는 두 측면에서 파악한다. 경제과정의 이 두 측면은 위치 이동(locational movement)과 전유 이동(appropriational movement)으로 불린다. 이 둘은 같이 또는 따로 진행될 수 있다. 위치 이동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수송과 같은 물(物)의 공간적 이동과 함께 생산 활동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폴라니는 생산을, “소비 단계를 향한 물질적 수단의 서열 상승”으로 보는데 이 생각은 칼 멩거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수렵, 원정과 침략, 벌채와 관개, 국제적인 해운·철도·항공 수송이 모두 위치 이동에 포함된다. 다른 한편, 전유 이동은 소지자의 변화를 가리킨다. 전유는 원래는 법률적 소유의 취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폴라니는 베버로부터 전유 개념을 가져와서 물리적 대상, 권리, 위신, 여러 유리한 “기회” 등 경제적 효능을 제공하는 일체의 것에 대한 실질적 취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하여 경영과 관리, 재화의 유통, 소득 분배, 공납과 과세 등을 모두 전유의 분야에 포함시키면서 전유의 권리와 의무가 결정되는 방식을 탐색한다.¹⁵⁾ 그러면서 폴라니는 쌍방향의 전유 이동인 ‘거래’와 일방적 강제인 ‘처분’을 구분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화란 위치이동과 전유이동으로 구성되는 경제과정에 일정한 질서를, 즉

15) 피어슨(Pearson 1977, xxxii)은 ‘전유 권력의 사회적 조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통일성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간의 살림살이》에서 말리노프스키, 투른발트 등 인류학자의 성과에 기대고 있는 이 부분은 《거대한 전환》의 논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통합 형태와 그 지지 구조로서 교환 - 시장과 별개로 호혜 - 대칭성, 재분배 - 중심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점들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폴라니는 통합 형태로서 호혜를 말할 때 단지 인류학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우애(philía)의 의미로도 풀이한다. 그럴 때 그리스 폴리스 공동체가 보여주는 우애의 의미가 과연 멜라네시아 트로브리안드 군도의 쿨라 교역이 보여주는 호혜의 의미와 같은 것일지 검토가 필요한데 폴라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별달리 언급하지 않는다. 둘째, 가정 경제에 대한 것인데 이 통합형태에 대한 폴라니의 생각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가정 경제는 《거대한 전환》에서는 재분배와 별개의 형태로 제시되었던 반면, 《인간의 살림살이》 그리고 《초기제국의 교역과 시장》에서는 재분배의 일종으로 바뀌었다.¹⁶⁾ 셋째, 교환이 시장체계의 지지기반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조작적 교환(단순한 위치상의 이동), 결정적 교환(고정비율에 따른 소유권이동), 그리고 통합적 교환(협상비율에 따른 소유권 이동)으로 세분하고 있다. 넷째, 폴라니는 경제적 제도와 비경제적 제도를 훨씬 명확히 구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착근(embeddedness)의 의미도 단일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 활동이 비경제적 사회 관계에 편입된다는 의미의 착근성과 경제적 제도를 통해 조직된다는 의미의 착근성을 함께 보면서 그것들의 의미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¹⁷⁾

그런데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회적 인간들이 제도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적 수단을 얻고 이용하려면 물질적 생산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경제의 역사이고 현대 시장자본주의의 역사다. 공동체 모두를 위한 물질적 생산은 그것을 가로막는 구조적 권력과 대면하게 된다. 이는 2008년 과잉거품 축적 끝에 위기의 세계화를 초래한 미국식 금융주도 자본주의 현상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므

16) 그렇지만 또 Polanyi (1966)에서는 가정경제를 재분배와 별도로 구분한다.

17) 폴라니의 경제학에서 “제도화된 과정으로서의 경제”라는 새로운 이론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착근”이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홍기빈 2009, 638-639). 그러나 이는 적절한 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착근이라는 말을 제거하면, 사회 속에서 경제의 위치를 최고 화두로 삼고 사회관계의 그물망 및 사회적 인간에 방점을 찍는 폴라니의 사회적 제도경제학과 주류 효율지향 제도경제학의 차이가 흐릿해 질 위험마저 있다. 착근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이중적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그 중요성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로 실제적 경제란 이런 거품 축적경제와 대조되는 실질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조하고 그것을 공동체에 제공하는 ‘물질적’ 경제이며, 따라서 자본의 소유권과 영리추구 활동도 이 ‘물질적 경제’를 위해 헌신해야만 한다. 폴라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들(현실주의) 사상가들은 ‘경제적’의 실제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들은 경제를 영리보다는 산업과, 허례(ceremonialism)보다는 기술과, 소유권(titles to property)보다는 생산수단과, 금융보다는 생산적 자본과, 자본보다는 자본재와 동일시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경제를 시장적 형태나 시장의 용어보다 경제적 실체와 동일시했다”(Polanyi 1977, 6).

“맹거가 개척한 가격이론의 빛나는 엄청난 성취 덕분에 ‘경제적’의 새로운 경제화(economizing) 의미 또는 형식적 의미가 유일한 의미로 되고, 더 전통적이지만 얼핏 평범해 보이는 물질성(materiality)의 의미, 반드시 희소성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의미는 학문적 지위를 잃고 결국 잊혀졌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이 새로운 의미위에 그 토대가 세워졌지만, 동시에 오래된 물질적 또는 실제적 의미는 사람들의 의식에서 지워져서 경제사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잃었다”(Polanyi 1977, 24).

여기서 폴라니는 ‘실체적’의 의미를 희소성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물질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산업·기술·생산수단·생산적 자본 그리고 자본재를 실제적 의미의 카테고리로 간주하고, 이를 영리·허례·소유권·금융 그리고 자본 등 형식적 의미의 카테고리와 대립시키고 있다. 이런 대립으로부터 우리는 폴라니에서 ‘경제적’의 실제적 의미가 물질적 가치 생산에 대한 헌신(commitment)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적 경제학의 논리위에 설 때 소유권, 영리 활동, 금융 활동, 자본의 권리 등은 사회적 필요와 이용을 위한 물질적 생산의 기여 또는 기능을 수행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런 기여와 헌신에서 유리된 ‘기능 없는 소유’(functionless property), 고삐 풀린 자본의 자유에 우선적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가능하다. 소유권 및 자본권에 대한 폴라니의 이 비판적 생각을 노동, 토지, 화폐의 ‘허구적 상품화’에 대한 그의 비판과 함께 묶어 보면, 시장사회 및 경제문명사에 대한 실제적 경제학의 비판적 잠재력은 한층 강력함을 갖

추게 된다. 호혜·재분배·교환의 유형을 제시한 폴라니의 사회통합론의 바탕에도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¹⁸⁾

18) 폴라니가 말한 ‘현실주의 사상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실제적 경제를 공동체 모두를 위한 물질적 경제로 보는 폴라니의 생각은 그 이전 베블런 (Veblen 1904)이 부재소유(absentee ownership)주도의 영리활동과 산업 활동간의 갈등에 대해 말한 견해와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3. 비시장경제의 역사

폴라니가 새롭게 구축한 실체적 경제학은 비시장경제와 시장경제 모두를 분석해 낼 수 있는 ‘광의의 경제학’ 틀이라 할 수 있다. 실체적 경제학이 《인간의 살림살이》에 수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근대 비 시장 경제에만 적용되는 이론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폴라니가 더 일찍 이 이론틀을 수립했다라면 《거대한 전환》의 서술도 다소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실체적 경제학의 이론틀 위에서 폴라니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 이전의 비시장경제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실 《거대한 전환》에 비해 《인간의 살림살이》의 구체적 내용을 잘 따라가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낯선 이야기도 많고 자질구레하게 보이는 옛 이야기도 적지 않다. 폴라니가 <저자 서문>에서 들려주는 다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다.

“초기 수천 년 동안 인간이 겪은 삶의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견해가 우리 앞에 떠오른다. 우리 세대에 고유하고 숙명적으로 보이는 갈림길 - 자유 대 관료제, 계획 방식 대 시장 방식 - 이 역사에서 반복되는 인간적 상황의 논제 변형태로 인식된다. ... 교역자의 개인적 주도권을 정부의 교역 관리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기원전 2세기 초에 이미 앗시리아의 지배자들이 추구했던 목표였다. 그리고 개별 교역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식민지 교역방식이 세심한 장치를 고안했던 것으로 보아, 그 조화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른바 동부 소아시아의 ‘가파도키아’ 교역식민도시에서는 가격형성 시장이 없었으며, 고정 가격에 따라 위험 부담이 없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때 교역자의 이익은 중개수수료에서 나왔다. 그렇지만 법치와 교역자 개인의 자유는 놀라울 정도로 보장되었다. 마찬가지로 경제계획을 시장의 요구와 조화시키는 방법은 기원전 5세기의 민주정 아티카나 그로부터 2천년 후 문자가 없던 서아프리카의 흑인왕국 다호메이와 같은 상이한 공동체에서도 발견되었다. ... 비록 우리가 사는 근대세계는 인간의 살림살이라는 견지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젊을지 모르지만, 자유와 집권, 자발성과 계획성이라는 인류의 커다란 문

제는 분명히 우리의 예상보다 더 영속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Polanyi 1977, xl~xli)

여기서 흥미롭게도 폴라니는 지난 날 비 시장 경제 역사를 살았던 인간들의 핵심 화두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 인류가 씨름하고 있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문제, 즉 자유와 집권, 자발성과 계획성, 또는 개인적 자유와 공동체의 균형 내지 조화를 도모하는 문제였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조화로운 균형점을 잘 찾았던 사회와 문명은 흥했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망했다는 교훈을 던진다. 적절한 공동체적 규제가 오히려 개인의 자유도 보장하고 연대를 확보하는 열쇠였다는 것이 바로 폴라니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다. 그러므로 실체적 경제학에 근간하여 비 시장 경제 역사의 문으로 들어간다 함은 곧 고삐 풀린 시장의 정신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근대경제는 미개하고 근대시장 경제는 문명이라는 뿌리 깊은 진화론적 이분법의 눈을 탈피하는 것이다. 스미스나 하이에크의 눈을 도려내고 경제와 사회, 시장과 사회의 변증법 또는 이중 운동론으로 비 시장 경제의 역사, 그 다양성과 흥망성쇠를 읽어 내는 것이다. 폴라니는 그럴 때 지나간 과거 ‘인간의 살림살이’ 문제가 바로 현재 우리들의 살림살이 문제이고 나아가 내일의 전망과 닿아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살림살이》의 비 시장 경제 역사편의 첫 부분에서 폴라니는 부족사회에서 고대사회로 이행하면서 경제적 거래가 출현하는 문제를 다룬다. 제4장에서 7장에 걸쳐 있는 이 논의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바로 경제적 거래 및 개인적 자유라는 축과 공동체적 연대 및 정의라는 축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원시부족사회에서 경제는 자립적 영역으로 분리되지 못한 채 사회에 착근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통합의 지배적 형태란 상호성이었다. 그런데 경제적 거래와 개인적 자유의 출현은 이 원시적인 사회적 연대성을 깨트리는 분열 및 불안정 효과를 낳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태의 한 가지 측면이다. 의외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폴라니는 독자적인 경제적 거래 출현의 해방적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고유한 경제적 거래의 출현은 개인들에게 사회에서 이용가능한 경제적 수단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그리하여 공동체 전체에 걸쳐 거의 무한한 물질적 진보의 가능성을 열수 있도록 할 것이다”(Polanyi 1977, 59).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기되어야 할 문제는 경제적 거래와 개인적 자유의 물질을 ‘반동적

으로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새 단계에서 한편으로 경제적 거래·자유,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적 연대·정의간의 조화 또는 반성적 균형을 어떻게 새롭게 수립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폴라니에 따르면, 그것에 대한 해법으로 다양한 역사적 경로가 출현하고 서로 경합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유 이동의 대표적 두 경로로서, 소농민사회의 거래적 경로(시장형성의 경로)와 관개형 제국의 처분적 경로가 존재했다.

그러면 경제적 거래와 공동체적 연대가 긴장을 내포하면서 서로 접합되는 구체적 방식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 내부를 더 들여야 보아야 한다. 경제적 거래의 출현 문제에 이어, 폴라니는 시장경제의 삼인조(triad)라고 말해지는 교역, 화폐, 시장이 제도화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형식적 경제학 또는 자기조정 시장론이 시장 일반과 가격 기구 시장을 동일시하고 교역, 화폐, 시장을 분리불가분한 통합체로 취급하는 생각의 대척점에 서서 폴라니는 자신의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한다. 교역, 화폐, 시장은 각기 별개의 기원을 갖는다는 것, 그 삼인조는 모두 대외적 발전이 우선했고 공동체 내부적 발전과 대외적 발전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시장경제의 삼인조는 호혜, 재분배와 같은 비시장경제적 방식에 의해 통합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다음, 폴라니는 교역, 화폐, 시장 각각에 대해 이상 세 가지 명제를 자세히 검토한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먼저, 교역, 화폐, 시장의 삼인조가 결합되는 방식이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합체가 결국 현대 시장경제로 진화할 운명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목적론적 함정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폴라니가 시장을 “시장요소”라고 부르는 특정한 제도적 특성들의 결합체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화폐론에 대한 것이다. 폴라니는 화폐를 의미론적 체계로 파악한다. 즉 언어, 문자, 도량형과 유사한 하나의 상징체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화폐의 다양한 용도들이 독립적으로 발생했으며, 지불 용도, 가치 저장 용도, 가치 기준 용도가 교환 수단보다 선행했다고 본다. 그리하여 시장사회의 ‘전(全)목적 화폐’와 달리 고대 비시장사회의 화폐를 ‘특정목적 화폐’라고 부른다.¹⁹⁾

《인간의 살림살이》의 제 2부 그리스편은 이 글의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편집·출판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던 부분이다. 편집 체계로 본다면 그리스편은 분명히

19) 폴라니는 화폐론을 실체적 경제학의 내용 속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검토의 여지를 남긴다.

이질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폴라니가 주도한 공동 연구 《초기 제국의 교역과 시장》(1957)에서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경제의 발견”이라는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또 앞서 보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베버, 멩거와 더불어 폴라니 실체적 경제학의 삼대 원천이기도 했다. 그리고 《인간의 살림살이》 이후 최후의 폴라니는 산업 문명에서 좋은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하는 화두를 붙잡고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와 만난다.²⁰⁾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편을 보면, 비시장경제의 내부 통합과 분열을 바라보는 폴라니의 생각이 한층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그의 실체적 경제학에서 새로운 이론적 요소도 그리스편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폴라니에 따르면 고대 시기는 교환형태와 재분배형태의 결합이 지역에 따라 교대로 어느 한 쪽이 우위를 차지하곤 했는데, 그리스는 이 두 유형의 경제를 그 최고 형태까지 발전시킨 사례다. 그런데 그리스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은 폴라니가 민주파 페리클레스와 과두파 키몬의 대립에 대해 쓰고 있는 대목이다. 폴라니는 아테네 경제를 세부분, 즉 영지적 오이코스의 재분배, 국가적 재분배, 그리고 시장 교환간의 접합 및 갈등으로 바라보면서 민주파와 과두파의 계급 갈등을 이 세 유형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하고 있다. 그는 페리클레스와 키몬(Kimon)²¹⁾ 간의 갈등을 재분배의 두 중심인 영지적 오이코스과 민주적 폴리스 사이의 대립으로 파악한다. 폴라니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부자에 의한 공중의 매수를 막기 위해 물질적 안전장치를 필요로 했다. 유일한 효과적 안전장치는 배심원이 되거나 인민집회에서 투표를 하고 평의회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민중을, 부자가 자신의 힘으로 부양하지 못하게 해두는 일이었다”(Polanyi 1977, 172). 그에 따르면 폴리스를 통한 민주적 재분배 - 폴라니는 이것이 지배적이었다고 본다 - 와 안정된 곡물 조달을 위한 곡물시장의 관리 - 이는 대외적 통제를 포함한다 - 가 결합되고 이를 통해 폴리스의 참여민주주의와 아고라의 착근된 시장이 상호 선순환을 이룬 것이 페리클레스가 이끄는 민주 아테네 제국의 성공의 열쇠였다.

그리스편의 이 서술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첫째, 폴라니는 고전기 아테네 민주정이 비록 노예제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이는 베버

20) 若森みどり (2011, 241-246)를 보라.

21) 마라톤 전투의 영웅인 밀티아데스(Miltides)의 아들이며, 페리클레스의 정적이었다.

를 비롯해 아테네 정치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많은 논자들의 견해와 대비된다. 폴라니는 지속가능한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짚고 있다. 먹고 사는 살림살이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는 민주도, 참여도 지속불가능하다. 자유시민의 참여민주주의는 탈규제 시장경제가 아니라 물질적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에 착근된 시장과 보완재다. 폴라니는 사실상 시장이 민주를 꺾는 이른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 아니라, 착근된 시장과 그것과 결합된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했다. 둘째, 《거대한 전환》 이래 일관된, 폴라니 사회경제학의 핵심 화두는 사회적 통합양식이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논의 수준에서는 지배, 피지배의 분열이라든가 민주정치와 전제정치의 구분문제는 별반 중시되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인간의 살림살이》 그리스편에서는 민주적 재분배와 영지적 재분배를 준별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해 사회통합의 문제들에 정치·경제적 갈등의 문제를 도입하고 있다. 세째, 폴라니는 이전까지 시장의 분열·불안정 효과와 사적 소유권 및 통제권의 지배 효과를 확연히 구분하지 않은채 전자를 중시해 왔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지적 가정경제라는 소유 통제 형태가 발휘하는 보수적 지배력과 효과를 문제 삼는다. 이는 《거대한 전환》에서는 물론, 《인간의 살림살이》 제1부에서도 잘 볼 수 없었던 대목이다.

4. 이론적 공백과 미완의 과제

폴라니는 경제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자신의 중심 화두로 세웠다. 그는 우리 시대의 지배적 통념인 ‘자기조정 시장’의 환상을 비판하고 고삐 풀린 탈규제시장과 경제, 그기에 포획된 사회 전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시장인간’적 삶을 사회적 자유와 연대에 기반해서 제 자리에 가져다 놓고자 했다. 그는 《거대한 전환》 이후 고심 끝에 실체적 경제학의 체계를 구성하고 경제문명사의 대륙으로 나아갔다. 폴라니의 실체적 경제학은 사회경제학일뿐더러 생태적 ‘인류 경제학’(anthropological economics)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론적, 역사적 작업에서 소중한 유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문제점도 없지 않으며 여전히 미완으로 열려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과 관련해 아래에서 몇 가지 지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²²⁾

첫째, 폴라니는 근대 시장체제가 보편적이고 자연적이라는 지배적 편견과 대결하면서 오히려 정작 보편적인 것은 호혜, 재분배, 가정경제 등 비시장적인 경제통합 방식임을 보여 주고자 했다. 그렇지만 통합에 초점을 두다 보니 권력, 지배, 계급, 착취 등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물론 폴라니가 이들 문제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연구 전략상 그렇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거대한 전환》에서 재분배원리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폴라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설명들에서 동질적 사회와 계층화된 사회, 즉 사회가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사회들과 지배자, 피지배자로 갈려 있는 사회들 사이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구별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노예와 주인의 상대적 지위는 일부 수렵 부족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하늘 땅 만큼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두 사회 안에서 개인들이 재분배에 참여하는 동기도 대단히 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경제체제를 조직하는 원리는 동일하다”(Polanyi 1944/2009, 국역 195).

22) 폴라니의 저작에 대한 중요 논쟁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근의 대표적 저작으로는 Dale (2010)을 참고할 수 있다.

또 폴라니는 가정경제의 원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도 차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는 여기에서 관심사가 아니다. … 그 집단의 내부 조직의 성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로마의 파밀리아에서처럼 전제적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남슬라브족의 자드루가처럼 민주적일 수도 있다. 카롤링 왕조시절 프랑크 왕국 호족들의 거대한 지배지만 큼 클 수도 있고, 서유럽의 평균적 농민의 보유지처럼 작을 수도 있다(같은 책, 196-197).

《인간의 살림살이》에 와서 폴라니는 실제적 경제학을 수립하는 중요한 이론적 진전을 이루었다. 실제적 경제학에서 그는 베버에서 유래하는 ‘전유’라는 중요한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는 당연히 분배와 재분배상의 갈등을 내포한다. 그리고 폴라니는 물질적 생산의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규제받지 않는 소유권의 행사가 물질적 생산이라는 공동체의 과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라니의 실제적 경제학은 여전히 중요한 이론적 문제를 미해결상태로 남기고 있다. 광의의 전유권(rights)중에서도 생산수단의 통제 및 처분권(power of control and disposal)에 대해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물질적 생산과 전유는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고 분리되는지, 생산수단의 통제 및 처분권에 의해 규정되는 생산양식과 노동 양식은 어떠한지 등의 문제에 대한 분석은 매우 미약하다²³⁾. 이 문제와 관련하여 헬퍼린 Halperin (1984; 1994, 62-63)은 폴라니의 실제적 경제학을 마르크스의 생산양식론과 비교하면서 그 핵심 논리구조에서 폴라니가 생산측면은 위치이동에, 분배 측면은 전유이동에 배속시키는 이분법에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그 때문에 생산의 전유적 측면과 분배의 위치적 측면이 실제적 경제학의 구도에서 제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구드맨 (Gudeman 2001, 17, 80-86 ; 2008, 40)에 따르면 공동체의 정치경제학은 우선적으로 구성원의 공유이해를 낳는 물질적 ‘토대’(base) 또는 공유자산(common)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유지하고 할당하는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호혜는 토대를 분배하거나 다른 공동체와 관계 맺을 때 나타나는 통합 형태이며 그 때문에

23) Swedberg (2011, 69-70)는 베버의 경우조차 이 부분에서 상당한 공백이 있다고 지적한다.

호혜(reciprocity)이전에 먼저 토대(base)를 살펴야 한다. 구드맨은 그런 관점에서 폴라니의 사회통합 형태론에는 바로 이 토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또 폴라니의 통합 형태론이 가정경제를 적절히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혼란을 보이는 것도 교환양식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헬퍼린과 구드맨의 비판은 분명히 폴라니 실체적 경제학이 안고 있는 약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며 설득력을 가진다. 그리고 폴라니가 베버에 대해 형식적 경제학을 우위에 두고 있다고 비판한 점은 매우 적절하다고 해도, 베버의 《사회경제사》(1924/1987)같은 저작이 전유양식, 지배양식, 생산 - 관리 및 노동 - 분업의 양식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이론틀과 역사적 분석을 보여 주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 폴라니는 베버보다 뒤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 만약 우리가 경제의 문명사에서 권력, 지배, 착취가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생산 수단(전통사회에서는 토지 또는 토지에 맞먹는 중요 물자)의 소유양식과 생산 양식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전통사회에서 공동체의 통합 방식 또는 ‘공’(公)이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폴라니의 호혜, 재분배, 시장의 통합 형태론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 논의는 단지 시장의 사회적 착근성 뿐만 아니라 반드시 ‘소유의 사회적 착근성’(social embeddedness of property)의 문제, 법적 소유를 넘어선 실질적 소유와 통제를 둘러싼 계급갈등의 문제, 소유와 사용의 조합 및 그 다양한 진화 경로의 문제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²⁴⁾ 또 당연히 그것은 전통사회에서 소유 및 시장의 사회적 착근 대 탈착근(탈규제)간의 ‘이중운동’의 동학을 밝혀야 한다.²⁵⁾ 우리는 폴라니의 실체적 경제학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이런 문제들이 경제의 문명사에 대해 광범한 새 연구 지평을 여는 것이며 이미 열어 놓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회 통합이란 결코 피지배 세력만이 내세우는 기획은 아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피지배대중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지배 세력의 헤게모니 기획 또는 ‘수동

24)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로는 Hann (1998), 三浦 撤外 (2004)를 들 수 있다. 앞의 연구는 동서양 전체에 걸쳐 있으며 인류학의 현재적 의미를 보다 강조한다. 뒤의 연구는 중국, 동남아, 중동의 세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한국 전통사회 연구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宮嶋博史(2013)을 참고하라.

25)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함께 공유한 역사의 자연사적 진화론을 해체시킨 폴라니의 정신을 계승하되 그의 경제문명사론의 비판적 재구성을 추구하는 이 문제들에 따르면 배타적 사회적 소유권에 기반한 영미식 자유주의적 시장자본주의 형태는 자연적, 필연적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다양한 쟁투적 가능성을 내포한 이중운동 동학의 한 가지 역사적 경로로 인식될 수 있다.

혁명'(그람씨) 형태가 될 수도 있다.²⁶⁾ 사회통합은 앞서 《인간의 살림살이》 2부 그리스편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파의 기획(페리클레스)일 수도 있지만 과두파의 기획(키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폴라니가 말하는 '사회적 착근'이라는 개념도, 이중 운동이라는 개념도 더 섬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지배 권력 및 기득권 세력의 횡포를 사회적,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규율하는 대항력의 존재, 그 힘에 의한 강제와 견제력의 제도화라는 내용을 내포해야 한다. 우리가 《인간의 살림살이》의 2부 그리스편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다름 아니라 거기서 폴라니가 이러한 이론적, 분석적 방향으로 발을 내디뎠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폴라니가 사회에 착근된 시장과 탈착근된 시장을 과대하게 이분법적으로 대비시켰다는 것은 일찍이 그라노베터(Granovetter)의 '과잉사회화' 지적 이래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착근'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들이 진전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²⁷⁾ 그런데 폴라니에서 사회라는 개념은 인간의 자유와 연대성이 상생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관계적 실재(reality)를 가리킨다. 그의 경우, 사회통합이란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자유의 신장과 공동체적 연대성간에 조화가 달성된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폴라니는 이런 의미의 사회적 통합을 염두에 두면서 시장사회를 비판하고 그것과 비교해 이전의 전통사회 그리고 대안적 사회주의에 대해 언급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인간의 역사적 삶에서 그런 조화 또는 균형이란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도전적 과제다. 특히 오늘날 후기 근대에는 '개인화' 또는 '성찰적 근대화'의 경향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 (Beck 1992/2006). 이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진화를 위해서도 개인적 자율성과 공동체적 연대성간의 긴장 나아가 갈등을 어떻게 새롭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도전으로 제기되어 있다.²⁸⁾ 이 문제는 '공장에서 과학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미래 사회(민주)주의 기획에서 우회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다.

그런데 폴라니는 개인적 자율성과 공동체적 연대성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긴장 또는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 들지 않는다. 이는 시장사회 및 경제, 이를 뒷받침하는 주류 시장경제학과 대결하는 그의 주된 문제의식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지만 폴라니 사

26) Buroway (2003)을 보라.

27) 자세한 것은 Dale (2010, 188-206) 참조.

28) Stjerno (2004)는 연대 이념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경제학의 중요한 공백 지점임은 분명하다. 우리는 《인간의 살림살이》에서 폴라니가 개인적, 사회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근대 이전의 ‘저차적 공동체’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한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잘 찾아볼 수가 없다. 나아가 경제문명사란 단지 과거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폴라니가 사회적 통합의 제형태로 제시한 시장교환, 호혜, 재분배, 가정 경제(오이코스)들 간의 지속가능한 혼합방식에 대해 그리고 고삐 풀린 시장화와 사회적 착근화 사이의 길항적 ‘이중운동’ 동학에 대해서도 우리는 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켜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더불어 사는 연대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목표는 능력이 필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통합과 여러 조정형태의 혼합은 통합 또는 연대를 지속가능케 할, 무임승차와 무책임, 기회주의 등을 극복할 경제·사회적 ‘규율’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 폴라니는 연대, 자유, 정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 사회적 가치들은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제도형태로 육화(肉化)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²⁹⁾ 요컨대 우리는 개인적 자율성과 공동체적 연대성간의 긴장 및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리얼 유토피아’에 대해 더 진전되고 구체화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체 또는 사회가 다른 사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개방적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베버도 말했듯이 대내 도덕과 대외 도덕 간에는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사회는 대내적으로 똘똘 뭉쳐 강한 통합 및 연대성을 가지면서, 대외관계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식으로, 강한 폐쇄성 나아가 적대감조차 보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폴라니의 논의는 불충분하다. 전체적으로 폴라니는 자신의 ‘공동체주의’가 하나의 동질적 목표로 통합된 단힌 공동체주의와는 어떤 질적 차이가 있는지, 공동체주의와 다원주의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하는 물음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공백 지점을 남겼다고 생각된다.

29) 이병천(2009: 284-291)도 참조.

5. 소결

《거대한 전환》의 발간 이후 후기 폴라니의 주요한 관심 분야는 문명사적 견지에서 근대경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글은 《인간의 살림살이》를 중심으로 후기 폴라니가 이론 성취와 그것이 남긴 과제를 살펴보고자 했다. 《인간의 살림살이》는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후기 폴라니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저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폴라니는 일찍이 《거대한 전환》을 쓰면서부터 인간사회에서 경제의 위치를 더 현실적으로 조망하려면 폭넓은 개념적 기초 위에 일반 경제사를 재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인간의 살림살이》는 이 생각을 가장 잘 실천에 옮긴 저작이었다.

《인간의 살림살이》는 경제문명사적 견지에서 전통사회에서 비 시장 경제적인 사회 통합의 방식과 그 다양한 진화 경로들을 보여 준다. 폴라니는 지난 날 비 시장 경제 역사를 살았던 인류의 핵심 화두가 우리 시대 인류가 씨름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개인적 자유와 공동체적 연대간의 균형점을 잘 찾은 사회와 문명은 흥했으며 그러지 못한 경우는 망했다는 교훈을 던진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 면에서도 《인간의 살림살이》는 베버, 멩거, 아리스토텔레스를 삼대 이론적 원천으로 삼아 새롭게 구성한 실체적 비시장경제학의 성취를 보여 준다. 《인간의 살림살이》는 한편으로 전통사회라는 우회로로 진입해, 현대 시장체제를 상대화하고 민주적, 사회적 통제의 대안 비전을 제시하려는 《거대한 전환》의 문제 의식을 계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거대한 전환》에서는 아직 미진했던 폴라니의 실체적 경제학의 보다 진전된 수준을 보여준다.

후기 폴라니의 성취와 수준을 잘 보여주는 대표저작 《인간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권력, 지배, 소유와 통제, 계급, 착취 등을 부차적으로 다루었던 《거대한 전환》의 문제는 《인간의 살림살이》에 와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이는 경험적 서술 뿐만 아니라 실체적 경제학의 이론 구조에서도 발견된다. 또 《인간의 살림살이》에서 폴라니는 개인적 자율성과 공동체적 연대성간의 조화만 말할 뿐, 그들 두 축간에 존재하는 긴장이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과거는 물론, 오늘날 진보적 기획의 재구성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문제다. 그리고 하나의 사회는 대내적으로 강한 통합 및 연대성을 가지면서 대외적으로 강한 폐쇄성

및 적대감을 보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폴라니의 논의는 불충분하다. 폴라니는 자신의 ‘공동체주의’가 동질적 목표로 통합된 닫힌 공동체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공동체주의와 다원주의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하는 물음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공백 지점을 남기고 있다.

II. 사회연대경제

폴라니의 경제 사상에 입각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정체성

II. 사회연대경제

플라니의 경제 사상에 입각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정체성

1. 들어가며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한국에서도 이미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가 되었으며, 비록 보류되기는 했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것의 법적 지위를 확립해주는 법안까지 의회에서 상정된 바가 있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유행되는 한 어휘의 등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사회적 기업의 팽창과 협동 조합의 폭발적 증가 등을 거치면서 분명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의 정의와 정체성은 아직도 일정한 불명료함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지구적으로도 이 말에 있어서 확립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전통에 따라 사용되는 어휘도 또 그 어휘들의 내연과 외포에 있어서도 여러 차이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고 해도,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에서의 이론적 실천적 경험을 아우르면서 그 맥락에 착근된 사회적 경제의 정의가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바꾸어 본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다고 보인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정체성이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실제 활동의 폭과 깊이에도 일정한 제약이 생겨나게 된다.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들은 단순한 영리 기업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가치와 목적의 실현을 스스로의 임무로 내걸고 나타난 것들이며, 여기에서 활동하는 인원들 또한 분명히 그러한 가치를 일정하게 자신의 동기부여로 안고 참여하게 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들이 또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영역 전체가 스스로의 발전 경로를 찾아내어 그것을 만족스럽게 밟아 고유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이러한 조직들 이러한 활동가들이 사회적 경제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정체성에 가장 걸맞은 활동 방식과 사업

형태를 기획하고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답을 줄 수 있는 이론적인 해명이 불비하다면 그들의 활동에 있어서도 분명한 제약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는 사회적 경제의 법적 제도적 위상 확립이라는 중장기적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경제가 보편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고 민주 사회에서의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영역임을 명시적으로 인정받고 그것을 법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그 임무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른 사회 성원들에게 설명하고 그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 및 공공 부문 그리고 영리 기업의 시장 경제 등의 다른 영역 및 제도들과의 경계선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분명한 성장 발전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확한 설명과 해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을 가능케 할 논리와 이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이들에게 협조를 얻어내기 힘들며, 심지어 불필요한 이념적 오해와 적대적인 태도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칼 폴라니의 경제 사상이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앞의 이병천의 글에서도 드러나듯이, 폴라니의 경제 사상은 단순한 형식 논리의 경제학에 갇히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문명과 인류학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인간의 살림살이’를 해명하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경제라는 어휘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열쇳말인 ‘사회’와 ‘경제’라는 것에 대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관념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고유의 논리와 가치 체계를 갖춘 독자적인 영역으로 성립할 수 있는 “좋은 삶”이라는 개념도 폴라니가 제시한 아리스토텔레스 경제 사상의 이해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글은 칼 폴라니의 경제 사상으로부터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해안을 얻기 위하여 세 개의 개념에 집중하도록 한다. 첫째는 ‘살림살이’로서의 경제이며, 둘째는 ‘연대’로서의 사회이며, 셋째는 규범적 기준으로서의 ‘좋은 삶’이다. 우리는 칼 폴라니의 저작 그리고 그의 경제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을 둘러보면서 이 세 개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는 사회적 경제란 기실 사회 연대 경제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이며, “개인과 전체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전면적인 연대를 통하여 조달해 나가는 활동과 영역”이라는 정의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한국의 사회적 경제 진영이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2.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1) 문제의 제기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묘한 긴장을 담고 있다. 이 말을 처음으로 접한 이들 사이에서는 ‘경제면 경제고 사회면 사회지 사회적 경제가 무어란 말이나’는 반응을 아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들의 통념으로 볼 때 경제란 자본을 투자하고 노동과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것을 시장에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실현하여 다시 소비와 자본 축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이다. 그리고 사회란 일정한 목적 - 전체의 공익을 지향할 수도 특정 집단의 특정 이익을 지향할 수도 있다 - 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관계 및 집단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말을 겹쳐 놓으면, 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짜로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위해 모인 경제 조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곧 ‘사회적 경제란 제대로 된 경제 즉 시장 경제와는 다른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의 허점을 보완하거나 그 기능을 보충해주는 쪽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요컨대 사회적 경제라는 말의 ‘경제’란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의미일 뿐 진짜의 경제는 아니며, 그저 시장 경제에서 소외된 이들의 후생을 개선한다든가 방기되고 있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시장 경제’만이 진정한 경제 활동의 장이며 공공 부문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다른 형태의 경제 활동은 제한된 의미에서만 경제 활동이라고 보는 사고방식은 19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이는 필연적으로 방금 말한 대로 시장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데에 보조와 도움이 되는 한계에서만 여타 경제 형태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그 중요성과 존재 이유를 폄하하거나 완전히 부인하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 유일주의’의 사고방식은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지난 30년간 하나의 ‘과학적 상식’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인정의 획득과 법적 제도적 위치 정립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회적 경제의 주체 내부에서조차 일정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고 보인다. 최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과 보수 일각이

보여준 행태에서 잘 드러나듯이, 시장 경제의 일반적 법칙과 범주에 따르지 않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여 법까지 제정하는 것은 특정 세력에 대한 ‘퍼주기’로서 시장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 것이요 심지어 ‘사회주의’라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는 주체들 또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과연 일반 영리 기업에서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경제 활동인가 아닌 가라는 점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없지 않다. 혹자는 그래서 영리 기업과 다르지 않게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반대로 사회적 경제의 활동은 ‘사회적 활동’이므로 영리 기업의 경우와 같이 돈벌이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심지어 국내 유명 대학의 사회과학 대학에서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삼아 열렸던 심포지움에서도 사회적 경제란 사회 단체와 경제 조직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의 ‘혼종 hybrid’이라는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³⁰⁾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경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칼 폴라니가 제기한 ‘실체적 의미의 경제’ 그리고 이를 탐구하기 위한 ‘실체 경제학’은 이러한 혼동을 해명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적합한 경제의 의미를 제공해 준다. 그는 이 똑같은 ‘경제’라는 용어 속에 전혀 독립적이며 역사적으로 상이한 기원을 가진 두 개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희소성 상황에서의 알뜰한 선택’이라는 의미의 경제와 달리 더 오래되고 더 근본적이며 보편적인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것들의 조달’이라는 의미의 경제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폴라니의 논지의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을 취한다. 먼저 이 ‘경제’라는 말이 서양(경제) 사상사에서 어떠한 역사적 변용을 겪어왔는지를 살펴보면서 폴라니보다 먼저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중첩을 지적했던 경제 사상사들 - 칼 멩거와 막스 베버 - 의 주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러한 사유의 흐름을 폴라니가 어떻게 계승하여 ‘실체적 의미의 경제’와 ‘실체 경제학’을 전개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칼 폴라니의 경제 사상이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는 ‘돈벌이’가 아닌 ‘살림살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는 바로 후

3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설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사회적 경제의 혼종성과 다양성”,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영원홀, 2015년 10월 27일.

자의 의미로 이해할 때에 비로소 그 뜻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2) '경제'라는 말의 짧은 역사

(1) '집안 살림'에서 '나라 살림'까지

여러 유럽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경제를 뜻하는 말 economy 는 그리스어 oikonomia 를 어원으로 하는 말이다. 이 그리스어는 다시 '가정 household'을 뜻하는 '오이코스 oikos' 와 '다스리다, 관리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nemein 에서 파생된 '노모스 nomos' 가 결합된 말이다. 즉 2천 몇백년 전 그리스에서 이 말이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그 의미는 '집안 살림'의 의미였다.

약간의 설명을 더 붙이자면, 그리스의 '오이코스'는 단순히 혈연 가족 성원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가축, 전답, 우물, 임야까지를 포함하여 경제적 자급자족이 가능한 단위를 뜻한다. 오이코노미아란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의 경제 단위에다 만족스런 질서를 부여하는 포괄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크세노폰 Xenophon 이 저술한 《가정 관리 oikonomikos》에는 훌륭한 가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지가 세밀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저서는 거의 2천년 후인 르네상스 시기까지도 읽혔던 저서로서, 이렇게 '집안 살림'으로서의 의미로서 '경제'라는 말이 계속 통용이 되었던 것이다. 참고로, 그리스어에서 '돈벌이' 즉 '재물을 획득하는 기술'이라는 말은 '크레마티스티케 chrematistike'라는 별개의 용어를 이루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이코노미아와 크레마티스티케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후자는 전자의 하위 기술임을 역설하기도 했다.³¹⁾

이후 이 '오이코노미아'는 그 의미가 계속 확장되고 또 추상적인 명사가 된다. 훌륭한 가장이 잘 다스리는 집안 살림처럼 잘 다듬어진 질서는 모두 지칭하는 말이 되어, '천상의 질서 celestial economy', '신의 섭리 divine economy' 심지어 '시의 구성 poetic economy'이나 '신체의 작동 bodily economy'의 뜻까지 가지게 된다. 이 와중에서 17세기 초가 되면 '나라

31) 이와 같은 정황에 대해서는 홍기빈,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책세상, 2001) 참조.

살림 political economy'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은 책이 출간되기에 이른다.³²⁾ 프랑스와 영국에서 중세와 르네상스기의 혼란이 종식되고 초기의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군주가 나라 전체의 살림을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나고, 이에 '나라 polis'의 질서를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조어가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경제'라는 말의 시원이다. 개인의 살림살이나 우주의 조화 따위를 뜻하는 말로서가 아니라 세상 전체의 부와 그 생산 및 분배라는 의미를 담은 '경제'라는 말은 사실 이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의 준말이었던 것이다.

(2) 희소성 조건 하에서의 선택으로서의 경제

그런데 산업 혁명을 겪은 후 시장 자본주의가 전면적으로 팽창하던 19세기에 들어오면 이렇게 '나라 살림'이라는 의미와는 사뭇 다른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 먼저 인간 세상에는 인륜, 종교, 정치적 명령 등과 독립하여 순수하게 개개인들의 영리적 이득이라는 경제적 법칙과 논리에 따라서만 작동하는 '경제적 사회 economic society'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18세기의 프랑스 중농주의자들과 영국의 아담 스미스에게서도 보이지만, 특히 경제를 피할 수 없는 필연의 법칙의 전개로 보았던 19세기의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들 - 리카도와 맬서스 등 - 그리고 오로지 이기적인 욕망만이 지배하는 '정신적 동물계'로서의 시민 사회 Bürgerlichegesellschaft 를 발견한 헤겔의 사회철학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³³⁾

이러한 사고방식은 몇몇 사상가들의 저술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먼저 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영국의 경우 경제 정책과 법령의 전환을 가져오기도 한다. 1810년에 영국의 통화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지금주의 논쟁 Bullionist Debate 으로부터 구빈법과 곡물법의 폐지에 관한 논쟁까지, 정치가들과 행정가들의 논의에서는 18세기와 같이

32) 이 책은 1615년에 출간된 몽크레티앙 Antoine de Montchrétien 의 *Traité de l'économie politique* 이다. 하지만 이미 16세기에도 이 말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널리 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33) “그리고 타운센드는 19세기 시대에 속하는 인물로서 이 시대는 리카도와 헤겔이 정반대의 각도에서, 국가의 여러 법률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국가를 스스로의 법칙에 종속시키는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던 시대이다.” 칼 폴라니,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길, 2009) 337쪽.

국민의 복리라든가 군주의 영광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들은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객관적인 필연의 경제 법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 논쟁만이 남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후반 신고전파 경제학이 나타나면서 더욱 강화된다. 새로운 세대의 경제학자들은 경제 현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회적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러한 현상들 배후 혹은 심저에서 작동하는 경제 법칙을 순수한 이론으로 구성하기를 꾀하였다. 이들이 택한 방법은 첫째, 경제적 행동의 주체인 인간들을 놓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회적 역사적 관계와 조건들을 배제하여, 순전히 이기심과 합리적 계산이라는 두 가지의 속성만을 부여한 - 이른바 ‘호모 이코노미쿠스’ - 개인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둘째, 이 개인들에게 욕망의 무한성과 욕망 충족 수단의 희소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부여하고, 그 때 어떠한 개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 지를 사고 실험을 통하여 연역해 내는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은 어느 순간에서나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어내기 위해 합리적인 계산에 입각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며, 이들의 행동이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장에서 서로 얽히면서 벌어지는 사태의 전개가 곧 순수한 과학적 경제 법칙으로 여겨진다. 물론 칼 멩거 Carl Menger 의 경우처럼, 경제란 현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며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관계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학문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경제학이 하나의 과학으로서 성립하려면 그러한 실증적 경험적 층위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의 사고 실험으로 구성된 ‘순수 이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논리였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러한 섬세한 논리는 사라지고, 현실의 인간은 실제로 ‘호모 이코노미쿠스’이며, 현실의 경제는 실제로 그들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빚어지는 법칙으로 작동한다는 믿음이 경제학자들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믿음의 절정으로, 1930년대에 영국 런던경제대학교 London School of Economics 의 라이오넬 로빈스 Lionel Robbins 의 유명한 정의, 즉 경제란 무한한 욕망을 가진 개인이 희소성의 조건 속에서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정의가 나오게 된다. 이 로빈스의 정의는 이후 거의 모든 경제학 교과서의 서두를 장식하면서 현대인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이제 경제는 ‘집안 살림’도 ‘나라 살림’도 아닌 개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최대로 얻기 위해 벌이는 합리적 선택의 행동이 되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역사적 윤리적 정치적 맥락은 무엇인가 또 그러한 조건 속에서 그

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는 모두 경제라는 말과 무관한 것으로 배제되었다. 오로지 시장에서 화폐로 계산되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개인들이 벌이는 행동만이 경제라는 영역을 이루는 것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와 경제학의 이름도 바뀌게 된다. 몇 백년간 사용되던 ‘정치경제’라는 말의 앞부분인 ‘정치’가 떨어지고, 현실의 경제 활동은 그냥 ‘경제 economy’로 불리게 되었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은 마치 물리학 physics 을 방불케하는 ‘경제학 economics’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다.³⁴⁾

이것이 ‘경제’라는 말의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게 된 경위이다. 몇 천년간 인간의 살림살이 그리고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뜻하던 경제라는 말은 19세기를 경과하면서 이제 스스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기적 개인들의 영리적 활동을 뜻하게 된 것이다.

3) 경제라는 두 가지 의미의 구별: 20세기 초의 시도들

이러한 의미의 이동은 많은 이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정신적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조달해야 하며 이것이 경제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은 항상 좋은 것은 부족한 상황이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희소성). 그러므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갖고 싶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부족한 자원과 재화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자원과 재화를 다 숫자로 바꾸어 놓고 또 목적 또한 숫자로 바꾸어 놓아 계산할 수 있어야만 한다 (계산적 합리성). 그리고 이렇게 모든 욕망과 목적 그리고 모든 자원과 재화를 일률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화폐가 되므로, 결국 경제의 문제는 화폐의 절약 즉 이윤 극대화의 문제가 되게 마련이다. 이것이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인간의 경제에 보편적으로 따라오는 피할 수 없는 경제 문제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화폐 경제의 초역사성). 이러한 논

34) 실제로 이것이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마셜 Alfred Marshall 의 의도였다고 한다.

리에 따르다보면, 살림살이로서의 경제란 결국 돈벌이로서의 경제와 동일한 것으로 환원된다는 논리를 피할 수 없다.³⁵⁾

이러한 논리 전개는 시장 자본주의의 현실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는 자명한 진리처럼 보였으며, 이러한 경제라는 용어의 의미 전환 또한 문제삼는 법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 현상에 대한 명민한 관찰자들은 이러한 논리 전개가 전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그 하나하나를 검토해 보면 살림살이로서의 경제와 돈벌이로서의 경제를 두 개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반론을 폈다. 이러한 반론은 마르크스주의, 제도주의, 독일 역사학과, 심지어 신고전과 경제학 내부에서조차 터져나왔다. 그 대표적인 논리들을 짧게 살펴보도록 한다.

(1) 칼 멩거

앞에서 말했듯이 칼 멩거 Carl Menger 는 신고전과 경제학을 창시한 이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경제란 희소성의 조건 아래에서 합리적 개인이 내리는 선택이라는 정의를 가장 명료한 논리로 제시한 이이기도 하다. 그는 1871년에 출간했던 《국민경제학 원리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에서 이러한 경제의 정의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의 원리를 도출하여 소비재의 가격 이론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이른바 ‘고차재’ - 즉 여러 단계의 생산 수단들 혹은 자본재 - 의 가치 결정까지 일관된 논리로 이론을 구성하는 위업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사후인 1923년에 출간된 같은 책의 제 2판의 서두에는 4개의 새로운 장이 추가되어 있다. 이 네 개의 장은 그의 가치 이론의 기초가 된다고 할 인간과 사물 - 즉 경제적 재화 - 의 관계를 보다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4장 3절인 “인간 경제의 기본적 두 방향”에서는 경제라는 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이른바 “기술적 - 경제적 technisch-ökonomisch ” 방향으로서,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직접적 재화들을 찾아내고, 그 재화

35) 신고전과 경제학에서는 그 반대로의 논리적 전환도 종종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모든 금융 현상에 대해 화폐라는 “배일”이 쓰여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물물교환 barter”이라고 보는 전통적 사고방식이다. 즉 살림살이로서의 경제와 돈벌이로서의 경제는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여겨져서 필요할 때에는 둘 중 어느 하나로만 다루어지는 것이다.

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간접적 재화들을 배치하는 일련의 행동을 일컫는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여러 재화들의 배분이 인간의 욕구 충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어느 만큼 부합하도록 배치되어 있느냐는 것이므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전통적인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즉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의미에서의 경제와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재화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욕구 충족이라는 목표를 놓고 부족한 수단을 어떻게 배치하고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멩거는 “절약화 (경제화) 의 방향 sparende (ökonomisierende)³⁶⁾ Richtung”이라고 보아 별개의 두 번째 의미로 놓는다. 이것이 사실상 신고전과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의미에서의 경제라는 정의가 된다. 멩거는 이 두 개의 정의가 서로 별개의 것이며 전혀 다른 기원을 갖는 것이라고 보았다.

“나는 앞의 두 소절에서 서술했던 인간 경제의 두 가지 방향 즉 기술적인 방향과 절약화 (경제화) 의 방향을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부른다. 왜냐면 그 두 방향은 비록 현실의 경제에 있어서는 보통, 아니 거의 예외없이 결부되어 출현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으로서, 서로 독립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인간 경제의 기술적인 방향은 절약화의 방향을 필연적인 전제로 삼는 것도 아니며, 그 방향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강조는 원문)”³⁷⁾

이러한 서술의 중요성은 멩거가 신고전과 경제학에서 내리는 경제의 정의에 있어서 기초적인 전제가 되는 희소성이라는 명제가 반드시 모든 인간의 경제 행위에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데에 있다. 즉 희소성이라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간이 벌이는 절약화의 행동과, 그저 구체적인 욕구 충족을 목표로 여러 생산재들을 구별하고 배치하는 기술적인 행동은 다른 것이기에, 현실의 경제 행동에서는 설령 두 가지의 방향

36) 이는 본래의 독일어 단어라기보다는 영어의 economizing을 옮겨놓은 말이다.

37) Carl Menger,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2. Aufl. mit einem Geleitwort von Richard Schüler, aus dem Nachlaß herausgegeben von Karl MengerI, Wien und Leipzig, 1923. (일역: 『一般理論經濟學』, pp.125-126)

이 섞여서 나타난다고 해도 둘을 철저히 구별하여 분석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2) 막스 베버

베버는 스스로를 칼 멩거가 이끄는 비엔나의 신고전학과와 대척점에 있었던 독일 역사학파의 후계자로 여기고 있었다. 이 두 학파는 19세기 말부터 오래도록 이른바 “방법론 전투 Methodenstreit”라고 불리우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였다. 독일 역사학파는 추상적 이론 전개를 앞세우는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을 배척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경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역사적 경험적 방법을 강조해왔다. 이 학파의 우두머리였던 슈몰러 Gustav von Schmoller 같은 이는 비엔나 신고전학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제를 희소성에서의 선택이라고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 집단이 어떻게 정신적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여왔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법과 제도의 연구에 치중하였다.

베버는 이렇게 경제라는 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의 살림살이라는 사고 방식을 물려받았지만, 비엔나의 신고전학파가 말하는 희소성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이 사실상 시장 자본주의에서의 경제 행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인간의 경제 행위에서의 합리성을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누게 된다. 형식적 합리성이란 “수량적 계산 혹은 회계의 정도를 지칭”하는 것이며, 실질적 합리성이란 “일정한 인간 집단에 재화를 조달하는 것이 궁극적 가치들 wertende Postulate 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경제적 지향을 갖는 사회적 행동에 의해 형성되는 정도”를 말한다. 즉 전자는 욕구의 충족이라는 경제 행위의 목표가 현물이나 화폐를 단위로 계산 가능한 수량으로 표시될 뿐만 아니라 그 계산의 합리성에 따라 배치되는 사고 방식이다. 후자는 목적을 지향하는 합리성으로서, 그 목적은 “윤리적, 정치적, 공리적, 쾌락적, 봉건적, 평등적 등등”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³⁸⁾

이러한 이항대립은 막스 베버가 제시한 합리성의 두 범주 즉 가치 합리성

38)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vol. 1. tr. by G. Roth and C. Wittich,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p.85.

Wertrationalität 과 목적 합리성 Zweckrationalität 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치 합리성이란 어떠한 가치가 왜 소중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합리성이라고 한다면, 목적 합리성은 철저히 목적 - 수단 관계 내에서의 합리성 즉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따지는 합리성이 된다. 즉 베르테르가 자살을 하는 것이 옳으나 틀리냐를 따지는 합리성과, 이왕 자살을 할 것이면 약을 먹을 것인가 권총을 쓸 것인가를 따지는 합리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의 경제 행위에도 두 차원이 있다. 결혼식을 올릴 적에 왜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지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왜 집단에게 중요한 일인지 등을 따지는 합리성이 실질적 합리성이라고 한다면, 웨딩 드레스를 사려면 구체적 액수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따지는 합리성은 형식적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합리성은 서로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요 대부분의 경우는 모순과 긴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탈코트 파슨스가 지적하듯이, 베버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이 두 가지의 경제적 합리성이 긴장과 모순을 일으키는 사회라고 보았다.³⁹⁾ 경상남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공공 병원을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매년 50억의 적자가 난다는 것을 들어 폐쇄하는 것이 옳을까?

전자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살림살이로서의 경제라는 관점과 상통하며, 후자는 희소성 상황에서의 선택이라는 경제의 정의와 상통한다. 베버는 이 둘 중 어느 것이 경제라고 선택하는 대신, 두 가지 모두가 공존하면서 일정한 길항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경제와 사회의 관계를 포착하고자 했다. 사실상 이러한 두 가지 합리성의 형성과 대립이 그의 대저 《경제와 사회》와 《일반사회경제사》에⁴⁰⁾ 나온 자본주의의 역사와 구조에 대한 분석의 중심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식 합리성 특히 그것이 최고도로 발달한 형태인 “자본 회계 Kapitalrechnung”의 합리성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사회의 다른 가치들을 반영한 경제적 합리성인 실질적 합리성을 모두 지배하게 되었느냐가 그 분석을 꿰뚫는 핵심 테마이기 때문이다.

39) Talcott Parsons, “Introduction”, Max Weber, tr. by T. Parsons et. al.,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London: William Hodge and Co., 1947). p.31. 또 Richard Swedberg, Max Weber and the Idea of Economic Sociolog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p.36-39.

40) Max Weber, *General Economic History*, tr. by F. Knight, (New York: Collier, 1961).

(3) 토스타인 베블런

미국 제도주의 경제학의 시조라고 할 토스타인 베블런 Thorstein Veblen 또한 자본주의 경제의 현실은 전혀 이질적인 두 요소인 ‘영리 활동 business’과 ‘산업 industry’가 중첩되어 전자가 후자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임을 강조하였다.⁴¹⁾ 이러한 두 요소의 구별이야말로 그의 경제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심의 개념이며 나아가 이후 제도주의 경제학 전통의 뼈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한 공동체 전체가 그 개인 및 집단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향유하는 활동 전체를 ‘산업’이라고 정의했으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바로 ‘쓸모 serviceability’라고 보았다. 이 산업의 영역을 구성하는 원리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한 공동체 내의 개인과 집단이 어떠한 필요와 욕구를 가지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축적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매개할 수 있는 생산과 분배의 조직과 제도는 어떠한가 등이다. 이러한 ‘산업’은 우리가 살펴본 경제의 두 정의 중에서 보자면 개인과 집단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의 ‘살림살이’에 가깝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반면 그가 구별한 두 번째 영역은 바로 ‘금전적 이득 pecuniary gain’의 수취를 목표로 삼는 ‘영리 활동’이다. 이 활동은 그 본성이나 역사적 기원이나 산업 활동과의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는 전혀 독립적인 것으로서, 오로지 화폐로 계산되는 바의 이득을 늘리기 위한 활동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는 바로 ‘얼마에 팔릴 수 있는가 vendibility’이다. 그런데 이 영리 활동이 산업과 연결되고 나아가 지배하게 된 것은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산업 활동을 벌이는 이들이 모두 스스로의 작업장과 작업 기술 그리고 생산 도구를 소유한 장인들이었지만, 산업 혁명 이후 생산 기술의 집적이 대형의 값비싼 기계의 형태를 띠게 되자 이 기계를 소유한 이들과 직접 생산을 행하는 이들의 구별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에 생산 시설을 사적으로 소유하여 이를 스스로의 이윤의 확장이라는 목표로 운영하는 영리 사업가들이 직접 생산자들을 지배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산업 활동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훗날이 되어 19세기 후반 자본 시장이 발달하게 되자 이러한 영리 활동과 산업의 지배는 더욱 더

41) Thorstein Veblen, *The Theory of Business Enterprise* (London: Transaction Publisher, 1996).

완벽해졌고, 마침내 산업 활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오로지 이런저런 생산 조직의 소유권 - 유가 증권의 형태를 띤다 - 을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부재 소유자들 absentee owners’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²⁾

그는 이러한 두 개의 전혀 이질적인 의미에서의 경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 사실을 간과한 결과 경제학 이론에서나 또 현실의 경제 정책에서나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해가 빚어졌는지를 쉬지 않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리 활동이 산업 활동을 지배하게 되면서 둘 사이에 벌어지는 모순과 갈등이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적 불황 나아가 간헐적 혹은 주기적인 금융 공황까지 일으키게 된다는 점을 핵심적인 이론으로 삼았다.

(4) 아이작 일리치 루빈

혁명 이후의 러시아에서 1920년대까지 가장 영향력있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였던 아이작 일리치 루빈 Isaak Illich Rubin 또한 마르크스 경제학의 이해에 있어서도 경제의 두 가지 측면을 분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볼셰비키 혁명을 겪은 이후의 소련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 마르크스 경제학의 원리에 기대려 했으나 그 해석을 놓고 논쟁이 분분했을 뿐만 아니라 ‘가치’라든가 ‘노동 시간’ 등과 같은 핵심적인 범주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놓고서도 큰 진통을 겪고 있었다.

루빈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생산력과 직접 관련되는 ‘물질적 기술적 과정’과, 생산의 사회적 제관계의 총체가 표현된 ‘사회적 형식’을 분리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⁴³⁾ 그는 마르크스가 제시한 가치의 개념은 오로지 후자에만 해당되는 것 뿐, 전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빵이라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갖는 쓸모 등은 그야말로 ‘물질적 기술적 과정’의 산물로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동일한 기술적 물질적 논리가 적용되는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물질적 기술적 과정을 사회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생겨

42) Thorstein Veblen, *Absentee Ownership: Business Enterprise in Recent Times: The Case of America* (London: Transaction Publisher, 1997).

43) Isaak Illich Rubin, *Essays on Marx's Theory of Value* (Montreal: Black Rose, 1971).

나는 사회적 형식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이 시장에서 화폐와 교환되는 ‘상품’이라는 사회적 형식을 떨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치 그리고 그 배후의 실체가 되는 ‘추상 노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기술적 물질적 과정에서 실제로 어느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들어간 ‘투하 노동 시간’이 아니라, 교환 과정에서 다른 상품과의 등가 관계를 통해 평가되는 ‘추상 노동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가치란 자본주의적 상품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사회적 형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루빈의 주장 또한 우리의 용어로 보자면 개인과 집단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조달해 나가는 ‘살림살이’라는 의미에서의 경제와 희소성의 상황 하에서 절약과 이익이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나타나는 ‘절약화’라는 의미에서의 경제를 구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루빈은 이러한 논리를 통하여 경제를 기술적 물리적 과정으로만 보아 급격하게 중앙 계획 경제를 건설하려는 볼셰비키 일각의 시도에 맞서서, 시장에서의 가격 형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가치 법칙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온건한 경제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⁴⁴⁾

4) 칼 폴라니의 “실질 경제학”

앞으로 설명하겠거니와, 폴라니가 제시한 ‘경제의 두 가지 의미’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감이 있다. 하지만 방금 본 바와 같은 경제사상사의 전개 맥락에서 보자면, 20세기에 들어오자 이렇게 경제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주요한 경제 사상 조류의 여러 중요한 논자들이 지적한 문제였다. 폴라니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경제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그러한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지를 명시적으로 논의한다.

44) 이것이 화근이 되어 30년대로 들어오면 스탈린 정권에 의해 숙청이 되어 생사조차 알 수가 없게 된다.

(1) 경제: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사회 내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쾌하게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인간 활동의 한 유형을 묘사하는 데에 보통 쓰이는 ‘경제적’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두 가지 의미의 복합물이라는 것이다. 이 두 의미는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 첫 번째의 형식적 의미는 ‘경제화 economizing’ 나 ‘알뜰한 economical’에서 볼 수 있듯 목적 - 수단 관계의 논리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들 또한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부양해주는 물질적 환경이 없다면 단 한 순간도 존속할 수 없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이 ‘경제적’이라는 말의 실질적 정의의 기원이 된다. 이 형식적 실질적이라는 두 개의 의미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⁴⁵⁾

앞의 여러 경제 사상가들이 지적하였듯이, 이 두 가지 정의는 전혀 다른 인간의 존재 조건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먼저 폴라니도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을 조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한 욕구는 반드시 물질적일 이유가 없지만, 그 수단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분명히 물질 세계에서 현실을 통해 조달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야말로 경제의 ‘실질적’ 혹은 ‘내용적’ 문제를 이루게 된다. 반면 인간은 희소성의 상황에 서게 되면 반드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때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어떤 목적에 우선성을 부여할 것이며 어떤 수단의 비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논리적 정신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의미에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 ‘형식적’ 경제에 대한 폴라니의 비판

다음으로 폴라니는 라이오넬 로빈스 이후 경제학과 사회과학에서 하나의 과학적 진리

45) Karl Polanyi, *The Livelihood of Man* (London: Academic Press, 1977) p.19.

처럼 굳어져버린, 형식적 의미가 실질적 의미를 압도해버린 경제의 정의를 비판해 들어간다. 만약 정말로 대다수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상정하는 대로 인간의 살림살이를 도모함에 있어서 ‘최소성에서의 선택을 통한 이익 혹은 효용의 극대화’라는 것이 항상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내리기만 하면 살림살이의 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형식적 의미의 경제로 실질적 의미의 경제를 대체해버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폴라니는 두 가지 이유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해 들어간다.

첫째는 로빈스 등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그러한 형식적 의미의 경제는 결코 언제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먼저 사람들이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경제를 쉽게 납득하는 이유는, 진화와 역사 시대의 대부분 동안 인류가 ‘수단의 부족’에 시달려왔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폴라니는 ‘수단의 부족’이라는 것에서 반드시 ‘최소성에서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논리적 필연성은 없음을 강조한다. 수단이 부족하다고 해도, 부족한 수단이 여러 가지이든가 아니면 그 수단으로 충족하려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든가 하는 상황에서만 선택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쌀로 밥을 지을 수도 있고 술을 담글 수도 있다면, 우리는 어느 만큼을 밥 짓는 데에 또 어느 만큼을 술 담그는 데에 쓸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또 배를 채우는 데에 밀가루를 쓸 수도 있고 쌀을 쓸 수도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배를 채울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하지만 입을 넣을 것이라고는 쌀 밖에 없는 상황이며 적당한 수단이 없어서 술 담그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쌀이 ‘충분하든 않든’ 그냥 밥을 지어서 배를 채우는 것 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경우에는 쌀이 많은 적든 ‘최소성 아래에서의 선택과 그를 통한 극대화’ 따위는 벌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폴라니가 지적한 상황이 결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저개발 지역에서 극심한 궁핍에 시달리는 농가라든가 도시에서의 저소득 빈곤층의 경우 실제로 선택의 상황이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월소득 100만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4인 가족의 경우 과연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될까? ‘저녁을 신라면으로 때울지 너구리로 때울지’의 선택이 과연 경제의 중심 문제일까? 극도로 불평등한 소작제가 지배하며 농업 생산성에 대한 투자와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압도적으로 농민의 노동력 착취에 근거하여 영위되는 농촌의 농가에서 수확이 끝난 후 또 수탈이 끝난 후 손에 남은

얼마 되지 않는 곡식을 놓고 할 수 있는 선택은 얼마나 될까? 전기나 수도와 같은 ‘준조제’ 들을 놓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하여 살림살이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형식적 경제학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그 다음으로 폴라니가 지적하는 바, 오히려 선택은 ‘수단의 부족’이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진다. 인간은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단의 희소성과 만족의 극대화 즉 베버의 형식적 합리성만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며, 그 밖에도 윤리, 정치, 미학, 열정 등 무수히 많은 동기에 입각하여 선택을 행한다. 그 때 ‘수단의 부족’이라는 것은 고려 사항의 하나일 뿐이지 인간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는 유일한 법칙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대체 에너지로 이행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는 결코 화석 연료의 부족이라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혼 부부가 비싼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것은 결코 결혼 자금이 풍부해서만은 아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소비와 생산 활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순수한 ‘수단의 부족’ 혹은 ‘화폐적 이익의 계산’에만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폴라니가 보는 바, 이 두 가지의 이유보다 더욱 결정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경제가 유일한 경제의 정의가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 인간의 살림살이라는 의미에서의 경제와의 필연적 연관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폴라니가 지적하는 바, 이러한 ‘희소성 상황에서의 합리적 선택을 통한 만족의 극대화’라는 것은 비단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제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간 행동의 모든 범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형식적’ 정의라는 것이 앞에서 말한대로 “목적 - 수단의 논리적 성격”에서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쟁에 나간 장수는 한정된 병사와 화력을 동원하여 적을 패퇴시키고 큰 전공을 올리기 위해 그 병사와 화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것인지 ‘희소성 아래에서의 선택’을 해야 한다. 한정된 인원과 자금을 동원하여 선거에 나간 정치인도 그러하며,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 수험생도 그러하며, 교회의 입지를 선택해야 하는 개척 목사도 그러하다. 사실 손에 쥘 몇 날의 화투장으로 큰 성적을 올려야 하는 고스톱판이야말로 ‘형식적’ 의미의 경제가 적나라하게 적용되는 장일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이 ‘형식적’ 의미의 경제는 경제 그 자체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3) 폐해 1: 경제주의의 창궐과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제의 정의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경제주의의 오류 *economistic fallacy*”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다. 사람들이 경제주의에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개인도 또 어떤 사회도 먹고 사는 살림살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모든 활동은 이 살림살이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자명한’ 명제에 등장한 ‘경제’란 어디까지나 ‘욕구의 충족을 위해 수단을 조달한다’는 의미 즉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제이지 ‘형식적’ 의미에서의 경제가 아니다. 그런데 전자를 후자로 대체해 버리게 되면, 희소성의 조건에서 합리적 계산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행동이 마치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개인과 집단을 막론하고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초월적 원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 이것이 폴라니가 말하는 바, 근대 세계의 인류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 “경제주의의 오류”이다.

우선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마치 그렇게 개인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 계산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원적 보편적 본성인 듯한 착각을 심어주게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 사회는 그러한 이른바 ‘경제적 합리성’을 조직의 기본적인 원리로 삼는다고 보게 된다.⁴⁶⁾ 물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것을 가장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다는 명제에는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혼자서 밭갈고 낚시하고 집지어 사는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개인은 인간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다. 인간은 항상 자신의 살림살이를 조달함에 있어서 다른 인간들과의 집단 생활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살림살이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져야 하는 성격은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사회 전체가 그 성원들과 전체 집단의 물질적 정신적 필요를 충족할 유형 무형의 수단을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하고 향유하는 전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살림살이의 해결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⁴⁷⁾

46) 예를 들어서 알튀세르 류의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 경제 인류학자들 일부가 그러한 관점을 취한다. Maurice Godelier *Rationality and Irrationality in Economics*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71).

47)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4장 참조.

하지만 폴라니가 보는 바, 사회의 집단 전체가 그러한 실질적 의미의 경제 과정을 조직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경제주의의 오류”를 범하는 이들이 생각하듯 항상 계산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 종교, 미학 등등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다양한 문화적 원리에 따라 그러한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활동이 벌어지도록 제도화해 놓았다는 것이 경제인류학과 경제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제는 항상 사회 안에 “묻어들어 embedded”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째서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가장 보편적인 인간형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 이유는 시장 자본주의 사회가 바로 그러한 형식적 경제의 계산적 합리성을 원리로 하여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도록 조직해 놓은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⁸⁾ 산업 혁명 이후의 근대 사회는 시장 그것도 오로지 시장을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살림살이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리로 하는 “자기 조정 시장 self-regulating market”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안에서 모든 개인들은 오로지 화폐로 계산되는 바의 자기 이익만을 원칙으로 하여 행동을 선택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그 밖의 어떤 사회적 동기 - 정치, 종교, 미학, 자선. ... - 도 여기에 간섭할 수 없도록 조직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는 ‘사회적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인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경제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경제주의적 오류”가 일반화된다. 그리고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 즉 시장 경제 이외의 모든 인간의 경제 활동을 보이지 않게 만들거나 심각하게 왜곡하는 문제이다.

(4) 폐해 2: 시장 자본주의 이외의 인간의 경제가 목살되다

폴라니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칼 멩거의 두 가지 경제의 정의 구별을 높게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시장 자본주의 이외의 인간 사회의 경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한다.⁴⁹⁾ 방금 말한 대로, 형식적 정의의 경제 개념이

48) 칼 폴라니, “낡은 것이 되어버린 우리의 시장적 사고방식”,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홍기빈 편역 (책세상, 2002)

49) Karl Polanyi, “Carl Menger’s Two Meanings of ‘Economic’”, *Studies of Economic Anthropology* 1971.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는 오로지 근대의 시장 자본주의 사회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멩거가 말하는 대로 ‘후진적 backward’ 즉 아직 시장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도 제대로 연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 자본주의와 무관한 고대 및 중세의 여러 경제 또한 연구할 수 없게 된다.

경제의 형식적 정의는 단순히 한 용어의 정의로 멈추지 않는다. 이후 교환, 시장, 화폐 등의 핵심 개념들이 여기에서 도출되며, 이자, 자본, 노동, 지대 등의 다른 개념들도 이렇게 정의된 핵심 개념들에 근거하여 정의된다. 그 결과 현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개념과 범주들은 형식적 의미의 경제가 현실로 제도화되어 있는 근대의 시장 자본주의에서만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등등 넓은 의미의 사회과학자들이 현대 경제학이 이러한 형식적 경제학으로서의 한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대 경제학의 개념과 범주 및 ‘준거틀 frame of reference’을 비 시장 경제에다가 그대로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그러한 개념 및 이론의 사용 때문에 비 시장 경제에 존재하지도 않는 시장 자본주의의 여러 제도와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는 양 부지불식간에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자본 시장’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연구하기도 하고, 13세기 영국 농촌의 ‘노동 시장’에서 ‘임금율’의 변화를 논의하기도 하게 된다. 이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마르크스주의자들 또한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오류이다. 한 예로 폴라니는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사학자 모리스 돕이 노동 시장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17세기 이전의 영국을 놓고 ‘잉여가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격렬히 비판하기도 한다.⁵⁰⁾ 따라서 폴라니는 이러한 비 시장 경제의 연구를 위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경제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경제 개념에 입각하여 개인적 집단적 조달 행위가 제도화되어 있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보다 보편적인 경제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 초석을 닦기도 했다.

50) Karl Polanyi,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by Maurice H. Dobb”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8(2), 1948.

(5) 폐해 3: 인간의 필요와 욕구의 '돈벌이 경제'로의 협소화

하지만 이러한 학문적 연구의 문제를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대단히 절박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장 경제에서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충족되는 고립된 개인의 필요 욕구 이외에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필요 욕구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그 결과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는 당연히 묵살되게 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희소성의 조건 아래에서 경제화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상황은 결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플라니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단적 부족이라는 조건 이외에도 수단의 용도가 여러 가지 있을 것,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그리하여 수단과 목적에 대한 선호의 서열이 분명히 있을 것 등의 조건들이 함께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 정말로 형식적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바와 같은 희소성 아래에서의 선택이라는 상황에 사람이 서게 되는 것은,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경험적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정의의 경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조건들을 어떻게 모두 한 번에 생략해버리고 그러한 정의로 모든 경제적 행동과 상황을 포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

플라니가 볼 때에 그 답은 바로 '화폐'에 있다. 시장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다 되는 세상'에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연중에 경제 활동의 '수단'이라는 것을 현물 단위로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버릇을 갖게 된다. 물론 이들도 다종다기한 목적에 따라 그것을 충족시킬 수단이 다양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시장에 나가서 화폐로 구할 수 있는 상품이 대단히 많은 사회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다양한 수단을 모두 화폐라는 동일한 단위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는 전제를 취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17세기 말부터 시장 경제는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제도가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은 화폐가 되었고, 이로부터 수단의 부족이 생겨나게 되고 이 때문에 어디에서나 선택의 필연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다. 각각의 개인들의 필요욕구는 문화적으로 결정되며 또 그들이 갖는 돈의 크기도 일정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돈이라는 수단으로 모든 필요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항상 부족하다

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다.”⁵¹⁾ 이렇게 수단이 사실상 화폐로 상정되게 되면 수단은 항상 부족한 것이 당연하게 되고, 이에 한정된 돈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 배분해야 하는지는 모든 경제 행위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폴라니는 이러한 생각이 어디까지나 근대의 화폐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돌이키기 힘든 중대한 결과가 하나 나오게 된다. 사람들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기 ‘개인’의 필요와 욕구만을 경제적인 것으로 보게 되며, 그렇게 할 수 없는 필요와 욕구 나아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필요와 욕구는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폴라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인간의 필요와 욕구 가운데에서 오로지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구매함으로써 돈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것들만 문제가 되며, 필요와 욕구라는 것 자체도 고립된 개인들의 필요 및 욕구로 한정당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모든 다양한 필요와 욕구는 아예 인정조차 받지 못하게 되며, 고립된 개인들 말고는 그 어떤 인격체도 인간적 존재로서 용납되지 않게 된다. 여기에서 관건이 되는 것이 인간의 여러 필요와 욕구가 어떤 본성을 갖는가가 아니라, 그저 시장적 상황을 하나의 희소성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 시장적 상황이라는 것들은 원리상 개개인들이 표출하는 필요와 욕구 이외에는 아예 이해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데에다가 여기서 여러 필요와 욕구라는 게 시장에서 조달 가능한 사물들로만 제한되어 있으므로, 인간이 갖는 여러 필요와 욕구 일반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어떤 내용도 가질 수 없게 된다. 필요와 욕구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오로지 시장에서 행동하는 고립된 개인들의 효용적 가치표만 고려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⁵²⁾

51) Karl Polanyi, *The Livelihood of Man*, pp.28-29.

52) *ibid.*

이 문제는 특히 사회적 경제의 해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장 경제란 화폐적 합리성에 입각한 개개인들이 스스로의 자기 이익을 충족시키는 교환으로 조직되는 장이다. 이 장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제 활동은 훌륭하게 성취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연 실질적 의미의 경제 활동도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스스로의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대단히 다종다기하며 그 형태도 물질적 정신적 유형적 무형적인 것으로 걸쳐 있다. 그 중에서 시장에서 상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나머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아가 필요와 욕구의 주체는 그렇게 ‘고립된’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크기와 규모의 인간 집단 또한 필요와 욕구의 주체가 된다. 존 깰브레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소비는 개인의 소비 만이 아니라 ‘공공의 소비 public consumption’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는 각 개개인의 좋은 삶에 있어서 막대한 중요성을 갖는다. 나는 비록 셰익스피어 전집이나 헤겔 전집을 읽을 생각이 없지만, 우리 마을 우리 나라에는 그러한 양서들을 구비한 훌륭한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좋은 질의 물과 공기, 안전하고 친근한 자연 환경 및 사회 환경, 군사 안보 등과 같은 것들 또한 이러한 ‘집단적 필요 욕구’의 빼놓을 수 없는 항목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서 화폐를 지출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는 충족될 수 없고, 국가나 다양한 여러 사회적 결합과 협력에 의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 의미의 경제라는 정의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된 개인과 집단의 필요 및 욕구를 조달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경제의 영역은,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경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6) ‘실질 경제학’을 향하여

플라니가 50년대 이후의 작업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형식 경제학’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 경제학’, 즉 개인 및 집단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향유하는 과정으로서의 경제라는 정의에 입각한 개념과 이론의 ‘준거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질 경제학’이라면 시장 자본주의의 틀에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인간의 경제 활동을 모두 잡아내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데에 걸맞는 개념과 범주를

제공할 수 있을 터였다. 고급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은 항상 집단을 이루어 생활해왔으며, 그 모든 집단은 이러한 ‘살림살이’로서의 경제를 조직하는 일련의 제도와 과정을 갖추어 왔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경제학이 있다면, 고대와 원시 사회 등의 비 시장 경제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도 시장과 그 안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라는 것으로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개인과 집단의 필요와 욕구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실질 경제학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바로 폴라니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5) 칼 폴라니 이후: 미국과 유럽의 제도주의 경제학

이렇게 대안적인 경제의 정의에 입각한 대안적인 경제학의 이론 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완결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칼 폴라니가 1964년 서거한 이후 이러한 ‘실질 경제학’의 전통을 이어 발전시켜온 중요한 흐름을 보아야 한다. 첫째는 미국의 제도주의 경제학이요 둘째는 유럽의 제도주의 경제학 그 중에서도 폴라니와 많은 교감과 공통 분모를 가지고 실질 경제학의 개념을 발전시켜온 칼 윌리엄 캅의 작업이다.

(1) 미국 제도주의 경제학

앞에서 베블런을 언급했던 바 있지만, 베블런 이후 미국 제도주의 경제학이 하나의 유파로 자리잡으면서 형식적 정의의 경제와 경제학을 거부하고 실질적 정의의 경제와 경제학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학파와 연결된 모든 경제학자들의 공통 분모가 되었다. 앨런 그러치 Allan Gruchy 는 이러한 합의를 대표하여 제도주의 경제학을 “사회적 조달을 연구하는 과학 science of social provisioning”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⁵³⁾ 이러한 정의는 미국 제도주의 경제학이 오늘날까지 해 온 작업의 성격을 잘 집약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단순히 시장 경제에서 가격과 수량으로 파악되는 경제 현상들에

53) Allan G. Gruchy, *The Reconstruction of Economics* (New York: Greenwood Press, 1987). pp.4-7.

대한 수리 모델 작업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사회의 관점에서 개인과 집단에게 필요한 것들이 실제로 생산, 분배, 향유되는 과정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고 어떤 성과를 이루는가를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이다. 즉 폴라니가 말한 ‘실질 경제학’을 발전시켜온 프로젝트로서 미국 제도주의 경제학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⁵⁴⁾

(2) 칼 윌리엄 캡과 유럽 제도주의 경제학

뮈르달 Gunnar Myrdal 등은 2차 대전 이후 에이레스 Clarence Ayres 등이 주도하게 된 미국 제도주의 경제학의 흐름에 대해 정서적 이론적으로 이견을 가지고 있었기에,⁵⁵⁾ 그와 미묘하게 다른 결을 가진 유럽 쪽의 고유한 제도주의 경제학 유파를 형성한다. 이 때 뮈르달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캡 Karl William Kapp 은 칼 폴라니의 실질적 경제(학)의 생각을 직접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근거하여 사회적 경제에 직접적인 함의점을 갖는 개념들을 정초하기도 했다.

a. 폴라니와 캡의 관계

캡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여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며 칼 폴라니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캡은 이미 30년대에 박사논문을 쓰던 당시부터 폴라니의 작업을 알고 있었으며, 지적 과학적인 관심사 또한 시장 자본주의 바깥의 사회가 영리기업과 자본주의의 작동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비용과 가치의 문제였다. 그러다가 1954년부터 캡은 폴라니의 “실질” 경제학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54) 이러한 ‘실질 경제학’의 프로그램과 연구 방법의 개요를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William M. Dugger, “Redefining Economics: From Market Allocation to Social Provisioning”, in Charles J. Whalen ed., *Political Economy for the 21st Century: Contemporary Views on the Trend of Economics* (London: Routledge, 2015).

55) 이에 대해서는 Sebastian Berger and Rolf Steppacher, “Editorial Introduction” in K. William Kapp, *The Foundations of Institutional Economics* (London: Routledge, 2011), pp.6-8.

“구체적인 역사적 제도적 조건들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과 그 실제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에 의미를 가지려면 경제학은 ‘실질적’이어야 한다. 즉 인간이 갖는 실제의 여러 필요 그리고 자신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의존하면서 상호작용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K. 폴라니). 이러한 ‘실질적’인 경험적 경제과학은 그 기초적 전제들을 형성함에 있어서 행태 과학에서의 발견들을 활용해야만 한다.”⁵⁶⁾

이는 폴라니가 공식적으로 그의 ‘실질 경제학’의 생각을 공표한 1957년의 저작이 공표되기 이전이었다. 그 이전부터 두 사람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 생각을 공유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⁷⁾

두 사람은 서신을 통하여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칼 멩거의 《국민경제학 원리》 2판의 중요성과 의미, 베블런과 미국 제도주의 경제학의 핵심 등에 대해 견해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많은 공감을 공유한다. 그리하여 캅은 폴라니의 작업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이해하는 바의 베블런 이후의 미국 제도주의 경제학의 전통과도 일치한다는 견해를 폴라니에게 피력한다.

“우리의 작업이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하나로 수렴한다고 저는 항상 느껴왔습니다. 초기 제국들에 나타났던 시장과 교역에 대한 당신의 세밀한 연구와 강조는 사람들이 보통 깨닫는 것 이상으로 베블런의 제도주의 전통과 깊이 닮아 있습니다. 저는 제 새 책에서 당신의 저작을 언급할 것입니다. 특히 형식적 실질적 두 가지를 당신이 구별한 것을 말입니다.” (캅이 폴라니에게 보낸 편지, 1960년 11월 4일)⁵⁸⁾

56) K. W. Kapp, “Economics and the Behavioral Sciences” in John E. Ullmann and Roy Preiswerk ed., *The Humanization of the Social Sciences*, (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5) p.4.

57) 이 문제에 대한 분석으로는 Sebastian Berger, “Karl Polanyi’s and Karl William Kapp’s Substantive Economics: Important Insights from the Kapp-Polanyi Correspondence”, *Review of Social Economy*, 66(3), 2008.

58) op.cit., p.388.

캡은 폴라니와의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폴라니의 사상 뿐만 아니라 칼 멩거의 인간 욕구에 대한 이론 그리고 막스 베버의 실질적 합리성의 개념까지 받아들여 그 자신의 실질 경제학의 이론들을 발전시키며, 이는 폴라니 사후에 이루어진 중요한 실질 경제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소성’이라는 의미에서의 경제에 압도당해 버렸던 옛날부터의 ‘살림살이’로서의 경제의 의미를 되살린 가장 중요한 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본다.

b.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가치

앞에서 보았듯이, 폴라니는 형식적 정의에 몰각되어 실질적 의미의 경제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인간의 욕구와 필요는 오로지 개개인들이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충족할 수 있는 욕구와 필요만 눈에 보이게 될 것이며, ‘사회’와 같은 집단적 주체가 갖는 필요와 욕구는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캡 또한 이와 동일한 관점에 서서 그의 독특한 ‘사회적 비용 social costs’의 개념과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각 경제 주체들이 사회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 받으면서 벌어지는 일들의 효과를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외부성 externalities’의 개념으로 포착한다. 캡은 이러한 방법은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주체를 오로지 개개인들만으로 상정하는 관점에 서있다고 비판한다.⁵⁹⁾ 개개인의 관점을 떠난 사회 전체 차원에서 치러야 할 비용 그리고 사회 전체 차원에서 얻게 되는 편익은 이러한 개념으로 포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사회 전체가 얻거나 치러야 하는 댓가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의 계산에만 의존하는 형식적 경제학이 아니라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리고 조달에 실패하거나 성공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를 분석하는 실질 경제학의 관점에 서야만 한다.

이러한 실질 경제학의 관점에 서서 사회적 비용을 보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영리 기업들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비용’이라는 것을 실제로 시장 자본주의에서 활동하는 영리 조직들의 회계 장부에 투입물로 들어

59) 파레토 최적의 개념에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시도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보라. E. K. 헌트 외, 홍기빈 역,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시대의 창, 2015) 14장.

가는 것들의 화폐적 표현으로만 본다면, 이 기업들이 명시적인 액수로 치르지 않는 비용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에 인간, 자연, 사회가 고스란히 그 비용을 모두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캅은 한걸음 나아가 이 영리 기업이 발생시켜서 사회 전체에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비용을 그의 이론적 분석의 중심적 주제로 삼는다.⁶⁰⁾ 노동자가 실업, 장시간 노동 등을 통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감내해야 하는 비용, 환경 오염으로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 자원 고갈로 발생하는 비용, 과잉 및 중복 설비 투자로 발생하는 비용 등등이 그 예가 된다.

c. 실질적 합리성의 표준: 사회적 최소한

형식 경제학의 사상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리주의 철학이다. 이 철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무차별적인 동일한 것으로 보며, 오로지 그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보아 모두 일정한 수량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있다. 제러미 벤덤의 유명한 어구대로, “시 poetry 에 대한 욕구나 압편에 대한 욕구나” 동일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전제가 있을 때에만 인간의 모든 경제를 일정한 수치로 환원하여 계산적 합리성의 논리로 다루는 조작이 가능해지므로 이는 필수불가결의 전제라고 할 것이다. 모든 욕구를 동일한 수량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그 욕구들 모두를 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만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물론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기호는 모두 다르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또한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마련이므로 결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바의 “가격 투표”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만이 그 각각의 사물에 대한 인간의 욕구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좋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며, 그 각각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된다. 그렇다면 너무나 분명하게 인지되는 사실 하나는 인간의 욕구에는 명백한 서열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칼 멩거는 앞에서 논의한 《국민경제학 원리》 2판의 3장에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두고 마치 재화를 그 직접성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서열을 매겼듯이 똑같이 그 중요성과 긴박성을 기준으

60) K. William Kapp, *The Social Costs of Business Enterprise* (Nottingham: Spokesman, 1978).

로 호흡에 대한 욕구와 같이 생리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여러 다른 차원의 욕구에 이르기 까지 서열을 부여하고 있다.⁶¹⁾

캡은 이러한 멩거의 시도를 발전시켜, 그의 ‘사회적 최소한의 것들 social minima’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을 실질적 합리성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⁶²⁾ 후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인간 누구에게나 우선적으로 또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욕구의 기준을 찾아내고 그 양을 계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최소한’이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경제 계획과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있어서 실질적 합리성을 발휘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이 ‘최소한’에 결코 생리적인 수단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문화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인정의 욕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인간적인 가능성과 욕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인간다운 삶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사회적 최소한’을 시장 가격이라는 계산 단위를 대체할 수 있는 단위로 삼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6) 소결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라는 말의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둘러싼 경제 사상사의 흐름을 칼 폴라니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일별해 보았다. 경제라는 말에는 ‘희소성 아래에서의 합리적 선택을 통한 개인 이익 극대화’라는 형식적 정의와 ‘개인과 집단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실질적 정의가 중첩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각은 형식적 합리성 나아가 자본 회계 합리성에 근거한 ‘돈벌이 경제’라는 활동 영역과 실질적 합리성에 근거한 ‘살림살이 경제’라는 활동 영역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론적 정의에 있어서나 실제의 관행에 있어서나 후자가 훨씬 더 연혁이 오래되고 또 보편성을 띠고 있는 것이지만, 19세기 이후로 전자의 정의와 관행이 후자를 압도하여 보이지 않게 되

61) 이 점에서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이론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1954).

62) K. William Kapp, “Social Economics and Social Welfare Minima” in S. Berger and R. Steppacher ed., *The Foundation of Institutional Economics*.

기에 이르렀다. 이에 19세기 말부터 여러 경제 사상의 유파에서 이러한 흐름에 반대하여 경제의 두 가지 정의와 의미를 밝히는 논자들이 나타났으며, 칼 폴라니는 그러한 맥락에서 그의 ‘형식적 경제(학)’와 ‘실질적 경제(학)’의 구별을 행한 것이다. 이 점에서 폴라니는 아무런 맥락없이 홀로 나타난 인물이라기보다는, 경제 사상사의 내재적 흐름의 한 경향을 명시적으로 대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그의 사후에도 미국과 유럽의 제도주의 경제학 특히 칼 윌리엄 캅의 작업으로 이 ‘실질적 경제학’의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처음에 우리가 문제로 제기했었던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사회적 경제의 ‘경제’는 형식적 합리성/자본 회계 합리성에 근거한 ‘돈벌이 경제’의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개인과 사회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의 조달을 고민하는 ‘살림살이 경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답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이질적인 두 개의 용어를 붙여 놓은 ‘혼종 hybrid’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경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답이다.

앞의 문제 제기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사회적 경제의 ‘경제’라는 말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세간의 생각은 대단히 현실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통념적으로 생각되는 ‘경제적’이란 형식적 정의인 ‘알뜰하게 절약하는 economical’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많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연결된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경제적’이라고 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만 한다. 이 이윤과 그 크기가 말로 그 개인과 단체가 사회 안에서 이룩한 경제적 기여의 증거이자 척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한 이윤 획득의 능력이 있어야만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사회적 경제의 영역 안팎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의 현실적 의미이기도 하다. 즉 어떠한 하나의 아이디어나 기획이 제기될 때 또 그에 기반한 사회적 기업이나 여타 사업이 설립되고 시행될 때에 그 ‘지속가능성’을 묻는다는 것은 곧 정부의 지원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가 재원을 조달해 나갈 수 있는가를 따지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확장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즉 일반적인 영리 기업이 영리 사업을 행하면서 스스로가 축적한 이윤으로 스스로의 자산 가치를 불리면서 계속적으로 확장 - 즉 ‘자본의 확대 재생산’ - 해 나가듯, 개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 나아가 사회적 경제 영역

전체가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러한 문제들이 설정되면, 칼 폴라니가 고대 경제나 비 시장 경제의 연구에 대해 지적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게 된다. 즉 형식적 경제인 시장 자본주의의 개념과 이론들이 마구잡이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화폐적 계산에 입각한 개인 이익 극대화라는 원칙으로 행동한다는 전제에 근거하여 성립된 현대 시장 자본주의의 여러 개념들을 고대 세계에 적용한다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이자 interest’ 수취와 비슷해 보이는 행위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점토판 썩기문자 기록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자. 여기에서 연구자들이 만약 오늘날의 경제학에서 쓰이는 이자의 개념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할 경우, 우선 공급자에 해당하는 화폐 축적자들 즉 초기적 자본가들의 존재가 저절로 가정으로 따라오게 된다. 또 돈을 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이자를 넘는 수익을 올려야만 하는 이들이니 당연히 기업가들 entrepreneurs 로서 상정된다. 그리고 이자율이 화폐 공급과 수요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화폐 시장의 존재 또한 자연스럽게 상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화폐 축적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아 또 돈을 꾸어 더 큰 수익을 내는 행위가 벌어졌던 것으로 보아 여러 상품들 - 여기에는 노동과 토지 등의 자원도 포함될 것이다 - 을 흥정 가격 bargaining price 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크게 발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상정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구자들은 이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와 비슷해 보이는 무언가가 발견되면 바로 이러한 이론들에 맞추어서 해석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폴라니가 보기엔 이는 실제로 존재했던 메소포타미아의 경제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진 그림을 낳게 된다. ‘이자’의 수취는 어디까지나 신전 - 국가가 행했던 정치적 종교적 의미의 거래였으며, 그 ‘이자율’은 종교적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었으며, 노동과 토지는 고사하고 바빌로니아에는 아예 시장터 marketplace 조차 없었다는 것이 폴라니의 소견이었다.⁶³⁾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경제 개념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적용할 경우, 그로 인해 거꾸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폴라니가 지적하는 “경제주의적 오류 economistic fallacy”였다.

63) Karl Polanyi, “Marketless Trading in Hamurabi’s Time” in K. Polanyi et. al. ed., *Trade and Markets in Early Empires* (Chicago: Free Press, 1957). 물론 이는 폴라니의 극단적인 주장으로서, 오늘날의 고대사 연구 진영에서 여러 번 반박된 바 있다. 하지만 폴라니가 논박하려고 했던 입장이 그것으로서 다시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은 아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제주의적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개인과 집단의 좋은 삶에 무엇이 필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실질적 의미의 경제로 정의되어야 할 영역이다.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들, 거기에서 활동하는 개개인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영역 전체에 있어서 ‘돈벌이’는 물론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활동이지만 결코 본질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러한 개인들, 조직들, 영역 전체는 어디까지나 각 단위에서의 개인과 전체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쓰이는 용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존재 이유는 일정한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과 가치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살림살이의 경제’야말로 사회적 경제의 여러 활동의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

그런데 여기에 앞에서 본 것과 같은, 통념적인 형식적 의미의 ‘돈벌이 경제’의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본질적 성격에 중요한 왜곡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회적 경제의 활동은 우선 여느 영리 기업과 다르지 않게 수익의 확보에 맞추어지게 되며, 여기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속성과 측면들은 필연적으로 ‘낯선’ 것으로 여겨지게 되며 (그래서 ‘혼종성’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심지어는 지양 및 척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 전체의 존재 이유에도 큰 혼란이 오게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 경제와 국가/공공 부문의 작동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기능적 보조물로서만 존재하며, 독자적인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게 된다.

이것이 칼 폴라니의 경제 사상 나아가 ‘실질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살림살이로서의 경제’를 강조하는 경제 사상의 전통이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 확립에 큰 함의점을 갖게 되는 이유이다.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과 그 전체 영역의 존재 이유는 ‘돈벌이’가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있다. 막스 베버가 지적하듯

64)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의 의미를 이렇게 개인과 전체 차원에서의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19세기 말 20세기 초 당시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저작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중시조라고 할 비저의 저작을 들 수 있다. Friedrich von Wieser, *Social Economics* (London: Routledge, 2013); *Natural Value* (London: Macmillan and Co., 1893). 비저의 주장은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야말로 이렇게 사회적 경제의 살림살이를 이상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자연적 가치와 일치하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는 Gunnar Myrdal, *Political Elements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y* (London: Routledge, 2002) ch.6.

이 형식적 합리성/자본 회계 합리성에 기초한 ‘돈벌이 경제’의 발전 과정은 곧 시장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와 관행의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돈벌이 경제’의 성립이 개인과 사회의 좋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해 주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 합리성에 기초한 ‘살림살이 경제’의 발전 과정은 곧 개인과 사회의 좋은 삶에 필요하건만 현실에서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조달하는 여러 제도 및 관행의 설립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포함관계를 따지자면 말할 것도 없이 후자가 전자를 포괄하는 훨씬 더 큰 영역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살림살이 경제’라고 하는 큰 집합 안에 ‘돈벌이 경제’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며, 거기에 포괄되지 않는 여집합의 영역, 즉 개인과 집단의 좋은 삶에 꼭 필요하지만 시장 경제로는 조달되지 않고 있는 것을 조달하기 위한 활동의 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보게 되는 것이다.

3. '연대'로서의 사회

1) 문제의 제기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에서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이다. 사회적 경제란 ‘국가/공공 부문도 아니요 영리 기업의 시장 경제도 아닌 제 3부문’이라는 정의가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이를 ‘정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언명일 뿐 ‘무엇이다’라는 언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전통에서는 이러한 ‘제 3부문’의 정의가 널리 통용되어왔지만, 그래서 그 부문의 본질과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해 명쾌한 해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서술하겠으나, 국가/공공 부문과 영리 기업의 시장 경제라는 두 영역은 명시적인 정의가 가능하며 그 경계선도 뚜렷하게 규정할 수가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의에 머문다면, 사회란 그저 그 두 개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residual’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주어질 뿐이다. 이는 단순히 경계선을 설정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적극적인 정의와 정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것에 걸맞는 위상을 법적 제도적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 활동 주체들 또한 의식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란 인간들의 집합이며, 인간들의 관계의 총체이다. 하지만 이 자명한 언술만으로는 그것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대기압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농경 시대 이후로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 조건으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이렇게 자명한 객관적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인간 관계의 총체로서의 인간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이다. 예를 들어 국가/공공 부문이나 시장 경제가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배후지 hinterland로서, 하나의 ‘동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공산주의나 개발 독재 체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사회’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설정된다. 이를 어떻게 다루고 동원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권력 확장 혹은 경제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이 사회적

경제에 적용되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90년대 초 미국과 영국에서 이른바 ‘제 3부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것도 70년대의 국가/공공 부문의 실패, 80년대의 공격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 정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⁶⁵⁾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 경제란 그 자체가 스스로의 고유한 가치와 발전 경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능동적 주체로서 설정되기보다는, 국가/공공 부문과 시장의 편익에 따라 피동적으로 규정되고 재편되는 대상이 될 것이다.

칼 폴라니는 이 ‘사회’의 성격에 대해, ‘인격적 주체로서의 개인들의 자발적이고 총체적인 연대’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동서고금 어느 시대에도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산업 혁명의 발생이라는 근대의 역사적 조건을 배경으로 발생한 절박한 상황의 산물이라고 본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사회의 존재가 단순히 정치적 도덕적 차원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활동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도 주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회 ‘연대’ 경제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라고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⁶⁶⁾ 지지한다고 보인다.

2) 국가, 시장, 사회: 근대의 발전과 사회의 발견

국가, 시장, 사회라는 세 가지 영역의 존재는 모두 유럽인들이 근대에 발견 (혹은 발명) 하게 된 것이었다는 게 폴라니의 관점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보자.

“... 토머스 모어, 마키아벨리, 루터, 칼뱅 등 국가의 발명자들로부터 시작된 한 시대는 그 마지막 인물인 스미스를 이정표로 하여 종결된다. 그리고 타운센드는 19세기 시대에 속하는 인물로서 이 시대는 리카도와 헤겔이 각각 정반대의 각도에서, 국가의 여러 법률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국가를 스스로의 법칙에 종속시키는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던 시대이다.”⁶⁷⁾

65) Ash Amin et. al., *Placing the Social Economy* (London: Routledge, 2002).

66) Peter Utting ed.,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beyond the Fringe* (London: UNRISD, Zed Books, 2015).

67) 칼 폴라니, 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길, 2009) pp.337-338.

이 인용문은 몇 백년에 걸친 근대 유럽 사회의 형성 과정을 대단히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해 본다.

(1) 국가의 발견 혹은 발명

근대 국가의 아이디어는 16세기 이후 유럽 역사의 산물이며, 거기에서 결정적인 이론적 사상적 개념 착상의 역할을 했던 것이 플라니가 열거하는 인물들이다. 유럽에서 중세 때까지의 국가란 군사력을 소지한 다양한 신분의 영주들이 행사하는 다양한 차원의 권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주 본인의 인신 person 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은 14세기 중반 유럽의 인구를 격감시킨 흑사병 black death 이후 중세 사회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면서 부터였다.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을 필두로 왕권이 강화되면서 일정한 영토 territory 전체에 대한 중앙 왕정의 권력과 통치가 강화되는 초기적인 국민국가 national state 의 원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토머스 모어는 장미 전쟁을 거쳐 영국의 왕권을 거머쥐게 된 튜더 왕조 초기에 나타났던 이른바 ‘개혁가들 reformers’ 의 한 사람으로서, 영국 국왕은 전통적인 의례적 의무들에 얽매이기 보다는 과감한 행정 개혁과 법령 발포 등을 통해 영국 전체를 더 생산적 효율적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키아벨리 또한 주지하듯이 군주는 모든 세속적 종교적 규율로부터 자유로운 (훗날의 용어로) 국가 이성 raison d’etat 의 담지자로서 국가 stato 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권력 확장의 논리로 통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후 17세기에 들어서 18세기까지 진행되었던 근대 초기 유럽의 역사적 전개는 국가 권력의 강화였음이 분명하며, 이로서 주권 sovereign 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모범적으로 나타났던 절대주의 왕정은 스스로에게 도전하거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모든 지방 권력들 - 여기에는 봉건적 귀족들도 또 특권과 허가장을 소지한 지방 도시들도 들어간다 - 을 제압하고 대신 중앙의 법령을 전국에 관철시키는 무소불위의 권력체가 된다. 이는 경제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상업 활동과 생산 활동을 둘러싼 여러 중세적 제약과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대신 국가 조세 수입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전국적 시장을 창출하고 대외 수출을 확장하기 위한 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중상주의 mercantilism 의 전통은 한편으로는 상업적 관계를 확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하기도 하는 것이었으니, 그 원칙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권력과 영광’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간 세상 전체는 국가라는 방식을 통해 전일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경제 활동 또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2) 경제의 발견

하지만 시장적 관계가 서유럽 전체 나아가 해상 무역으로까지 확장되게 된 18세기 중엽 이후 이렇게 국가의 행정과 법령으로 인간 세상을 전일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를 가장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내건 집단은 프랑스의 중농주의자들로서, 인간 세상의 경제 영역은 인간의 의지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으로⁶⁸⁾ 운영되는 법이니, 이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행정과 법령으로 억압하거나 조종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아담 스미스를 위시한 스코트랜드의 계몽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이들 또한 같은 목소리로 경제 영역에서 국가가 인위적인 개입과 규제를 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플라니가 여기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점이 있다.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효과적인 행정을 위한 지침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국가주의의 입장을 벗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즉 스미스는 인간 세계의 경제 활동에는 국가가 존중해야 할 법칙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며, 그 법칙으로 국가를 대체하여 인간 세상을 조직하는 대안적인 원리로 삼자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이다. “자본가들의 경제적 이해가 사회 작동의 법칙을 경정한다는 생각은 그의 [스미스의]저술 어디에도 암시조차 없었다.”⁶⁹⁾ 따라서 18세기의 후반이 되도록 근대 초기 유럽인들이 인간 세상의 실체라고 생각했던 것은 국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맹아적이지만 근대적인 주권 개념에 근거한 초기 근대 국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 혁명이 본격화되고 기계제 생산과 시장 자본주의가 팽창하기 시작한 19세기 초의 영국을 필두로 하여 이보다 더욱 급진적인 생각이 나타났다. 인간의 경제 영역이

68) 중농주의자들을 뜻하는 Physicists 란 본래 자연 physis 의 법칙을 존중하는 이들이라는 뜻이다.

69) 《거대한 전환》, p.338.

독자적인 ‘자연의 법칙’에 의해 지배될 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 전체가 그러한 법칙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국가의 법령과 행정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폴라니는 이러한 생각이 최초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옛 구빈법 특히 스펀함랜드 구빈법 Speenhamland Laws을 비판했던 조셉 타운센드 Joseph Townsend 와 그 뒤를 이은 맬서스 Thomas Malthus 의 저작이라고 본다. 산업 혁명과 기계제 생산이 확산되면서 영국의 농촌에는 항시적으로 실업 인구 - 오늘날의 안목으로 보면 ‘산업 예비군’ - 가 넘쳐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 사회의 경제 영역 작동 메커니즘을 알 길이 없었던 당대의 사람들은 이 실업 인구를 ‘빈민’으로 보아 구빈법 체계를 통해 구제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려고 했으며, 그 모든 노력은 실패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 타운센드와 맬서스는 이른바 ‘인구 법칙’과 같은 자연 법칙이 인간 세상의 경제 영역을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주장하였다. 식량의 양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넘는 숫자의 인구는 절멸되는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이것이 시장 경제에서의 노동자 임금과 실업률 나아가 이윤율과 지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패러미터가 된다는 것이 특히 맬서스의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데이비드 리카도의) 주장이었다.⁷⁰⁾ 따라서 이러한 자연 법칙을 어긴 옛날의 구빈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오히려 임금과 고용량이 노동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 인구가 조절되도록 하는 새로운 원칙에 따라 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1834년의 신구빈법으로 현실화되었다. 19세기 전반기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국가가 경제의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법령과 행정을 강제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칙에 순응하도록 사회의 재구성을 선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영국 전역에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혁 국가 reform state’의 형태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폴라니가 강조하는 바, 이는 단순히 자유주의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19세기 들어 입헌주의 국가가 등장하면서 국가가 경제 영역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시장적 질서가 ‘자생적으로’ 나타났던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폴라니는 오히려 이 과정이 국가가 능동적으로 시장 경제의 ‘자연 법칙’을 사회 전체에 강제하였던 과정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폴라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70) 앞의 책, 7장에서 10장까지를 참조.

“자유방임이란 전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인간 만사를 그야말로 제 갈길 가도록 내버려두기만 한다면, 결코 자유시장이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었다. ... 1830년대와 1840년대는 여러 제약적 규제들을 철폐하는 입법이 무수히 터져나온 기간만큼이나 국가의 여러 행정 기능들을 엄청나게 증대시키기도 했으니, 이제 국가는 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정해놓은 여러 과제와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갖춘 중앙 관료 기구를 손에 쥐게 된 것이었다. ... 자유방임은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다. 자유방임은 그것 자체가 달성되어야 할 목표였다.”⁷¹⁾

폴라니는 벤딤 이후의 “철학적 급진파 philosophical radicals” 즉 공리주의 개혁가들의 주장을 이러한 성격으로 해석한다. 주권 국가의 법령과 행정으로 인간 세상을 전일적으로 재구조화한다는 근대의 기획은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국가의 법령과 행정은 이제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경제적 법칙에 따라 그 내용을 제공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 세상은 이제 본질적으로 경제적 사회라고 관념되기 되었다는 것이다.

(3) 국가/시장의 이분법과 사회의 발견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현대 국가와 현대 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 국가/시장이라는 이분법을 보게 된다. 인간 세상을 조직하는 방법은 주권 국가에 의한 행정과 법령 즉 정치이든가,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결정하는 가치 법칙 즉 시장이든가 두 가지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이 경제 영역에 적용되면 그대로 국가/공공 부문과 시장이라는 이분법으로 전환된다. 조세를 자원으로 하여 정치적 합의로 운영되는 국가의 행정과 법령으로 조직되는 경제 활동 그리고 개개인들이 소유한 생산 요소를 자원으로 하여 시장에서의 합리성에 따라 자유 계약으로 조직되는 경제 활동 두 가지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⁷²⁾

71) 앞의 책, pp.391-2.

72) 20세기 후반에 이러한 관점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한 고전으로는 Charles Lindblom, *Politics and*

폴라니의 주요 저서인 《거대한 전환》의 가장 중요한 논지 하나는 이러한 이분법을 거부하는 것에 있다. 인간 세상의 실체는 국가도 아니요 시장도 아니라 바로 ‘사회’라는 것이 이 저서에 깔려 있는 기본 관점이다. 산업 혁명이 시작되고 인간, 자연, 화폐까지 기계의 투입물로 전락하여 그에 알맞은 형식인 상품 (혹은 ‘허구적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회라는 구조물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허구적 상품’의 출현은 곧 사회라는 구조물 자체의 붕괴 위협을 가져오는 것이었으며, 이에 ‘생체 해부를 당한’ 사회라는 몸체가 움찔하면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에 자기 조정 시장 경제의 형성과 이에 맞서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사회의 자기 보호 운동이 ‘이중적 운동’을 형성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저서의 핵심 논지임은 잘 알려져 있는 바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간과된 지점은, 이러한 ‘이중적 운동’의 한 주체로서 사회라는 것이 분명히 모습을 드러냈다는 폴라니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경제적 사회의 전일적 지배 즉 자기 조정 시장 건설이라는 19세기 초의 미증유의 사회 변화의 와중에서 ‘사회’라는 것이 새로이 발견되었다는 폴라니의 논점이 자꾸 무시되는 것이다. 폴라니가 보기에 인간 세상의 실체는 정치나 국가도 아니요 또 시장도 아니다. 그 실체는 바로 이 ‘사회’이며, 이를 최초로 발견한 이들로써 그는 초기 사회주의자들 특히 영국의 로버트 오언 Robert Owen을 들고 있다. 따라서 초기 사회주의자들과 로버트 오언의 ‘사회’에 대한 사상이 어떤 것이었으며 특히 오언주의의 사상과 실천을 폴라니가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그의 ‘사회’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

3) 생 시몽과 로버트 오언: 인격적 존재의 관계로서의 사회

폴라니가 지적한 19세기 초의 사회의 발견은 산업 혁명과 기계 생산의 도래라는 사건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를 발견한 초기 사회주의자들로서 폴라니가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프랑스의 생 시몽과 특히 영국의 로버트 오언이다.

Markets: The World's Political Economic Systems (New York: Basic Books, 1977).

(1) 생 시몽

생 시몽 Henri de Saint-Simon 은 이미 1808년부터 저술을 발표하여 이후 사회주의 사상의 아버지라는 위치를 얻기도 한다. 처음에는 프랑스의 구체제를 벗어나고자 했던 자유주의자들과 사상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이윽고 독자적인 위치를 얻게 된다. 그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산업 L’industrie’의 발견에 있었다. 그 이전까지의 인간 세상은 다수의 생산자들 - 주로 농민들 - 위에 귀족과 성직자로 구성된 지배 계급이 군림하는 형국이었지만, 이제 다가오는 세상은 과학의 발견과 이성의 발전에 근거하여 모든 이들이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 여기에서 단순히 개인의 자유와 사적 소유의 확립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질서를 희구하는 반면, 생 시몽은 이러한 개인의 존재를 뛰어넘는 사회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바, 그 존재의 핵심 원리가 바로 산업이었던 것이다. 인간 세상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와 사적 소유에 근거한 시장 자본주의의 질서에 내맡겨지는 대신, 산업의 요구에 따라 최대한의 효율성이 발휘되는 동시에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의 복지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유기적인 사회 질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옛날과 같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 정치는 소멸하게 될 것이며, 세상 만사의 합리적인 관리가 행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⁷³⁾

하지만 생 시몽이 발견한 사회라는 것을 ‘산업’이라는 기능적 성격만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죽기 전에 힘을 기울인 마지막 작업에서 “새로운 기독교”를 새로운 사회의 조직 원리로서 제시한다. 비록 그는 기존의 제도화된 조직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인 “모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정신이야말로 이러한 산업 사회에서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원리가 되었다고 보아 이 원리를 부활시켜 사회 조직의 중심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73) Henri de Saint-Simon, *The Political Thought of Saint-Simon Intro.* by Gh. Ionescu,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또한 이렇게 생 시몽의 주요한 업적을 ‘사회의 발견’으로 강조한 관점으로 Emile Durkheim, *Socialism and Saint Simon*, ed. and intro. by Al Gouldner, (London: Routledge, 2009).

(2) 로버트 오언

영국의 로버트 오언 Robert Owen 또한 사회주의 사상 및 운동의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가진 사상가이자 운동가였고, 그 또한 생 시몽과 더불어 산업 혁명과 기계제 생산에 즈음하여 ‘사회’를 발견한 이라고 플라니는 지적한다. 하지만 플라니가 보기에 오언이 발견한 사회가 생 시몽이 발견한 사회와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었다. 생 시몽이 발견한 사회의 실체가 ‘산업’이었던 것과 달리, 오언이 발견한 사회란 인격적 존재인 인간들의 전면적 총체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정치와 국가 혹은 경제와 시장 등과 같은 그 어떤 기능적 관계로도 환원할 수 없고 그에 우선하는 원초적인 것이었다. 다음의 플라니의 말을 들어 보자.

“하지만 생시몽주의와 다른 오언주의의 독특한 점은 사회적 접근을 취할 것을 주장한 데에 있었다. 오언주의는 사회를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따로 조직하는 것을 거부했다. 경제라는 분리된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 이는 사회를 조직하는 힘으로서 이득과 이윤이라는 원리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었던 바, 이것이야말로 오언이 한사코 거부했던 것이다. 그의 천재성은 기계를 인간의 삶 속에 융합시키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사회를 건설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산업과 연관된 측면을 가지는 것은 세상 만사 모두였기에 그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강조는 원문)”⁷⁴⁾

이것이 플라니가 오언의 뉴 래너크 공동체의 조직의 의미를 해석했던 원리였다. 오언이 공장주로 있었던 뉴 래너크에서는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 시간이라는 좁은 의미의 경제적 차원에만 착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은 다른 공장에 비해 더 낮았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포함한 여러 인간적 필요욕구의 충족을 지향하는 총체적 공동체였다는 것이다.

74) 《거대한 전환》, pp.451-452.

“인간의 삶이 산업적 생산의 조건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단순히 임금이라는 것 말고도 숭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과 성인들의 교육, 그리고 춤, 음악, 오락 등이 제공되었고, 젊은이나 늙은이 모두가 고도의 인격적 도덕적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산업에 종사하는 인민들 전체가 하나로 뭉쳐 새로운 지위를 획득해나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창출되었던 것이다. ... 오언은 이러한 경험 속에서 사회적인 것 the social 의 개념을 추출해 낸 것이니, 이것이 산업 문제에 대해 경제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접근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⁷⁵⁾

오언주의 운동은 이렇게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들이 직접적 전면적인 관계를 맺는 총체로서의 사회를 상정했기 때문에, 생 시몽과는 달리 옛날의 기독교이든 새로운 기독교이든 아무런 간접적인 종교적 규범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철저한 무신론의 입장에 서게 된다.⁷⁶⁾ 아마도 이것이 플라니가 그 누구보다도 로버트 오언을 이 ‘사회의 발견’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대표적 사상가로서 높게 평가하는 이유일 것이다. 기독교는 결국 인간을 ‘신 앞에서의 개인’이라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되므로, 그러한 개인을 그 특정한 개인으로 만들어 낸 보다 우선적인 존재인 사회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오언의 생각이었다는 것이다.⁷⁷⁾

플라니가 보기에 오언이 발견한 사회의 핵심 원리는, 인간을 총체적 존재로서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의 자발적인 협동 co-operation 혹은 단결 union을 원리로 삼아 각자가 인격적 개성을 형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동체를 결성하는 것이었다. 오언주의 운동은 이후 소비자 협동 조합, 노동 조합, 생산자 조합 등 여러 형태의 운동을 낳는 모태의 역할을 하지만, 그 각각이 기능에 따라 따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종합적인 공동체를 결성하여 산업 사회에서 소외되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운동의 한 부분들로 시작된 것이었음을 지적한다.⁷⁸⁾

75) *ibid.*

76) 로버트 오언 본인은 만년에 들어 일종의 신비주의적 입장으로 전환하여 추종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77) 《거대한 전환》, pp.366-367.

78) 《거대한 전환》, pp.447-449. 한편 이러한 플라니의 로버트 오언 해석은 영국의 사회주의자 코

4) '연대'로서의 사회와 그 경제적 기능

이렇게 폴라니가 보았던 바, 생 시몽 특히 로버트 오언이 산업 혁명의 초기 발생시에 '발견'했던 사회란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들이 직접적 전면적으로 맺는 총체적 관계, 즉 '연대 solidarity'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어느 특정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전면적 총체적인 공동체였기에, 정치나 경제 기타 여러 기능적인 영역의 구별보다 이전에 존재하는 혹은 그것을 넘어선 존재였다.⁷⁹⁾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연대'로서의 사회가 그러한 정치나 경제 등등의 기능적인 역할과 분리되어 추상적인 도덕과 윤리로서만 존재하는 존재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폴라니에게 있어서 이러한 '연대'로서의 사회는 인간 집단의 생산과 분배 등의 경제 활동을 조직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대단히 능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이기도 했으며, 폴라니는 이를 통해서 시장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앙 계획에 근거한 공산주의 체제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독특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구상하기도 했다. 이제 이 '연대'로서의 사회가 어떠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폴라니의 생각을 알아볼 차례이다.

(1) 중앙 계획 경제에 대한 거부: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

폴라니는 1919년 당시 독일어로 발표한 글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 답변”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에 대한 생각을 피력한 바 있다.⁸⁰⁾ 폴라니는 이 글에서 사회주의 사상 및 운동이 당시에 처했던 가장 중요한 위협은, 자신이 신봉하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사상 및 운동과 동일한 것으로 혼동되는 것임을 지적하며,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의 경제 체제의 특징에 대한 자신

을의 해석에 크게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의 책 p.448. 이에 대해서는 G. D. H. Cole, *Robert Owen* (London: Ernest Benn Limited, 1925) [국역: 홍기빈 역, 《로버트 오언 평전》(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2016 근간)]

79) 폴라니는 이 점에서 공동체 Gemeinschaft 와 기능적 조직 Gesellschaft을 구별했던 튀니스 Ferdinand Toenies의 이론을 높게 평가한다.

80) 칼 폴라니 저, 홍기빈 역, 《칼 폴라니,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작한책가게, 2015)에 수록.

의 생각을 전개한다.

실로 의외로 다가올 수도 있겠으나, 이 글에서 풀라니는 시장 경제의 존재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 경제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한다. 경제란 단순히 생산의 기술적 조건과 물리적 속성과 같은 객관적인 요인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필요욕구의 주체인 인간에 의해서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라는 주관적인 요인 또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아무리 뛰어난 정보 및 통계 수집 능력과 뛰어난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상정하는 것처럼 국가의 중앙 계획 당국이 일률적으로 경제 활동과 자원의 조직 및 배분을 결정하게 될 경우 이렇게 욕구의 주체인 인간들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는 표출될 기회가 없게 되고, 따라서 만족스러운 ‘인간의 경제’가 구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그들의 집단적인 가치 평가가 표출되는 자유로운 가격 형성이 가능한 시장 경제를 통해서만 이상적인 사회주의 경제가 달성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때의 시장 경제라는 것이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한 독점이 횡행하고 또 자본을 가진 이들에 의해 노동자들이 한없이 착취당하며 또 토지 소유자들의 권력으로 특히 농업 노동자들이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극복한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 경제를 중앙 계획 경제로 대체하는 것이기는커녕, 그러한 독점과 자본 소유자들 및 토지 소유자들의 횡포를 제거하여 시장 경제가 그야말로 아무런 왜곡없이 순수하게 생산에 따르는 비용과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효용을 반영하는 투명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은 자본주의에서의 사적 소유와 자본의 지배 등의 여러 제도에 의해 파편화된 개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맺어지는 무정부 상태의 시장이 아니다. 시장을 매개로 하여 여러 자유로운 개인들이 서로 협동의 관계를 맺고 집단적으로 생산과 분배 행위를 조절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의 장이 된다.

“이렇게 구성된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협동이 협업의 일반적인 형태가 된다.

생산과 소비는 자율적인 협동조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맺는 구조 안에서 다름아닌 시장에 의해 조직될 것이며, 유통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중간 거래,

투기, 그 밖의 모든 기생적 행태들은 완전히 배제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제 기계적이 아닌 유기적 형태로 조직될 것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 생기 넘치는 직관으로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협동적인 이타주의의 충동을 둘 다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고, ... 자신의 인격 전체를 쏟아부어 그 충동을 보존하고 또 풍부하게 키워나갈 것이다. ... 시장에서의 조직화의 결핍은 이렇게 유기적 방식으로 시정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체 유기체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포라고 할 능동적 개인을 파괴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⁸¹⁾

“이것이 바로 협동적 사회주의가 시장 경제와 동의어가 되는 이유이다. 이 때의 시장 경제란 잉여가치의 수탈을 여러 상품의 가격 안에 은폐하는 현장인 자본주의적 이윤 경제의 무정부적 시장이 아니라, 자유로운 노동 생산물이 등가 관계로 교환되는 유기적 구조를 갖춘 시장이다.”⁸²⁾

폴라니의 사회주의란 바로 이렇게 자유롭게 연대하여 함께 집단적인 생산과 욕구를 만들어 내는 사회가 전면적인 경제 활동의 주체로 등장하는 경제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결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상정하는 것처럼 국가의 중앙 계획 따위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 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농업에서의 생산이라고 폴라니는 강조한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농업 부문에서 자행되는 토지 소유자 및 자본가의 농업 노동자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사회주의적 생산 조직의 형태가 시행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농업 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연대에 기초한 협동 조합이어야 하며 도시에서의 대규모 산업 조직이나 어울리는 국유화 따위의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폴라니는 말한다. 그리고 협동 조합이란 정의상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카우츠키 등이 말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적 국가의 통치 아래에 있는 협동 조합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협동조합의 생명은 그러한 자발적인 개개인들의 협동과 협력에 의한 시너지인데, 국가의 명령과 강제에 의해 조직된 협동 조합에서는 그러한 힘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81)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 답변”, p.272.

82) 앞의 글, pp.274-275.

“[협동 조합이라는] 관계 안에서는 궁극의 단위인 개개인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적은 노력이라도 내놓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공동 생산물의 가치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가치의 상승과 조응하게 된다. 이 관계가 바로 협동적 노동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지수이다. 비록 아주 보잘 것 없는 크기라고 해도 이러한 능률이 없다면 협동 조합은 결코 임노동에 비해 우월할 수가 없다. ... 하지만 토지와 사람들을 법령을 통해서 공산주의적인 ‘대규모 협동조합 사업체’로 변형시키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불가능하다. 첫째는. ... 협동 조합을 법령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농업 노동자들, 농장 일꾼들, 소작농들 등을 모아놓고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서로 협동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⁸³⁾

여기에서 플라니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제 질서가 선명하게 제시된다. 결코 국가로 대체될 수 없는, 사람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연대체들이 직접 경제적 기능을 맡게 되는 사회이다.

“사회화라는 것이 국유 경제와 동의어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국가는 사회화의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기업의 궁극적 소유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들의 경제적 자치가 사회화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만든 여러 기관들, 노동자 평의회, 그 밖의 자율적인 소비와 농업 생산의 대표체들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⁸⁴⁾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협동적 경제가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협동적 경제는 오로지 자유로운 협동과 자유로운 교환이 자유롭게 상호작용을 맺을 때에만 존속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⁸⁵⁾

83) 앞의 글, pp.277-278.

84) 앞의 글, p.278.

(2) 자본주의적 시장에 대한 반대: [사회주의적 회계]와 “사회주의 계산 논쟁”

이렇게 플라니가 생각했던 인격적 개인들의 자발적 전면적 연대로서의 사회는 구체적 인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중앙 계획에 근간한 공산주의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적 소유에 근간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로도 대체할 수 없는 독자적인 존재를 갖는 것이었다. 이 점은 1920년대 초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사회주의 계산 논쟁”에서 드러난 바 있었다.

이 논쟁의 촉발은 오토 노이라트 Otto Neurath 에 대한 미제스 Ludwig von Mises 의 비판 논문이었다. 1차 대전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의 전시 경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노이라트는 화폐가 없이 완전히 중앙 계획에 의해 운영되는 산업 경제의 질서를 구상하였다. 즉 개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의 일람표를 작성한 후,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재들 - 멩거가 말하는 “고차재들” - 의 일람표를 또한 차례대로 작성한다. 그리고 그 각각의 양은 소비재 등과 같은 상대적인 “저차재들”을 생산하는 데에 어느 만큼의 “고차재들”이 들어가는지의 “생산의 기술 계수”에 의해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시장에서 화폐 교환을 통해 가격을 형성시키지 않더라도 일률적인 중앙 계획에 의해 산업 경제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제스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생산에 들어가는 자본재의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 생산 원가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 결국 회계가 불가능하여 대규모의 산업 경제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관리 조직하는 일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미제스의 논리는 사실상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먼저 시장 교환에 소비자가 나타나서 생산된 물건에 대한 주관적 가치 평가를 가해야만 제대로 된 가격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생산재 즉 자본재 등에 대한 사적 소유가 제도화되어 있어야만 생산자가 이를 절약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행하려 드는 동기가 생기므로 또한 가격 형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의 인간 경제에서 유의미한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회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즉 사적 소유와 시장 교환이 모두 제도화되어 있어야 하며, 이 두 가지를 결여하고 있는 노이라트의 중앙 계획 사회주의 경제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⁸⁵⁾

85) 앞의 글, p.283.

앞에서 보았듯이, 노이라트 식의 획일적인 중앙 계획 경제는 폴라니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의 필요를 무시한 순전히 기술적인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판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미제스의 비판은 산업 경제의 조직이라는 것이 중앙 계획 아니면 사적 소유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시장 두 가지 밖에 없다는 즉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이외의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중앙 계획 밖에 있을 수 없다는 편견에 근거한 것이었고, 이는 폴라니의 사회주의가 준거점으로 삼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전면적인 연대에 근거한 사회라는 것의 존재를 무시한 관점이었다. 폴라니는 바로 이러한 그의 사회의 관점에서 다른 형태의 경제 질서가 존재하며, 그러한 질서에서는 사회주의적 회계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입증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그가 1922년에 발표한 논문인 “사회주의적 회계”였다.⁸⁷⁾

이 글에서 그는 경제 활동의 목적을 자연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나누어 설정한다. 자연적으로 보자면 오토 노이라트가 말하는대로 순전히 기술적 상관 계수에 입각하여 최소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내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목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관점이 개입되면 이러한 목적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먼저 분배의 결정에 있어서 사회로서는 생산성과 기술적 기여라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도덕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를 들어 노동자의 임금을 완전히 기술적인 요소로만 결정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다. 개별적인 소비자들에게만 맡겨둔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림살이 경제’의 문제를 논의할 때 살펴 보았듯이, 상품의 구매로 충족이 가능한 개인들의 필요와 욕구만이 나타날 뿐 집단적 차원에서의 사회 전체의 필요와 욕구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의 결정 또한 사회 전체의 개입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벌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개개의 경제적 사물과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두 개의 기준 - 자연적 그리고 사회적 - 이 병존하는 셈이며, 이 두 가지를 통일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만 회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미제스는 그 두 가지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생산 투입 요소들에 대한 사적 소유 그리고 시장 교환을 통한 소비자의 의사 표명이 반드시

86) Peter Rosner, “Karl Polanyi on Socialist Accounting”, in K. Polanyi-Levitt ed., *The Life and Work of Karl Polanyi* (Montreal: Black Rose, 1990).

87) Karl Polanyi, “Sozialistische Rechnungslegung” in M. Cangiani et. al. ed, *Karl Polanyi: Chronik der großen Transformation: Artikel und Aufsätze, 1920-1947*, Band 3, (Marburg: Metropolis-Verlag, 2005)

시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폴라니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적 소유와 시장 교환이 아니더라도 그 두 개의 기준을 통일하여 생산 원가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회계가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답은 바로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조직의 토론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전체 공동체의 존재였다.

생산 활동의 자연적 차원에서의 비용 - 여기에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도 포함된다 - 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생산자 본인들일 것이다. 폴라니는 생산자들을 산업 부문별로 조직하여 생산자 조합을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또 마찬가지로 그 생산물들이 어느 만큼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인지는 소비자들이 알고 있으므로, 소비자들 또한 스스로를 소비자 조합으로 조직한다. 그리고 중앙에는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코뮌 Kommune 이 성립하여, 노동자의 임금 수준 그리고 무엇이 어느 만큼 생산되어야 하는지를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이 코뮌이 결정한다. 그러면 이러한 생산 계획과 가장 기초가 되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결정된 조건 위에서 여러 단위의 생산자 조합과 소비자 조합이 협상과 토론을 통하여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생산 수단과 각종 자본재의 사적 소유 없이도 또 소비자가 반드시 시장에 나와 ‘화폐 투표’라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선호 체계를 드러내지 않고서도 생산의 ‘자연적’ 조건과 수요의 ‘사회적’ 조건을 모두 반영한 일관된 생산 원가와 회계 체계를 수립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세스는 다시 반비판을 가한다. 소비자 조합과 생산자 조합의 협상과 토론 과정이라는 게 항상 순탄한 것일 리가 없고 결국 파탄이 나는 일도 비일비재할 것인데, 그때는 누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쥐게 될 것인가? 코뮌이 권다면 결국 중앙 계획 사회주의와 차이가 없을 것이요 생산자 조합이 권다면 폴라니가 말한 이상적인 사회주의 회계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폴라니는 다시 1924년 <기능적 사회 이론과 사회주의 회계의 문제>를 발표하여 답한다.⁸⁸⁾ 가장 중요한 논지는 그런 식의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자와 자본가는 생산 수단을 둘러싼 항구적인 사회적 위치의 분열로 나타나기 때문에 화해할 수 없는 두 개의 집단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인간의 전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근간한 연대로서 성립하며, 지금 문제가 되는 생산자 조합과 소비자 조합도 알고 보면 두 개의 별개의 집단이

88) Karl Polanyi, “Die funktionelle Theorie der Gesellschaft und das Problem der sozialistischen Rechnungslegung”, in Karl Polanyi, *Ökonomie und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9).

아니라 동일한 인간이 경제 활동에서의 기능에 따라 두 개의 역할로 쪼개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분리 또한 일시적이며 임의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폴라니가 ‘연대’로서의 사회가 집단적인 경제 활동의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에 대해 아주 낙관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의 연장에서 1925년에 발표한 다른 글 “우리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에서는⁸⁹⁾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러한 자신의 구상이 시장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시 사람들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피력한다. 즉, ‘연대’로서의 사회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 사회의 연대가 강화되는 되먹임 작용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먼저 폴라니는 경제 활동의 조직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여러 정보는 통계라는 방법 이외에 각각의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정보의 소통에 있음을 지적한다. 경제 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조직들 내부에서 이러한 정보가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되고 공유되는가가 그 전체 경제 활동이 어느만큼 효율적이면서도 개인과 집단의 필요욕구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소통과 공유는 그 조직 내부의 질서가 어떠한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노예 군대와 같이 오직 권력의 원칙에 따라 세워진 조직은 ‘지도력의 조망’을 제공할 수 없다. ... 관공서처럼 법적 의무와 책무라는 원칙에 따라 세워진 조직은 ‘조망에 기반한 지도’의 능력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 제아무리 효율적으로 조직된 관료제라 할지라도, 조직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노고와 필요욕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내면적 조망’을 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중앙 계획화된 경제 방식의 가장 뚜렷한 결함은, 노동 계급 운동의 구체적 현실과 그 운동이 체현하고 있는 역사적 임무를 조화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⁹⁰⁾

89) Karl Polanyi, “Neue Erwägungen zu unserer Theorie und Praxis” in *Chronik der großen Transformation Band 3*. [홍기빈 역, “우리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 칼 폴라니,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 경제인가 외》 (책세상, 2002)]

90) 앞의 글, pp.109-110.

반면, 진정 자발적이고 전면적인 인간적 연대에 기초한 민주적 조직이라면 이러한 정보의 소통과 공유가 원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노동 조합, 산업 결사체, 소비자 협동 조합, 지방 자치체, 노동자 정당 등 여러 다양한 자발적 연대의 조직들이 경제 활동의 조직에 있어서 더욱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근거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어떤 조직이 경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중심적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노동 계급 운동의 조직들을 떠받치는 원리는 권력의 원리도 강제의 원리도 권위의 원리도 또 법적 헌정적 권리라는 추상적 원리도 아니다. 노동 계급 운동 조직의 원리는, 동지적 협동 -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 - 의 원리이며 동등한 관계의 원리이며 진정한 자주적 조직의 원리인 것이다.”⁹¹⁾

여기에서 플라니는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였던 오토 바우어 Otto Bauer 의 이른바 ‘기능적 민주주의 funktionale Demokratie’의 원칙을 인용한다.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려는 동지들의 끊임없는 협동 그리고 각자의 직업과 기능 속에서 모든 개인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 그리하여 이 ‘연대’로서의 사회는 그 욕구에 충실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더욱 더 공고해진다는 것이다.

(3) 길드 사회주의: 실체로서의 사회와 기능으로서의 제도

이러한 플라니의 관점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1920년대에 열렬히 지지했던 길드 사회주의 guild socialism 에 대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길드 사회주의는 생디칼리즘 syndicalism 과 국가 사회주의가 격렬히 대립하던 20세기 초의 사회주의 운동 진영에서 일종의 제 3의 길을 제시한 노선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영국 사회주의 운동 진영에서는 중세로부터의 길드 전통, 기독교 사회주의, 여기에 로버트 오언에서 내려오는 노동 운동 및 협동 조합 운동의

91) 앞의 글, p.115.

영향 등이 합쳐지면서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아나코 생디칼리즘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주의의 모습으로 제시되었고, 그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는 폴라니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콜 G. D. H. Cole 이었다.

그 이론의 개요는, 노동자들과 생산자들은 작업장과 산업 부문을 단위로 스스로를 조직하여 생산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자들의 조합 (“생디카 Syndicat”)에다가 모든 사회 권력을 이양하고 국가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생디칼리즘과 달리, 이 생산자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 및 생산자들은 동시에 소비자 조합에도 가입하며, 이렇게 형성된 소비자 조합은 생산자 조합과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산업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완전히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또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주로 다양한 소비자 조합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이것을 생산자 길드와 조화시키는 등 그러한 여러 길드와 조합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사회적 기능들을 책임진다. 하지만 그 역할의 큰 부분은 길드와 조합으로 이양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권 국가와 자본은 모두 그 사회적 ‘기능’에 따라 여러 다른 형태의 사회적 관계 - 즉 길드와 조합 - 로 서서히 해체되어 나가며, 서서히 해체되거나 약화되어 간다는 것이다.⁹²⁾

이러한 길드 사회주의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은 19세기 말 영국의 사회 및 문예 사상가 존 러스킨 John Ruskin 이 제시했던 기능적 사회 이론 Functional Theory of Society 이었다. 그에 따르면, 훌륭한 사회란 인간 존재의 총체성 the wholeness of human being 이 모두 발휘되는 사회이며 사회가 발달할수록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들 organs 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맺는 관계는 전면적 총체적인 것이며, 사람들은 그 관계의 일정한 측면들과 목적들이 충분히 달성되고 발휘되는 것을 원하며, 이에 기능 function 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저런 특정한 제도와 장치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이론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국가나 교회 등의 여러 제도들을 절대로 사회의 실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의 실체는 어디까지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인간들의 관계로 구성되는 사회이며, 국가나 교회 등등은 그 사회의 일정한 기능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관들에 불과하다는

92) 대표적인 길드 사회주의의 이론을 담은 저작으로 G. D. H. Cole, *Guild Socialism Re-stated* (London: Leonard Parsons, 1920).

것이다.⁹³⁾

폴라니가 이러한 길드 사회주의의 ‘기능적 사회 이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다음의 인용구를 보자.

“[사회란] 본질적으로 단일한 유기체이며, 그것의 개별 기관들은 다른 각각의 기관들과 합쳐져서 스스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이 이 새로운 기능적 사회 이론의 시발점이다. ... 이는 사회적 조화의 여러 원인들을 ...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삶에서 도출해 낸다. 개개인들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기능들은, 생산, 소비, 이웃 관계, 지적 생활, 자기 발전 등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 여러 결사체들을 형성하도록 장려되며, 그리하여 집단적 생산, 집단적 소비, 마을 공동체, 지적 목표를 공유하는 결사체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자연적 결사체들이 체현된 것이 노동 조합, 협동 조합, 마을 조직들, 이념 및 문화 집단들로서, 이 각각은 모두 개인들 삶의 한 기능을 표현하고 있다.”⁹⁴⁾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통념이 되어버린 국가/시장 혹은 정치/경제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폴라니가 어떠한 입장을 가졌을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 그가 보기에 국가도 시장도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홉스나 마키아벨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국가가 사회를 모두 조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19세기 이후의 경제적 자유주의자들 특히 오늘날의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를 모두 시장에서의 관계로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기능적 조직에 불과한 국가와 시장을 사회의 실체로 오인하는 지적인 오류일 뿐이다. 인간 세상의 실체는 바로 이렇게 자발적이고 전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모인 ‘연대’로서의 사회라는 것이 폴라니의 관점이었을 것이다.⁹⁵⁾

93) Gareth Dale, “The Iron Law of Democratic Socialism: British and Austrian Influences on the Young Karl Polanyi”, *Economy and Society* 43(4), 2014.

94) Karl Polanyi, file 1-52, “A szocialista Nagybritánia alkotmánya”, *op.cit.* p.656에서 재인용.

95) 폴라니의 생각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어떤 이는 ‘주권체는 사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Lee Congdon, “The Sovereignty of Society: Polanyi in Vienna”, in *The Life and Work of Karl Polanyi*.

5) 소결

앞에서 보았듯이, 폴라니는 사회를 인간들의 ‘연대’로 보았다. 인간은 총체적인 존재이며, 그러한 총체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자발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다양하게 표출될 수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만나는 관계가 사회의 실체이며, 그러한 총체성을 다양하게 표출하기 위해 이런저런 기능들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잘 발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 제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폴라니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파생된 제도들을 사회로 오인하는 것은 심한 오류이다. 따라서 국가/시장 혹은 정치/경제라는 이분법은 심히 잘못된 것들이다. 이 두 영역 모두가 실체인 사회의 기능적 영역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 가지가 더 있다. 국가/시장/사회라는 삼분법 또한 폴라니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잘못된 것이다. 사회는 국가 및 시장과 동렬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 모든 영역들을 만들어내는 원천인, 그야말로 실체이다. 따라서 국가/공공 부문과 시장 경제로 해결되지 않는 ‘나머지 residual’ 부분을 그대로 ‘사회’로 총칭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성격을 심히 왜곡하고 왜소화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성격을 정의하는 데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폴라니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의 ‘경제’가 ‘돈벌이’가 아닌 ‘살림살이’라면, 그 용어에 들어있는 ‘사회’ 또한 특정한 기능이나 정의로 한정되는 제도나 영역이 아니다. 이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전면적인 ‘연대’를 뜻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이다. 또한 그 ‘살림살이로서의 경제’라는 용어와도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들 개인과 또 집단의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것이 살림살이로서의 경제라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이 뭉치는 상태가 곧 사회이다. 따라서 사회는 그 살림살이 경제의 주체이기도 하며, 또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활동과 기능 조직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보다 사회 연대 경제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이러한 폴라니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더욱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⁹⁶⁾

96) 유엔 사회발전 연구소 UNRISD: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다. Peter Utting,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Beyond the Fringe* (London: Zed Books, 2015).

4. 사회적 경제의 규범 기준으로서의 “좋은 삶”

1) 문제 제기

경제 활동의 목표가 후생 welfare 의 개선에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이가 없다. 하지만 그 후생을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이야기로 가게 되면 여러 논쟁이 생겨난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경제학에서의 후생의 지표는 말할 것도 없이 국내 총 생산 GDP 일 것이다. 그리고 이 GDP 의 증대로 측정되는 바의 경제 성장이야말로 국가적 후생 증대의 첩경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국가 목표가 되어 있을 지경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GDP 라는 것이 제대로 된 후생 측정의 지표가 될 수 없으며, 진정한 후생과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로이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또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⁹⁷⁾

이 문제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바 있는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GDP는 집단의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투입물과 나오는 모든 산출을 모두 시장 가치로 측정하여 그 통일된 화폐 액수로 비용과 편익을 표현하고 그 합산으로서 후생의 ‘총량’을 산출하며, 그러한 측정의 도구로서 ‘일반 균형이 달성된’ 시장의 존재를 가상으로 가정한다. 결국 인간 세상의 만사만물이 모두 시장의 눈으로 해석되어 일정한 화폐 액수로 바뀌어 있는 세상이 바로 GDP가 다루는 세상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후생이란 결국 화폐 액수의 계산이라고 하는 형식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우선 과연 화폐 액수로 환원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 즉 시장에서의 화폐 가치라는 것이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표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밖의 다른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령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행복을 구성하는 것들의 항목의 다양성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그것을 숫자로 바꾸어 합산한 총량의 극대화가 더 중요한가라는 문제가 있다. 극단적인 공리주의 철학의 신봉자가 아니라면,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모두 그렇다라고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

97) 대표적으로 조셉 스티글리츠 외 저, 박형준 역, 《GDP는 틀렸다: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서》 (동녘, 2011).

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이란 형식적 합리성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합리성으로 답해야 하는 최소한 그것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는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 이러한 실질적 합리성의 소멸과 형식적 합리성의 전횡이 아마도 오늘날 GDP에 대한 맹신과 경제 성장에 대한 맹목적 추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합리성에는 문제가 따른다. 2장에서 보았듯이, 베버 또한 실질적 합리성은 “오만가지 애매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합리성이 실제의 경제 행동에서 보편적인 사고의 틀로서 작동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게 상이한 질적인 가치들 중 어떤 것들이 보편적인 행복의 구성물인지를 보여주는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심에 자리잡은 대형 아파트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이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몰두할 것이며, 어째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용한 환경에 좋은 공기를 얻을 수 있는 시골의 한옥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에게 그 논리가 통할 리는 없으며, 그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 스스로 혹은 자기의 가치관에 동조하는 이에게는 대단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며 또 그들 각각이 주상 복합 대형 아파트와 시골 한옥을 얻기 위해서 기를 쓰는 행동도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지만, 서로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질적 합리성이란 오로지 동일한 가치관과 그에 입각한 필요물의 목록에 있어서 거의 완전한 일치로 보는 작은 집단 안에서는 경제적 행동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사고의 틀로서 기능할 수 있겠으나, 일정한 크기와 범위를 넘어서는 집단에 갈 경우 그렇게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둘째, 이와 연결된 문제로서, 실질적 합리성은 수량적인 형태로 표현되기 힘들다. 사과와 배를 합산 adding up apples and pears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속담처럼, 여러 다양한 가치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 무형의 수단들은 동일한 수치로 합산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형식적 합리성/자본 회계 합리성의 경우처럼 화폐 액수라는 수량적 기준을 내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경제의 실천에 있어서도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영리 기업의 경우 그 존재 이유와 실적 평가의 기준이 당기 순이익과 자산 가치의 극대화에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의 조직 또 나아가 사회적 경제 영역 전체도 그러한가? 2장에서 보았듯이, 플라니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적 경제의 활동 또한 분명히 인

간의 행복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그 성격은 ‘돈벌이’가 아닌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제 활동의 내용을 보아도 하나의 기준과 표준으로 환원할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것을 그 존재 이유로 삼고 있다. 그런데 경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성의 종류가 형식적 합리성으로 획일화된다면 사회적 경제의 모든 활동 또한 일반 영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당기 순이익을 얼마나 냈으며 자산 가치를 얼마나 성장시켰는가라는 관점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바, 이는 ‘살림살이 경제 활동’의 조직과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설정한 베버의 이분법에 따른다면, 사회적 경제의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사고의 틀은 어디까지나 형식적 합리성이 아닌 다양한 실질적 합리성이 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실질적 합리성이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2장에서 보았듯이 칼 폴라니는 ‘살림살이로서의 경제’를 이야기하였다. 폴라니가 스스로 명시적으로 자세히 논한 것은 아니지만, 폴라니가 중요한 사상의 원천으로 제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에선 이러한 실질적 합리성의 규범으로서 즉 살림살이의 규범으로서 ‘좋은 삶’이라고 하는 명확한 사고의 규범 기준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 ‘좋은 삶’이 갖는 두 가지 차원 즉 집단적인 토론과 공유의 차원과 인간 개발 즉 ‘피어나는 삶 eudaimonia’의 차원은 그러한 ‘좋은 삶’이라는 것을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산업 사회에서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구체적인 현실을 평가할 수 있는 규준이 되도록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보인다.

폴라니는 스스로가 이끌었던 “컬럼비아 프로젝트” 즉 고대와 원시 사회의 비 시장 경제에 대한 학제적 연구팀의 작업을 토대로 1957년에 《초기 제국의 교역과 시장》의 출간을 이끈다. 여기에 수록된 칼 폴라니의 글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발견하다”⁹⁸⁾ 폴라니에게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이 차지하는 의미를 잘 보여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가운데에서 《정치학》의 1장과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5장에 나타난 경제 사상은 고대 세계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의 중세 유럽에서 큰 현실적 영향력을 가져왔지만, 근대 경제학의 발전한 이후로는 경제 분석으로서의 일관성이나 이론적 깊이를 결

98) “Aristotle Discovers the Economy”, in Karl Polanyi et. al. ed, *Trade and Markets in Early Empires* (Glenco, Illinois: Free Press, 1957).

여하고 있다는 혹평을 받아왔으며 거의 그 중요성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폴라니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 의미의 경제와 경제학에 매몰된 근대와 현대 경제학자들의 시야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그에 대비되는 ‘실질적’ 의미의 경제와 경제학이라는 차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의 본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폴라니는 고대 세계에는 시장이라는 경제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중요성이 미미했으며, 시장이 비로소 출현했던 것은 기원전 5세기 이후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고대 그리스 세계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기원전 4세기 경에는 비로소 자본주의라고 할 만한 것이 맹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나타난 경제 담론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거기에서 여러 소득 분배가 나타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럴 만한 현실도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거니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사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폴라니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심사는 따로 있었다. 시장의 발생으로 인하여 혼탁해진 현실 속에서 경제 - 여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오이코노미아 *oikonomia* 이다 - 의 본래 의미를 밝히고, 재물을 획득하는 행위 - 그리스어로 크레마티스티케 *chrematistike* - 가 어떠한 중요성이 있으며 어떤 원칙으로 행해져야 하는가를 밝힌 뒤, 그에 이반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는 화폐 경제와 시장 교역의 여러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담론은 경제 분석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경제란 본래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를 밝힌 윤리학의 일부라는 것이다.⁹⁹⁾

이로부터 우리는 칼 폴라니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실질적 경제’의 분석틀을 제시한 한 전범 *paragon* 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2천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라는 생활 방식을 놓고서 그 속에서 경제의 위치와 경제 생활의 방식에 대해 제시했던 틀은 원칙적인 면에서 오늘날에도 ‘실질적 경제’를 사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특히

99) 고전학자인 핀리 또한 이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핀리는 “컬럼비아 프로젝트” 당시 칼 폴라니와 가깝게 의견 교류를 한 바 있다. M. I. Finley, “Aristotle and Economic Analysis”, *Past and Present*, 47, 1970.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은 삶 eu zen’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과 경제 생활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화폐 경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했는지를 살펴본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

(1) “좋은 삶”

a. 최상의 “좋은 삶”

“좋은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접근법은 초월적인 사유에서 시작하는 플라톤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그는 추상적으로 “잘 산다는 게 뭐냐”고 접근하기 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벌이는 이런 저런 구체적인 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답을 얻으려 했다. 인간의 모든 종류의 활동에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좋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의료 행위나 음독 자살이나 건강이라는 혹은 비참한 삶에서의 탈출이라는 “좋은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필요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라는 두 개의 측면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는 다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목적은 수단의 양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마취를 행하는 의사의 목적은 분명히 수술이 이루어지는 일정 시간동안 환자가 의식을 잃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에 합당한 양이 투입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면, 환자가 영똥하게 수술대 위에서 황홀경 혹은 사경을 헤매는 전혀 다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한편, 목적의 추구는 그 양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의술은 “환자의 건강”을 무제한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어찌 의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건강”이라는 말이 성립하겠는가.

두 번째로, 수 없이 많은 인간의 가지가지의 활동들은 어떤 활동은 다른 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수단으로 종속되는 등의 위계질서가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어떤 활동이 달성하려는 “좋은 것”은 그 활동에는 목적이 되지만 그보다 상위의 활동에서 보자면 수단이 될 것이다. 마취술이라는 활동은 좀 더 상위의 목표인 의료 수술이라는 활동에 종속되는

하위의 활동이다. 이 때 정해진 시간동안 안전하게 환자를 마취 상태에 놓는다는 것은 마취 활동에서는 목적이 되지만, 수술이라는 상위의 활동에서는 목적인 부위의 절제(切除)나 치료라는 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의 지혜를 도출해낸다. 첫째, “산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가장 상위의 활동일 것이고, 그것이 목적으로 삼는 “최상의 좋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마취술의 상위의 기술이었던 수술은, 그보다 좀 더 상위의 기술인 의술 일반의 하위 기술이며, 병든 부위의 제거나 치료라는 수술의 목적은 “건강의 회복”이라는 의술 일반의 목적에서 보자면 다시 수단이 된다. 그렇다면 의술 일반의 목적인 “건강의 회복”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일까? 우리의 삶에서 “건강의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얻고자 하는 “최상의 좋음”인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건강이라는 것은 더 궁극적인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같은 질문을 인간의 모든 활동에 적용시켜본다면, 인간의 모든 행위에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어떤 “최상의 좋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 각각의 활동들이 그 목적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최상의 좋음”이란 인간 세상의 모든 목적들 중의 궁극적 목적이니 어떤 다른 것을 위한 수단도 아니다. 그냥 “그것 자체로 목적이며 좋은 것”이다. 따라서 어떤 “좋은 것”이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면 이미 “최상의 좋음”이 아니다. 미남미녀 같은 것들은 누구나 사춘기 때에 한번 짝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은 “최상의 좋음”이 아니다. 외모의 탁월성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아주 정신병적인 나르시스트가 아니라면) 그 힘을 빌어 다른 미남미녀를 유혹한다든가 타인들에게 탄성과 부러움을 자아낸다는가 심지어 연예인이 되어 떼돈을 버는 수단으로서만 쓰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재산과 부 같은 것도 결코 그러한 “최상의 좋음”은 될 수가 없음이 분명하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이 “최상의 좋음”이란 결국 “좋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이 “최상의 좋음”에 비추어 삶의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다 규제되어야 한다. 어떤 활동의 의미가 그 목적을 통해 부여되는 것이라면, 이 “최상의 좋음”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그 의미와 정도가 통제되지 않는 인간 활동이란 무의미한 헛수고가 된다.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술의 경우에 “지나치게 많은 건강”이란 있을 수 없다고 앞에서 말했지만,

이 행복한 삶이라는 “최상의 좋음”에 비추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직업 체육인도 아닌 어떤 이가 오로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체육관에서 보낸다면, 이 “행복한 삶”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분명히 “지나친” 것이다. 사랑은 좋은 것이겠지만 일상이 황폐화되고 패가망신에 이르도록 집착한다면 이 또한 “적당히 해두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지나치게 아름답거나 현명하여 몸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야기책에서 많이 만나게 된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인간 활동은 “적당한 만큼”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어느 만큼이 “적당한 만큼”인가. 이 “최상의 좋음”인 “좋은 삶”을 얻는 데에 합당한 만큼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윤리에서 대단히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즉 재물을 획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좋은 삶”을 추구하는 데에 꼭 필요한 양만큼 이상은 획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솔론 Solon 과 달리 인간의 욕심이 무한하다는 명제를 그릇된 것으로 보아 기각하였다. 만약 무한히 많은 양의 재물을 획득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가 하는 이유에서 스스로의 “좋은 삶”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훌륭한 살림살이 즉 오이코노미아의 기술을 익히는 첩경은 먼저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생각과 상을 갖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b. “피어나는 삶”

그렇다면 이 “좋은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플라톤은 그 내용은 초월적 transcendent 인 것이어서 오직 깨달은 자 즉 철인 哲人 만이 알고 있으며 보통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대해 내재적인 immanent 접근을 취하여 그것은 구체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과 집단에 따라 여러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어 있다는 탄력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그래도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이 이 “좋은 삶 eu zen”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에우다이모니아 eudaimonia”를 그 주된 특징으로 논한다.

이 그리스어 “에우다이모니아”는 단순히 편하게 잘 있다는 뜻의 ‘안녕 well-being’ 따위

와는 상당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를 살려 다시 옮기자면 “사람다운 삶” 정도가 될 것 같다. 이 말은 “좋은 eu-”과 “영혼daimon ”이 붙은, 즉 “영혼이 만족스런 상태”라는 뜻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이 다이몬이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영혼으로 옮겨지는 다른 그리스어 “프시케psyche ”와 대조하여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프시케”는 원래 “숨결”을 뜻하는 말로써, 생명체의 생기 生氣 나 활력을 주로 뜻한다. 라틴어에서 영혼이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숨결”이라는 뜻에서 나와 주로 수동적인 육체의 작동을 의미하는 여성형 “아니마 anima ”와 그에 맞서 정신적 합리적인 활동으로서 능동적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남성형 “아니무스 animus”로 나누어진다¹⁰⁰). 그래서 그리스어 “프시케”는 라틴어에서 “아니마”로 번역되는 것이다. 반면, 이 “다이몬”이라는 말은 원래 신神: deity 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호머 Home 는 이 말을 “인간의 영혼에 깃든 신성 神性 ”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 헤시오도스는 저 좋던 황금 시대에는 인간이 신과 직접 소통했었다고 하면서 그 시대의 인간들의 영혼을 일컬어 이 “다이모네스 daimones ”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¹⁰¹).

이러한 어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의도하는 바와 잘 조응하고 있다. 그는 모든 학문에 만능선수였지만 특히 동물학에 뛰어났다고 하는데,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동물학자답게 인간과 다른 생물들과 비교속에서 답을 찾으려 시도한다. 먼저 단순히 숨쉬고 살아있더라는 것은 모든 생물들이 다 하는 바이니 답이 될 수 없다. 감각 능력이나 운동 능력도 다른 동물들이 얼마든지 갖고 있는 바이니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고유하게 남는 것은, 인간의 존재 중 이성 logos 이 다스리는 부분이 작용하는 생활뿐이다 λείπεται δὴ πρακτικῆ τιο τοῦ λόγον ἔχοντος”(NE 1098a, 4-5)”.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성으로 세계를 창조하는 것 - 비록 그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 이야말로 신 神 의 본질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유하게 인간적인 삶이라고 부른 것은 그야말로 “인간에게 깃든 신성 즉 다이몬을 활성화시키는 생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활동을 하건 신을 본받아 이성을 발휘하여 “잘”해야 하며,

100) 라틴어의 이 대립쌍은 융 Carl Gustav Jung 의 심리학 이론에서 인간의 정신에 내재한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을 일컫는 말로 차용된다.

101)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어에서 영혼은 위의 “프시케”라는 말로 지칭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영혼을 논하는 그의 저서 《영혼에 대하여 De Anima》에서 이 “프시케”라는 말을 쓰고 있다. 특히 2권의 1장과 2장의 논의를 참조.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이성적으로 “잘”하는 것이 “에우다이모니아”의 내용이 된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잠재 능력을 전면적으로 계발(啓發)하는 것이다. 배불리 먹고 등 따시게 누워있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이성을 발휘하여 할 수 있는 그 모든 인간 활동에 도전하여, 내 속에 있는 인간적 이성을 모두 끄집어 내어 풍부하게 발전시키고 꽃피우는 것 나아가서 그것을 바깥 세상에 실현하여 세상을 더 아름답고 인간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에우다이모니아”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말을 “인간성이 풍부히 피어나는 삶 human flourishing”이라고 옮기기도 한다¹⁰²).

c. 폴리스와 “집단적 좋음”

행복한 생활이 이렇게 “인간적 능력과 인격의 계발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그것이 가능한 장(場)으로서의 사회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폴리스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았다. 폴리스라는 장을 중요시한 것은 플라톤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플라톤의 주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최상의 좋음”과 “행복한 삶”이란 플라톤에게 있어서처럼 똑똑한 철학자만이 알아내어 다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의 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하고 공유하는 “집단적 좋음 Common Good”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좋음”과 “행복한 삶”에 관한 한 플라톤이 말한 것과 같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절대부동의 진리 따위는 있을 수 없다. 폴리스 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합의하는 그 “집단적 좋음”은 폴리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인생에 있어서 가치의 척도로 삼아야 하는 것은 플라톤식의 절대부동의 진리 따위가 아니라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폴리스의 “집단적 좋음”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폴리스는 단지 구성원들의 훈련뿐이 아니라 그 “집단적 좋음”의 생산까지를 맡아보는 더욱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¹⁰³).

102) Bernard Yack, *The Problems of a Political Animal*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93) pp.97-99.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가 흔히들 오해하듯 관습과 계약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연적 *κατὰ φύσιν*”이라는 말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아무런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를 자연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경우 자연이란 단지 항상 수동적이고 멈춰있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리스적인 “자연 *physis*”이란, 그렇게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운동하는 역동적인 자연이다. 그러한 그리스적 사고에서 나온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의 원형이 되는 것은 동물의 성장이다. 달걀에서 나온 말랑말랑한 병아리가 엄마 암탉을 종종거리고 따라다니다가 어느 새에 성숙한 암탉으로 성장한다. 흰자와 노른자의 상태에서 멋지게 껍을 치는 암탉의 모습이 될 때까지 그 “자연”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운동하는 것이다. 마치 “산맥이 바다를 연모하여 휘달리듯이” 자연은 스스로의 “완성된 모습 *entelecheia*”을 향해 도처에서 약동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의 모습을 찾아 자연이 발전해나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은 자연적이다. 아이가 성숙한 남자나 여자의 모습으로 완성되면서 몽정이나 초경을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하여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도 자연적이다.

폴리스가 결코 인간들의 약속이라는 “관습 *nomos*”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는 그의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 사회의 발전과 구성을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에게는 암수의 구별이 있다. 따라서 때가 되면 이 둘이 만나 애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적이다. 여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열등하여 남의 지도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들이 하인이 되는 것이 자연적이다¹⁰⁴⁾. 이렇게 부부와 자식 그리고 하인이 합쳐 경제적인 자급자족을 위해 가정 경

103) 물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국가(*Republic*)》에서의 플라톤만을 염두에 둔 일방적인 것이다. 이 책에서 플라톤은 아무런 현실적 조건의 제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한 철학자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국가라는 일종의 유토피아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폴리스를 다루게 되는 《법(*Law*)》에서 나타난 플라톤의 주장과 철학은 《정치학(*Politics*)》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와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적 국가에서 철학자는 법에 전혀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지혜의 빛에 의해서만 통치를 이끌어 나가지만, 현실의 국가에서는 그 폴리스의 성원들이 공유하고 합의한 가치의 표출인 법이 최상의 권위를 갖게 되며, 통치자는 그 법의 수호자로서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플라톤도 보고 있는 것이다.

104) 현대인들의 눈에는 참으로 낯선 논리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우월한 인간과 지도받아야 할 수 있는 열등한 인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자연적”이라고 생각하

제 oikos 를 이루는 것도 자연적이다.

하지만 밥만 먹는다고 사람의 삶인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조직인 가정 경제만으로는 분명히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다. 사람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신성이 깃든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이성 logos 즉 언어의 재주를 가진 존재이다. 그러한 윤리적 미학적 정치적 종교적 그 밖의 인간 영혼에 잠재된 모든 측면을 발전시킬 때에만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완성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적 관계가 필수적이다. 먼저 다른 이들과 같이 모여서 그러한 제반의 가치를 토론하고 공유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집단적 좋음”의 공유가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윤리적인 것인지 등등의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모인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정 경제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폴리스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따라서 폴리스도 가정 경제나 마찬가지로 인간이 스스로의 형상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저 유명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 즉 폴리스 생활을 하는 동물 zoon politikon 이다”라는 그의 말의 뜻을 음미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폴리스에서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형상이 완성되는 - 쉽게 말해서 완전히 자라나는 - 동물이라는 것이다. 폴리스의 삶을 살지 않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먹고 산다는 것 이외의 어떤 인간적 형상도 갖지 못한 짐승같은 존재이거나 아니면 다른 동료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윤리적 미학적 삶을 살아가면서 형상을 완성할 수 있는 신 神 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이다.

별집은 벌이 벌로서 살아가는 “자연적인” 주거 형태이다. 그렇다면 폴리스는 그 독특한 “사회적 동물”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너무나 “자연적인” 삶의 형태인 것이다.

(2) 재물의 획득: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a. 가정 관리와 경제

이렇게 “좋은 삶”에 대해 집단적인 답을 줄 폴리스가 형성된다면, 가정 경제도 단순한 물질적 자급자족이 아니라 그 “행복한 삶”을 실천할 윤리적 인간적 삶의 장으로 새롭게 위치지워진다. 가정은 앞에서 본대로 기본적으로 인간들간의 관계이므로, 가정 경제의 모든 물질적 측면에 앞서서 그 성원들간의 윤리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설한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하인 간의 관계에는 그 각각에 적절한 행동의 도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성원들이 각자의 도리를 잘 지키도록 총체적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의 임무이다. 가장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자기 생각이 있어야만 집안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여자, 노예, 아이들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고로 사실상 이 가장들의 모임이었던 폴리스에의 참여를 통해서 가장들은 그러한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¹⁰⁵⁾. 이제 가정 경제는 단순히 폴리스의 “좋은 생활”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좋은 생활”의 장이라는 이론적 의의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b. 획득의 기술

그렇게 윤리적으로 잘 자리잡힌 집안이 “좋은 생활”을 하려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수단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맘 편하게 쉬다 떠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푸는 것도 “좋은 생활”의 한 부분일 것이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그네로 변장하고 들렀던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들을 대접했던 것은 어느 선량한 늙은 부부였다. 그들은 없는 살림에나마 손님을 대접하느라고 분주하다. “노인은 갈래진 막대기로 굴뚝에 걸어놓았던 베이컨을 끄집어 내리더니 한 조각 베어

105)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스라는 것이 사실은 노예라는 계급 차별과 여성을 복종이라는 가부장제에 근거한 불평등한 사회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남비 속에 넣어서 채소와 같이 끓이고, 나머지는 다음에 쓰기 위하여 남겨 놓았다. … 손님들이 앉을 벤치에는 해초를 안에 넣어서 만든 방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클로오드를 덮어 놓았는데, 이 클로오드는 낡고 초라한 것이었지만 큰 일을 치를 때에나 내놓는 것이었다. … 노파는 좋은 냄새가 나는 풀로 식탁을 흠쳤다. …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김이 무럭무럭나는 스투가 식탁에 나타났다.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포도주도 첨부되었다. 디저어트는 사과와 야봉(野蜂) 꿀이었다. 그 밖에 이러한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화기에 넘치는 얼굴과 소박하나 정성스러운 환대였다”¹⁰⁶⁾.

따라서 가정을 이끄는 기술 *oikonomia* 은,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는 기술 *chrematistike* 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언뜻 진부해 보이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논점이 내포되어 있다. 당시 그리스에서도 오늘날처럼 획득의 기술 *chrematistike*: *χρηματιστική* 이라는 말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돈벌이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었다고 한다. 나아가, 가정 관리의 기술 *oikonomia* 이란 사실상 이 획득의 기술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Pol. 1253b 13-14). 즉 살림살이와 돈벌이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칼 폴라니가 지적하는 경제의 두 가지 의미가 혼동되는 현상이 그 때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이러한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그의 《정치학》의 1권 전체는 그 비판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⁰⁷⁾.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고 방식은 가정이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좋은 생활”을 지향하는 사회적 단위라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물질적 수단의 조달 단위라는 협소한 의미에만 집착한 무지의 소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성원들의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의 기술 *oikonomia* 을 단지 물품과 재물을 획득하는 기술과 확연하게 구분하고, 오히려 전자가 후자를 하위의 기술로 포함하는 것으로 본 그의 관점에 실로 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마취술은 수술의 기술에 종속되는 하위 기술인 고로, 그 목적과 수단의 모든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상위의 기술인 수술의 기술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 획득의 기술 *chrematistike* 이 가정 생활에 종속되는 하위

106) 벌편치, 손명현 역, 《고대 신화》 (정음사, 1974) pp.88-89.

107) 옥스포드 그리스어 사전 Liddell and Scotts' Lexicon 에 의하면 이 말의 어근인 그리스어 *chrema* (*χρήμα*)는 원래 그냥 일상의 필수품을 일컫는 말이지만 복수형인 *chremata* 는 화폐라는 뜻이 되고 있어서, 더더욱 이 말이 “돈벌이”와 같은 뜻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

기술이라면, 물자를 조달하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가족 성원들의 “행복한 삶”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마취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술이라는 상위의 목적을 망각한 채 제 흥에 겨워 “마취술의 한계에 도전한다” 하면서 극단을 달리면 그야말로 큰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획득의 기술도 가정의 행복이라는 상위의 목적을 무시한 채 “돈벌이의 한계에 도전한다”고 굴어서는 아니 된다. 혹시라도 두 개의 기술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혼동으로 인해 “더 많은 부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가정 생활의 관리가 벌어진다면, 가정의 행복은 사라지고 가정인지 공장인지 알 수 없도록 전 가족이 흑사당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경제 행위에서의 목적 합리성이 독립되어 따로 노는 것을 절대로 피하고 철저하게 가치 합리성의 차원에 복무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겠다.

한 걸음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획득의 기술 일반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실제로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Pol. 1256a 17-19). 획득의 기술이 독자적인 기술로서 성립하려면 그것에 고유한 목적인 “부(富) 일반”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정 관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정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앞에서 본 것 같이 꿀, 사과, 베이컨, 의자 등등과 같은 구체적 물품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진정한 부를 구성하는 것들은 폴리스와 가정 경제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다. … 부는 가정 경제나 폴리스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도구들이라고 규정된다”(Pol. 1256b 28-39)¹⁰⁸. 따라서 가정 경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물건들을 조달하는 기술은 사실 농업의 기술, 목축의 기술, 노략질의 기술 등과 같이 구체적인 생산의 기술들이었다. 그러니 이런 구체적인 생산 기술들이 아닌 획득의 기술 일반이라는 것은 가정 경제의 차원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로지 “화폐로서의 부를 조달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때에만 “돈벌이 기술”로서의 획득의 기술이라는 독립적 영역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가정 경제의 획득의 기술을 논하면서 다시 한번 “자연”이라는 그의 독특한 개념에 의존한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를 자연에서 공급받게끔 되어있다는 것이다. 씨앗이나 난생 卵生 동물들처럼 그 생계수단을 아예 짊어지고 태어나기도 하며, 포유류의 경우엔 엄마 가슴팍에 먹이

108)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다스 Midas 왕의 예를 들어, 화폐와 실제의 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들임을 강조한다(Pol. 1257b 10-17).

가 “자연적”으로 담겨있는 것이다. 어른이 된 뒤에도 육식동물에겐 초식동물이, 초식동물에겐 풀이 자연적으로 있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 생활에 필요한 것은 모두 자연에 주어져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생활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발전시킨 방식들인 목축, 농업, 수렵, 어로, 약탈¹⁰⁹⁾ 등은 모두 자연적인 것이다 (Pol. 1256a 27-1256b 20).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몇 천년 동안 인간들에게 상식처럼 통하는 명제 - 희소성의 공리에 도전한다.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현인(賢人)이었던 솔론(Solon)은 “부에 관한 한 인간에게 정해진 크기의 한계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가정 경제와 폴리스를 구성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물질 수단을 자연에서 조달하는 것도 자연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적인 인간의 경제활동에 한계가 없을 리가 없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활동에서 목적의 추구는 무한하지만 수단의 양은 그 목적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보았다. 또한 방금 전에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사는 법을 아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폴리스의 운영 기술 (politikon)과 가정 관리의 기술을 상위의 기술로 삼고, 거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획득의 기술은 그 하위의 기술로 종속시킨다고 하는 그의 주장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솔론에 반대하여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양에는 어떤 자연적인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술을 위한 마취에는 무한정의 마취약이 필요하지 않다. 무한정의 마취약을 가지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목적은 분명 수술이 아니라 자살이거나 환각 상태일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 무기(武器)의 양은 결코 무한정이 아니다. 만약 무한정의 무기를 가지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삶”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는 무기 장사꾼이거나 다른 무엇일 것이다. 재화를 조달하기 전에 자기가 그걸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하는 지, 그걸 쓰는 것이 자

109) 이 노략질이란 주로 노예 사냥이었던 것 같다고 한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인간이 먹이를 얻기 위해 동물들과 싸우는 수렵의 기술은 자연적이다. 그렇다면 “수렵은 단지 동물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연에 의해 타인들에게 지배당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그 자연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전쟁은 자연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이다(Pol. 1256a 23-27)”. 투키디데스(Thucydides)에 의하면 북부 그리스에서는 떼강도질이나 해적질이 아주 흔했고 존경할 만한 직업으로 여겨졌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어쩌면 당시의 상식이었던 지도 모르겠다. Rackham, op.cit. p.34. footnote.

신의 “행복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무어가 어느 만큼 필요로 하는 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돈부터 벌고 보자라고 시작하면 그야말로 본말과 시종이 바뀌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顛倒)되어 삶 자체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c. 경제적 거래와 폴리스

가정 경제가 절대적인 자급자족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폴리스에 모여서 사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고 또 받는 호혜성 antipeponthos 을 통해 서로간에 정 philia 을 나누면서 폴리스의 결속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폴리스가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오는 경우엔 이를 집단적으로 분배하기도 한다. 한가지 문제는, 이렇게 물건이 오고가는 와중에서 그 반대로 폴리스의 결속이 와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리품 분배를 잘못했다가는 성원들간에 심한 감정적 반목이 생기며 심하게는 살인도 날 수가 있다. 일리아드의 주된 갈등의 하나인 아킬레스와 아가멤논의 싸움이 왜 벌어졌던가. 전쟁에서 뺏어온 아릿따운 처녀 브리세이스(Briseis)를 아가멤논이 자기가 총사령관임을 내세워 차지해 버리자, 가장 뛰어난 전사(戰士)인 자기에게 응당 차례가 올 줄 알았던 아킬레스가 불만을 품고 파업 농성까지 벌이는 바람에 시작되기도 했었다.

선물 교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선물 행위는 순수히 비경제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스 Marcel Mauss 등은 이를 근대 유럽의 기독교적 사고 방식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선물은 본래 사람들의 살림살이로서의 조달 행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¹¹⁰⁾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심초사 걱정했던 것은 경제적 거래 행위로 인해 폴리스의 단합이 깨지거나 사회 변동이 생겨나는 사태였다. 그는 폴리스의 삶이라는 이상은 혹시라도 성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될 경우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경제적 현상이란 몇 천년 후의 경제학자들이 외치듯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의 사회적 화목을 해치지 않도록 주

110) Marcel Mauss, *The Gift: Forms and Functions of Exchange in Archaic Societies* (London: Cohen and West Ltd., 1966).

의깊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는, 폴리스의 공동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나 또 성원들간의 선물 교환에 있어서나 어떤 정의 just 의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는 먼저 정의란 “각자가 자신이 응당 얻어야 마땅한 몫 due 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모든 종류의 경제적 거래가 그러한 원칙에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경제적 현상이 폴리스의 약화와 같은 사회 변동을 가져올 모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비로소 성원들 간의 경제적 거래가 폴리스의 결속과 화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응당 얻어야 할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중간” 즉 적절한 수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그는 다시 그 정의를 “분배를 할 때의 정의 distributive justice ”와 “불공평을 시정하는 정의 corrective justice ”로 나누고 각각에 있어서의 원칙을 논한다. 분배에서의 정의를 결정하는 원칙이란, 그의 대답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분배를 하는 바람에 성원들의 상대적 지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4개의 신분으로 나누었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여 분배를 하다가 최하층의 신분이던 자가 너무 많이 차지하여 더 위의 신분으로 상승한다든가 위의 신분에서 있던 자가 그 반대로 몰락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각각의 시민들은 자신의 지위에 비례하도록 분배를 받는 것이 “각자가 응당 얻어야 할 몫”이 되겠다.

“시정적 정의 corrective justice ”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민들 상호간의 거래이다. 이 때의 정의의 원칙은, “거래를 통해 각자가 얻는 것(혹은 손상)의 크기가 같도록 하라¹¹¹⁾”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주장이 나온다. 정의로운 거래는 정확한 등가 equivalency 로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 쪽이 이익 gain: κέρδος 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거래에서 한 쪽이 얻는 이익의 근원은 상대방이 그것과 똑같은 만큼으로 손해를 입는 것에 있다고 보

111) 양쪽 다 똑같은 “손상”을 입는 것이 정의라는 말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거래는 자발적 거래와 비자발적 거래로 나눈다. 전자에는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벌이는 거래 즉 교환, 계약 등등이 들어가며 반면 강도질처럼 어느 한쪽의 의사에 반해서 벌어지는 거래를 비자발적 거래라고 보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의사가 목살 당한 쪽 즉 강도 피해자는 일정한 “손상”을 입게 마련이니, 이때 “시정적 정의”란 그가 입은 손해와 동등한 양의 피해를 강도에게 입히는 것이겠다.

기 때문이다. 교환을 통해 양쪽 모두가 이익을 볼 것이라고 믿는 현대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거래 행위란 기본적으로 어느 한 쪽의 이익은 다른 쪽의 손해에서 비롯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는 셈이다. 다음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거래에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의 입장은 영리적 상업이나 고리대를 비난하는 그의 주장의 강력한 논거가 된다.

그런데 세상에 등가 교환처럼 애매한 말도 없다. 어떤 비율이건 교환 당사자들이 임의로 합의하는 비율로의 교환이라면 다 등가 교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은 “합의한 비율의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거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비율은 사실상 모조리 “합의된 비율”인 셈이니, 사실상 어처구니없이 부당하게 비싼 가격도 “합의된 비율”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되면 폭력이 사용되지 않는 한 모든 거래는 등가교환이 되는 셈이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적 정의”의 원칙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등가를 거래 당사자들이 협상 bargain 하여 합의한 시장 가격으로 이해하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¹¹²⁾ 그가 의미하는 교환의 비율이란, 거래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고려하여 거래 이전에 미리 결정되어 고시 告示 된 법정비율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들끼리 물건을 주고 받는 관계를 “공동체 틀 내에서의 주고 받는 관계 ἐν ταῖς κοινωνιαῖς ταῖς ἀλλακτικαῖς¹¹³⁾” 즉 그 주고 받음을 통해서 전체 폴리스가 더 강하게 결속되는 그런 관계로 보았다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 받을 때의 비율은, 그러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¹¹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비율을 “각자가 응당 받아야 할 몫”인

1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교환 비율이 시장에서의 협상 가격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슈페터 Joseph Schumpeter 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113) 이 말은 라캄(Rackham)의 영역에서는 단순히 “서비스의 상호 교환 interchange of service”로 되어 있지만, 핀리 Finley 는 이것이 그리스어 코이노니아(koinonia)의 어감을 살리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윌 Edouard Will 의 “공동체의 틀 내에서의 주고 받는 관계(les relations d'échange qui ont pour cadre le communauté)”라는 번역을 더 선호하고 있다. M. Finley, op.cit., pp.7-8.

114) 이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14세기의 오레스무스(Nicole Oresme) 이래 현재까지 숭한 논란이 있어왔다. S. T. Lowry, "Aristotle's Mathematical Analysis of Exchange",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969, 1(1). 보론 참조. 하지만, “한 채의 집에 몇 켈레의 구두가 교환되어야 하는가는 건축가와 구두장이의 관계에 조응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호혜적 비례가 없으면 교환도 있을 수 없고 어떤 공동 관계 koinonia 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

등가로 여겨 거래를 행한다. 만약 그 비율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애매하면 어느 한쪽이 더 많게 또 적게 가져가는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면 손해를 본 쪽에서는 결국은 다른 시민들과 물건을 주고 받기를 꺼리게 될 것이며 폴리스의 결속은 약화될 것이다. “만약 생산물들간의 비율의 등가가 먼저 확립되고 난 뒤에 주고 받음이 벌어진다면 여기서 말한 요건은 달성될 것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거래는 균등하지 않으며, 시민들간의 상호 작용은 중지될 것이다”(NE 1133a 10-13).

이렇게 그는 경제적 정의의 개념을 확립하여, 경제적 거래가 확장되어 “행복한 삶”이라는 이상을 달성해 줄 폴리스와 가정 경제라는 근본적인 틀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d. 사람들이 ‘돈벌이’에 현혹되는 이유

이렇게 “좋은 삶”을 경제 활동의 규범적 기준으로 확립하기만 한다면, 살림살이 활동이란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생겨나는 것이라는 본래의 경제 생활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명쾌한 경제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당시의 아테네 사람들 다수는 경제란 돈벌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목적수단의 전도를 보이기까지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한탄한다. 어째서 이런 행태가 나타나는 것일까. 예전부터 영리적 상업을 해오던 저 장뿔뱅이들이나 고리대금업자들처럼 천성적으로 치사하거나 데데해서 -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이다 - “행복한 삶”을 외면하고 돈을 쫓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저버리고 다 그 뒤를 따라 “돈벌이의 기술”에 삶을 던지는 것일까.

먼저, 스스로는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돈벌이의 기술”에 전력을 바치는 자들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엔 이들은 “행복한 삶”의 올바른 의미를 잘 깨우치지 못하고 “육체적 향락”과 혼동하고 있는 이들이다. 육체적 향락이라는 목적을

다.”(NE 1133a 23-26. 강조는 인용자)의 구절로 보아, 그 비율이라는 것이 교환 당사자들간의 사회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듯 하다. 이 “호혜성으로서의 정의”의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는 대목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같은 공동체 성원간의 호혜성은 단순한 균등성의 그것이 아니라 비례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추구하는 데에는 꿈쩍없이 돈이 그것도 한없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러니 이들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돈을 벌려 기를 쓰는 삶은 “강박 속에 허덕이는 삶”이라고 하여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다(NE 1096a 5-6).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행복한 삶”에 대한 지적인 착각 이외에 실로 절박한 이유 하나를 제시한다. 그것은 “행복한 삶” 이전에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할 경우이다. 어디에라도 취입이 되지 않으면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하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사회의 서민들이 이 경우일 것이다. “[돈벌이에 몰두하는] 성향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좋은 삶이 아니라 생존 수단에 대한 불안감을 갖기 때문이다. 생존에 대한 욕망은 무한하므로 생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욕망도 무한한 것이다”(Pol. 1257b 41-1258a 2). “행복한 삶”이니 뭐니 해도 그게 다 최소한의 생계가 걱정이 없을 때의 이야기이다. 물리적 생존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라면 전력을 기울여서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 이 경우 헤시오도스가 비통하게 읊조린대로, “인생의 의미는 굶주림을 면하는 것”일 뿐이다.

토마스 루이스 Thomas Lewis 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들의 생계 수단 확보가 이렇게 항상 불안해지는 원인을 시장 경제의 불안정성에 돌렸다고 본다¹¹⁵⁾. 그러한 시장 경제하에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존재적 안정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돈벌이에 골몰해야 하므로, 폴리스적인 생활이고 “행복한 삶”이고 뭐고 다 파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좀 더 안정성이 높은 호혜적 선물 등의 자연적 교역으로 시장 경제를 대체하고자 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였다는 것이다.

3) 소결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에서는 이와 같이 “좋은 삶”이라는 것이 경제 활동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과 품목까지 규제하는 규범적인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돈벌이 경제에 있어서 수익성이라는 것이 목표이자 규범이 된다고 한다면, 살림살이로서의 경제에 있어서는 “좋은 삶”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베버가 말하는대

115) Thomas J. Lewis, "Acquisition and Anxiety: Aristotle's Case against Marke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11(1), 1978

로, 형식적 합리성이 가장 발달한 형태로서의 자본 회계 합리성에 있어서도 수익성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실질적 합리성에 있어서도 “좋은 삶”이 목표이자 규범의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아가 “좋은 삶”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의 구체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4장의 문제 제기 부분에서 지적하였듯이, “좋은 삶”의 내용과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내용적인 모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따라서 “좋은 삶”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일정한 인간 집단의 토론과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폴리스와 같이 그러한 토론과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존재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의 말대로, “신이나 짐승”이 아니고서는 “좋은 삶”의 내용을 혼자서 정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는 애초부터 집단적 토론과 합의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제적 합리성의 제도적 차원을 인식할 수 있다. 베버도 지적하고 있지만, 형식적 합리성과 자본 회계 합리성이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데에 있어서도 합리적 계산을 가능케 하는 제반의 제도적 장치들이 구비되어야 하며, 특히 가격을 산출하는 상품 시장 나아가 자본 시장의 전면적 발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¹¹⁶⁾ 만사만물에 가격을 매긴다고 하는 행위가 현실성을 갖는 기초는, 다른아닌 그 가격의 화폐를 제시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즉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시장이라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격의 설정과 계산이라는 것도 공허한 숫자놀음에 불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실질적 합리성이라는 것도 그것이 사회 생활과 경제 생활을 조직할 수 있는 구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하여 현실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제도가 존재해야만 한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실질적 합리성의 내용적 공허함이란 사실 바로 이러한 현실적 제도의 부재에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핵심적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아레테 *arête*란 무엇이나”고 물으면서 시작된 질문, “좋은 삶”이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 플라톤처럼 초월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재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을 선택한다면, 폴리스라는 제도가 대답의 열쇠를 쥐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6)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의 진화 과정이 막스 베버의 《일반사회경제사》의 주된 주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맹점 하나를 지적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좋은 삶”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폴리스처럼 성원들의 토론을 통해서이든 아니면 중세 때처럼 종교 기관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결정하든, “좋은 삶”을 사회가 제시해야 한다는 당위는 근대 세계에는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실질적 합리성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경제 생활에서의 규범적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는 내용이 사라져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19세기의 이른바 헌정주의 국가 constitutional state 는 경제 문제에 대해 일체의 개입을 삼가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국민들의 “좋은 삶”의 내용에 대한 토론과 합의라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가 맡았던 역할을 원천적으로 방기한다는 것을 뜻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케인스주의적 복지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고, 국가는 전체의 복리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공공재 public goods “을 어느 만큼 공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회복하게 되며, 이에 민주주의 또한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의 이른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다시 이러한 국가의 성격을 탈각시키고, 오로지 재정에서의 그리고 경제 성장과의 관련 속에서의 형식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통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로 되돌려 놓았다.¹¹⁷⁾ 그리하여 “공공재”라는 것의 성격도 다시 모호해지고, 일률적으로 (자본) 시장에서의 형식적 합리성에 따라 공공 부문과 국가를 재편해야 한다는 사유화 privatization 의 논리가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 전체의 중요한 역할 하나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좋은 삶”은 무엇이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논의를 추동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합의된 바들을 실제의 세계에서 실행하고 또 조달하는 조직적 장치이며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제도적 영역이라는 점이다. 방금 말한 대로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국가의 성격이 전환되면서 민주주의의 성격과 영역 또한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이 1990년대 이후의 현실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삶에서

117) 국가가 이러한 형식적 합리성의 함정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좋은 삶”과 복리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실질적 합리성을 행정의 원리로 회복해야 한다는 라모스 Alberto Guerreiro Ramos 의 주장에 대해서는 Curtis Ventriss and Gaylord George Candler, “Alberto Guerreiro Ramos, 20 Years Later: A New Science Still Unrealized in an Era of Public Cynicism and Theoretical Ambivale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5(3), 2005.

“좋은 삶”의 내용에 대한 토론과 합의 그리고 그에 입각하여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장 또한 모호해졌다. 그렇게 되자 실질적 합리성은 그 구체적 내용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소실되면서 더욱 그 내용이 모호해졌고, 그 때문에 현실의 경제 생활을 조직할 수 있는 사고들의 위치가 더욱 미약해지는 악순환 과정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들은 바로 그렇게 모호해진 전체의 “좋은 삶”을 회복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로 깔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가치 등의 임무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조직은 이를 통해 국가가 잃어버린 실질적 합리성을 회복하고 그 내용을 담지하는 역할을 맡아 나갈 수 있고 또 그러한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어떤 가치나 어떤 사물 혹은 사건이 시장에서 화폐로 따져보았을 때의 가치가 무엇이건,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삶에 있어서 지켜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구현하려 드는 조직과 영역이 있다면, 그 가치나 사건 혹은 사물은 실질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중요한 사용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좋은 삶”을 규범적 기준으로 삼는 실질적 합리성이 구체성과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혜안을 빌어, 옛날의 폴리스가 맡았던 역할을 사회적 경제 영역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좋은 삶”이라는 실질적 합리성의 규범적 기준의 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서 인간 발전 human development, 즉 모든 사람들이 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은 시사하고 있다. 단순히 의식주와 같은 생리학적 필요의 충족으로는 부족하며, 또한 막연하게 개개인들 저마다의 인생관과 감각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놓아둘 수도 없다. “좋은 삶”의 규범적 기준은 모든 이들이 자기가 타고 태어난 정신적 육체적 욕구와 역량을 최대한 발전시켜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에게 또 집단적으로도 이러한 피어나는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 합리성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2장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칼 윌리엄 캡의 작업 특히 그의 ‘사회적 최소한 social minima’의 개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캡 또한 인간의 욕구를 완전히 개인의 선호에만 맡겨두는 공리주의의 입장을 지양하고 중요한 욕구에서 그렇지 않은 욕구로 일정한 객관적 위계 서열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욕구들을 모아 사회적 최소한의 개념을 제시하였던 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개개

인의 사회적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생필품들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것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가 지향해야 할 실질적 합리성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모든 개인과 사회 전체가 스스로의 삶을 피어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조달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합리성의 준거 원칙이 되는 것이다. “돈이 되든 되지 않든”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육, 보건, 의료, 환경,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또 조달해나가는 활동이 사회적 경제의 활동이 되어야 한다.

5. 맺으며: 살림살이, 연대, 좋은 삶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듯, 우리는 칼 폴라니 및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에 입각하여 볼 때, 살림살이, 연대, 좋은 삶이라는 세 개의 열쇳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열쇳말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구성한다는 것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좋은 삶”이라는 규범적 기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실질적 합리성은 논리적으로 일관되면서도 다양한 사건과 사물을 평가하고 조직할 수 있는 구체적 원리로서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삶”에는 항상 그것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기 위한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활동이 수반되며, 이러한 경제 활동은 다시 “좋은 삶”이라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명확해지는 실질적 합리성을 필요로 한다. 또 이러한 ‘살림살이’ 경제 활동은 사람들의 자발적이고도 전면적인 연대의 조직을 그 주체로서 또 도구로서 전제로 할 경우가 많으며, 어떨 때에는 필연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연대라는 것도 이러한 “좋은 삶”의 비전을 공유할 때에만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할 구체적인 필요로 추동될 때에만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 세 개의 열쇳말은 서로 맞물려 있으며, 함께 뭉쳐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적 경제를 이 세 개의 열쇳말을 조합하여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전체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전면적인 연대를 통하여 조달해 나가는 활동과 영역”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 연대 경제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라고 부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사회적 경제를 국가 및 공공 부문 그리고 시장 경제의 영역과 그 정체성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어째서 사회 연대 경제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고유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더 확고하게 알 수 있다. 먼저 시장 경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세 Jean Baptiste Say 이후로 시장 경제의 신봉자들이 믿고 있는대로, 시장은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들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달해 오는 주요한 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경제의 활성화가 19세기 이후로 인류에게 미증유의 물질적 발전과 진보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경제는 결코 인간의 “좋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해 줄 수가 없다. 칼 폴라니가 로버트 오언의 혜안을 빌어 갈파하였듯이, 시장 경제는 인간의 개

인적 이기심이라는 동기로 조직되며, 또 화폐적 계산이라는 형식적 합리성 및 자본 회계의 합리성을 원리로 조직되는 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 이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화폐로 계산이 가능한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들만이 시장 경제에서 조달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몇 천년간 인류가 꿈만 꿀 뿐 도저히 조달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것도 순식간에 기술 발전을 통하여 조달에 성공해 낸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아주 기초적이고 간단한 것들도 결코 조달해 낼 수가 없다. 스마트 폰과 좋은 교육이라는 두 가지의 재화 및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후자는 학생의 지적 도덕적 육체적 발전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교육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지적인 능력을 가진 교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교사를 시장 경제라는 방법으로 조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로서 시장 경제가 조달해 주지 못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개인의 욕구 충족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충족할 수단이 화폐적 합리성 - 즉 재산성 - 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시장에 상품으로 나와있지 않은 경우. 둘째, 개인의 욕구가 아닌 집단의 욕구 예컨대 좋은 공공 도서관이나 체육 시설에 대한 욕구와 같은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방법은 시장 경제 이외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국가 및 공공 부문 또한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의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시 두 가지 이유에 비롯된다. 첫째는 국가의 성격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이상적인 폴리스라든가 전성기 때의 케인스주의적 복지 국가와 같은 국가들은 실질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시민들과 전체 공공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스스로의 존재 이유로 삼고 있는 경우였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이전까지의 근대 국가는 이른바 국가 이성 *raison d'état* 이라는 것을 그 조직 원리로 삼고 있었으니, 군주가 대표하는 국가의 권력 팽창과 영광의 증진에 필요한 것 - 주로 군사력 증강과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들 - 이 무엇인가라는 원리가 그것이었다. 또한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현대의 신자유주의적 국가는 재정 건전성 등 형식적 합리성의 수호를 그 존재 이유로 표방한다. 이렇게 국가의 성격이 다양하게 변하고 달라짐에 따라서 국가가 조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선은 가변적으로 계속 바뀌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른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국

가가 아니라면, 국가가 조달할 수 있는 것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는 국가라는 도구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이다. 국가의 활동은 국민의 세금을 그 자원으로 활용하며, 법령과 행정을 방법으로 사용하며, 관료적 공무원 조직을 그 도구로 쓰게 되어 있는 바, 이 세 가지 각각에서 파생되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의 조건에서 만족스럽게 조달될 수 있는 것만이 국가 및 공공 부문이 조달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된다.

그렇다면 이 두 부문의 경계선 안에서 조달되는 것만으로 과연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좋은 삶”을 꾸릴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 번 드러난 바 있다. 칼 폴라니가 지적하는 대로, 19세기의 자유방임 시장 질서에 기초한 문명이 1930년대에 들어 붕괴하게 된 것이 바로 시장 경제가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스럽게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1930년대에 생겨났던 대공황은 이른바 ‘시장의 실패’라는 것의 고전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오면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및 공공 부문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바 있었지만, 이 또한 1970년대의 이른바 복지 국가 혹은 재정 국가의 위기라는 사태와 함께 그 한계가 뻥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다시 시장 근본주의가 대두하면서 시장 질서에 내맡겨 둘 때에 최고의 후생이 달성될 것이라는 생각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이 또한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로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하게 되었다. 요컨대, 지난 200년간의 자본주의 역사를 볼 때, 국가 및 공공 부문 그리고 시장 경제라는 것만으로 개인과 집단의 “좋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족스럽게 조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지될 수가 없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2장에서 살펴보았던 칼 폴라니의 희소성 명제에 대한 논박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설령 수단이 부족하다고 해도 목적과 수단이 단일한 상태라면 그야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없는대로 살아갈” 방법 밖에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시장 경제와 국가 및 공공 부문이 조달해 주는 것만으로 자신 개인과 전체의 “좋은 삶”이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 두 가지 이외의 경제 활동의 영역을 상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며 그대로 참아가며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다른 영역이 있다면 어떨까? 개인과 전체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국가 및 공공 부문 그리고 시장 경제에만 기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전면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조달에 나선다면? 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다. 산업 혁명이 진전되고 세상이 복잡해지며 인간들의 “좋은 삶”을 지향하는 욕구가

세분화되고 시야가 넓어지게 되면 필연적인 사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21세기에 들어서서 사회적 경제의 의의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각광을 받게 된 맥락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과 전체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전면적인 연대를 통하여 조달해 나가는 활동과 영역”이라는 우리의 사회적 경제의 정의는 단순히 사회적 경제를 국가 및 공공 부문 또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적 보조물로 보는 관점과는 큰 차이를 가지게 된다. 사회 연대 경제로서의 사회적 경제는, 우리의 개인적 집단적 “좋은 삶”을 충족시키는 데에 두 영역 모두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자발적인 연대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노력으로서,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사회 혁신 social innovation 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¹¹⁸⁾

이러한 플라니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 연대 경제의 정의에 입각해 본다면, 지금 한국의 사회적 경제 진영은 향후의 이론과 실천에서 어떠한 함의점을 얻을 수 있을까?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 전체를 가버넌스와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하도록 사회의 담론을 추동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펴본 바, 플라니의 관점에서 본 사회 연대 경제라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최근 라비유와 세이먼이 제기한 “시민 사회 및 제 3 부문”의 개념과 유사한 점이 많다.¹¹⁹⁾ 이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 사상이 하이에크로 대표되는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형식적 합리성 그리고 시장의 자유라는 원칙에 압도당하여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의 역량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와 가버넌스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오스트롬 Elinor Ostrom 의 공유지 commons 의 패러다임은 희소성의 선택이라는 이기적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협력과 공유에 기반한 경제 활동의 틀을 제시하며, 하버마스 Juergen Habermas 의 소통 이론은 단순한 합리적 의견의 교환을 넘어서서 집단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기에 라비유와 세이먼은 게레이로 라모스 Alberto Guerreiro Ramos 가 주장하

118) 다음을 참조하라. Marie J. Bouchard, *Innovation and the Social Economy: Quebec Experienc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4).

119) Jean-Louis Laville and Anne Salmon, “Rethink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and Democracy: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Solidarity Economy” in J.-L. Laville et. al. ed., *Civil Society, the Third Sector and Social Enterprise: Governance and Democracy* (London: Routledge, 2015).

는 대로, 국가와 정부 기구가 형식적 합리성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실질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움직인다는 행정 원리를 통해 이러한 대안적 경제 활동의 영역과 민주주의 역량 강화의 시민 사회 영역을 국가와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 모든 노력들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개념으로 칼 폴라니의 ‘실질적 경제’를 이들은 제시한다. 칼 폴라니가 제시했던 경제 통합의 형태들 - 상호성, 재분배, 교환, (가정 경제) - 로 실질적 경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지형 파악을 하고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와 가버넌스의 질서를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담한 이론적 기획은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위상과 영역이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 전체는 단순히 ‘시장의 패배자들에게 생계를 제공’한다는 보수적인 시각에서의 기능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민주주의 강화가 개인과 집단의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조달해 오는 구체적인 경제 활동과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 3부문 혹은 시민 사회의 영역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볼 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재정적 자립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에게 각자 도생의 능력을 강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보다 넓은 시민 사회 전체와 함께 사회 전체의 “좋은 삶”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라는 토론을 광범위하게 일구어 내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달해오는 활동을 조직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와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사회 전체의 합의에 근간한 가버넌스 체제를 수립하면서 재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지원을 받고 또 그 대신 사회 전체가 합의하는 방향을 함께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에 통과될 듯하던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은 결국 통과가 보류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도 일정하게 드러났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그 질적 양적 성장에 걸맞는 위상과 정체성을 아직 담론 진영에서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수많은 불필요하고 근거없는 오해와 적대감을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은 따라서 사회적 경제라는 존재에 대한 사상적 이론적 개념을 공고

화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보인다. 칼 폴라니의 경제 사상은 그러한 작업에 대해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Ⅲ. 폴라니와 다원적 발전 이론: 시론

칼폴라니 사상의 현대 사회과학이론으로의 재기술

Ⅲ. 폴라니와 다원적 발전 이론: 시론

칼폴라니 사상의 현대 사회과학이론으로의 재기술

I, II 부에서 보았듯이 폴라니는 기본적으로 사회철학자지만, 그는 또한 19세기 이래의 자본주의를 분석한 경제학자요, “실체 경제”의 구성을 실증하기 위해 고대와 중세를 연구한 역사학자인 동시에 인류학자였다. 하지만 그가 거대한 전환의 마지막 장(“복합사회에서의 자유”)이 그려낸 미래상으로 현실의 사회를 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의 사회주의란 결국 시장사회와 시장정서를 극복하는 일이고 경제를 매우 다양한 제도 속에 착근시켜서, 결국 사회 안에 다시 묻어버리는 일, 즉 민주주의에 의해 경제를 규율하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일일 것이다.

현실 사회에 대한 그의 분석은 후기 저작보다는 오히려 전간기에 쓴 단편적인 글들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젊은 시절 “붉은 비엔나”의 경험과 사회주의 계산 논쟁은 그가 현실 문제를 직접 다룬 예이다. 블록과 소머스(Block&Sommers, 2014), 데일(Dale, 2010) 등은 이런 경험을 종합해서 미래상을 그려내려 했다. 하지만 그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다. 문헌학적으로 폴라니가 그린 미래상을 그려내기보다 칼 폴라니의 전체 사상에 비춰서 현재를 해석하려는 시도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스티글리츠의 발문(Stiglitz, 2001), 폴라니의 딸인 폴라니레빗의 책(PolanyiLevitt, 2013), 그리고 뷰러웨이의 논문(Burawoy, 2013) 등이 있다.

전자는 I, II부에서 어느 정도 다뤄졌으므로 먼저 뷰러웨이를 중심으로 폴라니 사상에 입각한 현대의 해석을 살펴본다(1장). 이어서 폴라니의 “다원주의”, 또는 “다원적 발전” 개념을 현대의 행동경제학과 진화생물학으로 해석해 본다. 또한 I, II부에서 사상적 근원을 밝힌 사회적경제의 현실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 말하자면 폴라니의 사상에 입각한 미시경제학의 일부를 제시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폴라니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변화의 원리,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현재의 거시경제 메커니즘을 밝혀야 한다. 이 부분은 거의 완벽한 공백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그 가능성을 포스트케인즈주의 거시경제학, 특히 최근에 각광받는 “소득주도성장론”에서 찾으려고 한다. 물론소득 플로우 위주로 파악하는 케인즈경제학이 자산을 포괄하는 이론이 되어야 하고, 단순한 거시 지표

의 균형이 아니라, 폴라니가 강조하는 바, 탈상품화¹²⁰⁾와 에너지와 물질의 균형까지 포함되어야 할 테지만(아마도 생태경제학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나의 능력을 한참 넘어선 일이다.¹²¹⁾

말하자면 III부의 과제는 칼폴라니의 사상에 기초해서 미래의 비전에 반영하고 나아가서 현실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 현대의 사회과학이론으로 재기술하는 일이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연구하고 토론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 어떤 장 정도 그 첫 걸음마가 아무리 서투르고 엉터리일지라도 누군가의 한 걸음으로 시작될 테다.

120) 폴라니 식으로 표현하면 허구의 상품인 자연, 인간, 화폐가 사회에 재착근되어야 한다.

121) 아주 초보적인 방향은 정태인, 이수연 (2013)에 소개되어 있다.

1. 세계 금융위기와 거대한 전환, 그리고 대응운동

케인스의 《일반이론》은 1936년에, 《거대한 전환》은 1944년에 출간됐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로 이미 대중적 명성을 얻은 케인스의 일반이론은 즉각 환호와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거대한 전환에는 거의 아무런 반향도 없었다. 하지만 폴라니는 역사학자, 인류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실천가로서 광범한 족적을 남겼으며 그의 삶의 다양한 경향이 흘러들어 일가를 이루고 또 거기에서 남은 생의 이론과 실천이 비롯된 원천이 바로 “거대한 전환”이다.

거대한 전환은 19세기로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에 절정에 이른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시장의 단일 원리로 사회를 조직할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은 도저히 상품화할 수 없는 인간, 자연, 화폐마저 ‘허구의 상품’으로 만들어냈다. 물론 그 과정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주장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었고 기실 ‘국가계획’에 의해 진행됐다. 영국의 1834년 구빈수정법(구빈법의 폐지와 노동시장의 확립), 1844년 필 은행법(금본위제의 채택과 중앙은행의 설립), 그리고 1846년 반 곡물법(자유무역주의의 채택)이 핵심 수단이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이중의 운동’의 첫 번째 운동이며 그 결과 사회는 파멸로 치달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그것이 두 번째 운동이다. 이 두 번째 운동은 물론 사회운동(예컨대 노동조합과 최저임금법)이 핵심이지만 보수집단의 저항(예컨대 스피넘랜드법)이나 부작용을 막으려는 관료들의 실용적인 정책(예컨대 보호관세)도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서, 폴라니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의 뉴딜과 파시즘 역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운동으로 본다. 거대한 전환은 이러한 이중운동에 대한 경제사적 기술이며 시장 자유주의의 허구성에 관한 이론적 증명이다.

케인즈의 “우리 손자들이 누릴 세상”이 그랬듯이 폴라니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 제목 자체가 19세기의 낡은 경제적 자유주의, 자기조절적 시장이 이제 운명을 다하고 거대한 전환을 하기에 이르렀고 파멸적 시장화는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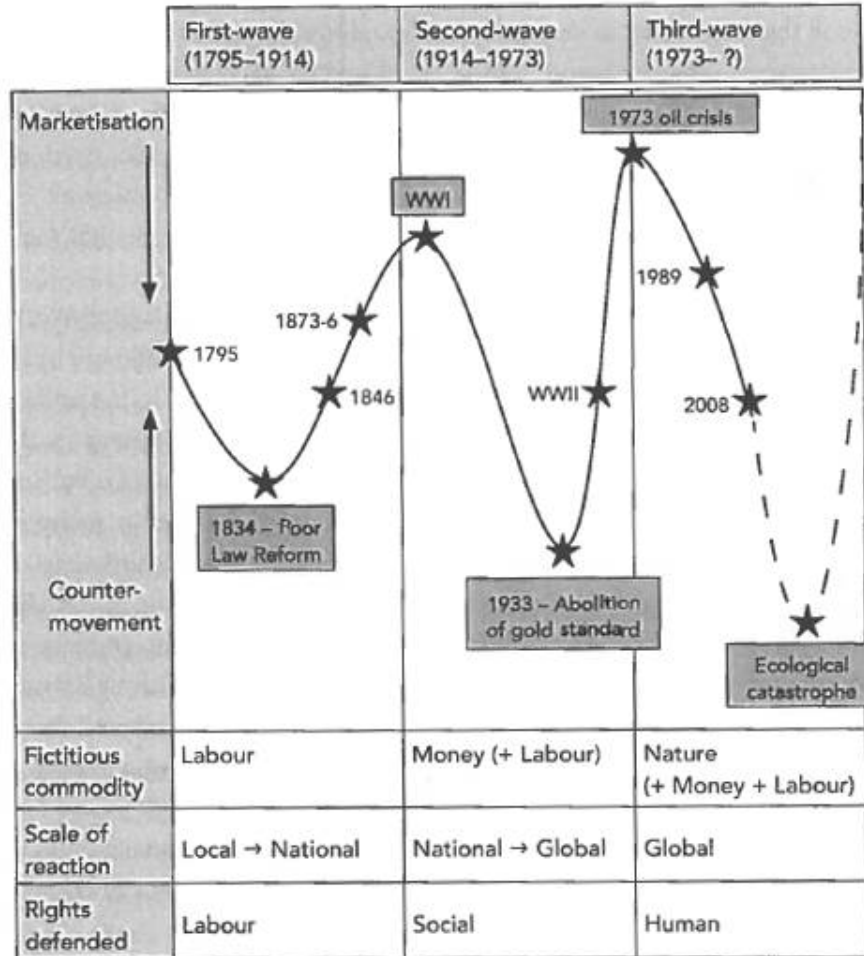
하지만 두 번의 전쟁과 대공황으로 파국을 맞아 사멸했던 ‘시장 유토피아’는 불행하게도 1970년대 중반 이래 글로벌 차원의 신자유주의로 부활했다. 노동 상품화를 한층 진전

시킨 노동시장의 유연화(예컨대 한국의 비정규직법), 자연의 상품화와 사적 소유권의 강화(예컨대 투자자국가제소권), 금융화의 급진전(자본의 완전한 자유이동과 무역자유화) 등이며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개방, 민영화, 긴축), 그리고 이런 이념을 모든 나라에 강제하는 IMF의 대출조건과 WTO 설립(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의 자유화), 그리고 한미 FTA를 거쳐 TPP와 같은 거대 FTA 체결로 최고조에 달했다. 2008년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금융위기는 폴라니의 관점에서 명백히 “자율조정시장”의 파멸이지만 경제적 자유주의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뷰러웨이(Burawoy, 2013)는 이 과정을 맑스주의 관점에서 재정리했다.¹²²⁾ 그는 폴라니의 낙관이 자본주의의 논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이 논리에 따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장화(marketization)의 세 파도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맑스의 생산 위주 사고 역시 비판했다.

122) 폴라니레빗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뷰러웨이의 이 논문이 폴라니의 사상을 가장 잘 요약했다고 평가했다.

Figure 2.1: Three waves of marketisation



출처: Burawoy, 2014, p.40

<그림1> 시장화의 세 물결

그림에서 보듯이 세 파도의 주요 계기는 1834년의 빈곤법 개정, 1933년의 금본위제 폐지, 최근의 생태위기이다. 이 주기에 따라 주요 위기의 성격과 과제도 달라졌는데, 첫 번째 파도(1795-1914) 때는 주로 노동의 허구적 상품화가 문제였으며, 두 번째 파도(1914-1973) 때는 화폐의 허구적 상품화(즉 금본위제와 노동의 재상품화)가 문제였다. 그리고 현재의 세 번째 파도는(1973-현재) 자연의 상품화(화폐의 재상품화, 노동의 재재상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각에 대한 대응운동의 규모는 첫 파도에는 지방에서 국민국가단위, 두 번째 파도는 국민국가단위에서 글로벌 단위로, 그리고 세 번째 파도 때는

글로벌 단위로 확대되었고, 이 대응운동이 지키려 했던 권리는 첫 번째는 노동권, 두 번째는 사회권, 세 번째는 인권 그 자체로 확대되었다.¹²³⁾

즉 뷰러웨이(그리고 E.O. 라이트)는 초기 맑스주의의 경제결정론을 기각하고 폴라니의 비결정론을 수용한 것이다. 좁은 의미의 계급적 시각을 벗어나 현실적으로 어디에 모순의 중심이 있는지를 ‘시장화’라는 관점에서 조명하여 노동과 자본의 모순(1파동), 생산과 교환의 모순(2파동), 생산과 환경의 모순(3파동)으로 핵심적인 과제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학적 사회주의(라이트와 뷰러웨이 등)의 현실인식과 실천적 주장은 현대 폴라니주의와 같은 방향을 향한다. 라이트의 “현실 유토피아”(Real Utopia)는 제도적 다원주의와 이질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폴라니의 다원적 발전과 통한다.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단일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화(empowrment)가 다양한 제도적 형태에 대해 공간을 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양한 제도 형태의 예로 노동자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프로젝트, 국영 은행과 국영기업, 기업의 사회민주적 규제, 연대 금융, 참여 예산 등을 열거하고 있다.¹²⁴⁾ 폴라니의 다원적 발전론을 재구성하려면 이들의 주장에

Table 2.1: Three waves of Marxism

	First wave (1795–1914)	Second wave (1914–1973)	Third wave (1973– ?)
Contradiction	Capital–labour	Production–exchange	Production–environment
Socialism	Utopian	State	Societal
Marxism	Classical	Soviet–Western–Third World	Sociological–Global
Debates	Dynamics of capitalism	State regulation	Real utopias
Methodology	Theory guides practice	Practice guides theory→Autonomy of theory	Dialogue of theory and practice
Universalism	Linear	Imposed	Built from below

123)

출처: Burawoy, 2014, p.48

뷰러웨이에 따르면 맑스주의 역시 세 파도를 이루게 된다. 첫 번째 파도 때는 자본-노동의 모순을 중심으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가 나타났고(고전적 사회주의), 두 번째 파도 때는 생산-교환의 모순을 중심으로 소비에트사회주의-서구사회주의-제3세계 사회주의로 분화했다. 이때는 국가가 규제하는 사회주의 중심의 사고(소비에트-서구-제3세계 사회주의)가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파도 때는 생산-환경을 중심으로 사회적 사회주의가 되었으며 이제 폴라니와 마찬가지로 현실 유토피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사회학적 사회주의).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사회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국가, 지역 등 각 차원에서 진행된 사회의 양극화, 인류의 절멸까지 우려하게 만드는 기후 온난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가 그것이다. 물론 플라니의 이중 운동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 유연화에 대한 저항, 생태주의 운동, 1999년 시애틀에서 폭발한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 FTA 반대 운동 그리고 현재 논쟁 금융규제 방안 및 IMF의 출자 구성 전환, 각국의 자 연보호입법 및 사회보호 입법(예컨대 오바마의 건강보험 도입 정책) 등이 그것이다.

위기의 대안이 뚜렷하지 못할 때 발호한 파시즘의 가능성마저 플라니의 시대를 닮았다. 과연 세계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더욱이 한국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이어 박근혜정부가 밀어 붙이고 있는 서비스산업 민영화와 비정규직법 개악은 말 그대로 “완전한 파괴로 향해 뛰어드는 것(plunges into utter destruction)”이다. 파국이 증명됐는데도 더더욱 시장만능의 정책을 사용하는 만큼 인간과 자연의 생명은 바야흐로 절벽 끝에 몰 렸다.

플라니의 후계자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각종 반대 운동에 내재해 있는 제도 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하위 시스템으로 연결해 나가 결국 전체 시장시스템에 도전하려는 광의의 제도주의 작업을 하고 있다(특히 칼 플라니 정치경제연구소). 이들이 퀘벡을 중심 으로 사회적경제와 공공경제의 결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플라 니 사상의 현실화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플라니는 또한 맑스주의 고유의 난점인 ‘계급과 대중의 괴리’문제도 해결해 줄지 모른 다. 특히 산업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단기 이익에 빠진 현실(로버트 라이쉬가 적절하게 묘 사했듯이 대기업 노동자들은 동시에 소비자이며 투자자가 되었다)에서 이들이 공동체 전 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자기 고유의 이익마저 지키지 못하리라는 플라니의 지적 은 날카롭다(제13장, 제15장). 즉 플라니에게 계급과 그 역할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이익집단과의 토론과 학습을 통해 시장시스템의 폐해를 막아낼 때 비로소 대응운동 의 주역(agency)이 될 수 있다. 플라니에게 사회주의란, ‘복합사회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결사체)민주주의에 다름 아니다(제21장). “사회주의는 그 본질에서 자기조정 시장을 극 복하기 위해 그것을 민주적 사회의 명령 아래에 의식적으로 복종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산업 문명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경향이였다. 이는 산업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결책이었다”(p559) 시장을 다시 사회에 '묻어 들어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해야 할 일이며 이는 틀림없이 산업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플라니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경제는 사회에 묻어 들어가야 하며, 동시에 경제학은 윤리와 도덕 안에 묻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에 따라 “거대한 전환”을 이뤄 내고 그 전환이 끊임없이 진화하면서도 일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폴라니의 사상의 미시적 기초¹²⁵⁾

1) 폴라니의 사회적 통합양식 - 인간성과 제도의 다양성¹²⁶⁾

“이통합의 형태들, 즉 상호성, 재분배, 교환은 경제의 다양한 수준과 상이한 부문에 병렬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들 중 지배적인 것을 꼽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종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형태는 경제의 부문과 수준 간에 분화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경제과정을 기술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경제의 끊임없는 변화에 질서를 부여하게 된다”(Polanyi 1957, p255).

폴라니의 이 구절은 다른 문헌에도 반복해서 나타난다. 폴라니가 자기조정시장, 경제적 결정론을 비판할 때,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인류학과 역사학에서 이미 증명되어 있는 바로 위 문장이었다. 즉 현실의 어느 사회에서도, 심지어 30여년간 신자유주의가 휩쓸어 제도와 사람이 시장 일변도로 흐른 현재에도 상호성과 재분배에 의한 사회통합은 엄연히 존재한다.

폴라니가 일관되기 비판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경제학의 인간관은 현대 행동경제학에 의해서 무너졌다. 물론 여타 사회과학에서는 이 인간관을 끝없이 비판했지만 경제학 내부에서 이견이 나타났고 적어도 현실이 그렇다는 점을 경제학자들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실의 일반인들을 향한 실험에서 인간은 이기성과 함께 상호성을 언제나 일관되게 나타낸다.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최후통첩게임이나 공공재게임의 결과가 이를 증명

125) 이 부분은 2014년 가을의 칼폴라니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한 피피티를 글로 재정리한 것이다. 그것은 “협동의 경제학”에서 행동경제학, 진화생물학 등으로 정리했던 아이디어를 폴라니의 언어와 사상으로 재규정하는 일이다. 어쩌면 협동의 경제학 자체가, 그 옛날 대학원 때 읽었던 것들이 의식의 심연에 스며들어 있다(embedded) 슬슬 기어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케인즈가 일반이론 마지막 페이지에 쓴 바,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지적 영향도 받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보통은 죽은 경제학자의 노예”라는 문장을 증명한 셈이다. 참고로, 학회의 노학자들은 내 발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단순히 영어를 못했기 때문 만은 아닐 것이다.

126) 이 절의 설명은 정태인, 이수연, 2013의 1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다. 그렇다면 플라니의 사상을 행동경제학(진화생물학과 진화심리학)에 의해서 재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그의 역사적, 인류학적 증거를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실험과 현장 증거를 통해서 증명된 바지만 협동이라는 인간 행위는 상호성에 입각해서 설명된다. 상호성은 지난 30년간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의 인기 연구 주제 중 하나였다. 실로 (강한) 상호성은 협동의 기초이며, 따라서 “공공재의 딜레마”나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원천이다.

사회적 딜레마는 전체의 합리성과 개인의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되며, 실로 인류의 윤리와 종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해서 모든 종교나 윤리에는 황금율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황금율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장 12절)는 성경 구절이나 “己所不欲 勿施於人”(논어 12장) 공자 말씀, 그리고 불경¹²⁷⁾이나 코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근대 계약이론의 각종 학설도 결국 이기적 행동에 의한 갈등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과거의 상호성에 입각한 윤리학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탈주했다. 즉 국가가 무임승차자를 규제하거나, 또는 시장 가격이 조절할 수 있다는 사상이 그것이다. 개인을 발견한 근대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시장이라는 탁월한 제도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그 자체로 개인을 억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회적 동물”¹²⁸⁾로서의 인간을 “악마의 멧돌”처럼 갈아버릴 수 있다. 플라니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일정한 사회적 규범 하에서 “공동선”(common good) 또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즉 사회의 복귀가 필요한 것이다. 내 생각에 사회의 복귀란 곧 인간의 본성 중 상호성이 다시 제 자리를 찾는 길이다.

상호성에 관해서 여기서는 수학으로 표현되어 가장 간명하게 보이는 노박¹²⁹⁾의 이론으

127) 예컨대 “내가 살기를 좋아하며 죽음을 좋아하지 않으며 쾌를 좋아하고 고통을 달가워 하지 않는 누구의 생명을 빼앗는다면 이는 그에게 유쾌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일일 것이다. 나에게 즐겁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것은 그에게도 마찬가지이 때문이다”(Samyutta Nikaya V pp 353-354)나 “네가 자신을 사랑하는 대로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코란의 말씀은 모두 유사하다.

128) 플라니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관에 관해선 II부를 참조하기 바란다.

로 설명한다.

<표1> 협동진화의 5가지 규칙

	Payoff matrix		Cooperation is...				
	C	D	ESS	RD	AD		
Kin selection	C	$(b-c)(1+r)$	$br-c$	$\frac{b}{c} > \frac{1}{r}$	$\frac{b}{c} > \frac{1}{r}$	$\frac{b}{c} > \frac{1}{r}$	r ...genetic relatedness
	D	$b-rc$	0				
Direct reciprocity	C	$(b-c)/(1-w)$	$-c$	$\frac{b}{c} > \frac{1}{w}$	$\frac{b}{c} > \frac{2-w}{w}$	$\frac{b}{c} > \frac{3-2w}{w}$	w ...probability of next round
	D	b	0				
Indirect reciprocity	C	$b-c$	$-c(1-q)$	$\frac{b}{c} > \frac{1}{q}$	$\frac{b}{c} > \frac{2-q}{q}$	$\frac{b}{c} > \frac{3-2q}{q}$	q ...social acquaintanceship
	D	$b(1-q)$	0				
Network reciprocity	C	$b-c$	$H-c$	$\frac{b}{c} > k$	$\frac{b}{c} > k$	$\frac{b}{c} > k$	k ...number of neighbors
	D	$b-H$	0				
Group selection	C	$(b-c)(m+n)$	$(b-c)m-cn$	$\frac{b}{c} > 1 + \frac{n}{m}$	$\frac{b}{c} > 1 + \frac{n}{m}$	$\frac{b}{c} > 1 + \frac{n}{m}$	n ...group size m ...number of groups
	D	bn	0				

출처: Nowak, 2006, p1562

앞의 두 열은 “죄수의 딜레마”가 5가지 규칙(혈연선택, 직접상호성, 간접상호성, 네트워크상호성, 집단선택)에 의해 “사슴사냥게임”으로 변화한 것을 보여준다. 사슴사냥게임이 되었다는 것은 이기적 인간도 (협력, 협력) 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상호 신뢰를 할 수 있을 때만 그러하다.

수학적으로 사슴사냥 상태에서도(현실에서 협동의 이익이 모두에게 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상호신뢰가 없으면 (배반, 배반)을 택할 수 있다. 이런 상호신뢰를 돕는 것이 제도, 규범, 네트워크 등이다. 제도는 물질적 인센티브나 물리적 제재와 같은 법과 규칙(노스의 공식적 제도)을 말하며 규범은 위반할 때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도덕적 규율(노스의 비공식적 제도)이다. 플라니가 사회제도와 함께, 시장정서(market mentality)를 바꿀 수 있는 규범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제도를 강화하면 오히려 규범이 무너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아이의 심부름에 돈을 쥐버릇하면 돈 없이는 심부름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제도가 사람을 만

129) 노박의 대중적 서적 “초협력자”가 출판되어 있는데, (아마도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Nowak을 노왁이라고 표기했다.

들 수 있다.¹³⁰⁾

한편 <표1>에서 $r, w, q, k, n/m$ 은 모두 c/b 라는 비용/편익의 비율과 비교된다¹³¹⁾. 각 규칙에 조응되는 특수한 관계의 척도(r =유전자 공유 비율, w =거래의 반복확률, q =타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정도, k =이웃의 크기, n/m =집단크기/집단의수)와 경제적, 또는 생물학적 수익률(의 역)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원용해서 시장 관계를 해석하자면 r 의 크기를 최소화해서(즉 익명성) 수익률이 낮아도 협동(거래)이 이뤄지도록 만드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민주주의는 토론을 통해서 (특히) 직간접 상호성에 의해서 협동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에 관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규칙들을 모아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협동의 규칙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7원칙	오스트롬의 공유자원 관리 8가지 규칙	노박의 인간협동의 5가지 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와 공동이용 2. 민주적 의사결정 3. 참여 4. 자율성 5. 교육 6.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7. 공동체에 대한 기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계의 확정 2. 참여를 통한 규칙 제정 3. 규칙에 대한 동의 4. 감시와 제재 5. 점증하는 제재 6. 갈등해결 메커니즘 7. 당국의 규칙 인정 8. 더 넓은 가버넌스 존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혈연선택 2. 직접상호성 3. 간접상호성 4. 네트워크 상호성 5. 집단선택
	<p>*이후 연구를 통해 협동을 촉진하는 미시상황변수 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소통 2. 평판 3. 한계수익 제고 4. 진입 또는 퇴장 가능 5. 장기적 시야 	<p>*이후 행동/실험경제학과 진화생학이 찾아낸 협동촉진 변수 추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주의적 소통 2. 집단정체성 3. 사회규범의 내면화

출처: 정태인, 이수연, 2013, p346

130) 이스라엘 하이파 유치원의 실험이 대표적이다. 이 실험은 물질적 인센티브가 사람의 도덕적 규범을 변경해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경영학의 당연한 정책들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1) 생물학의 해밀턴 법칙에 유비된다.

노박은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협동이 일어나는 5가지 조건을 추출했고(Nowak, 2006, 2012) 오스트롬은 전 세계의 공유자원(공동으로 이용하는 숲이라든가 강)관리 사례를 경험적으로 연구해서 8가지 규칙을 찾아낸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Ostrom, 2010). 협동조합연맹(ICA)의 7원칙은 1840년대 로치데일의 경험 이래 그 동안 쌓인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정리한 조직.운영원리이다. 위 표는 이들을 병렬한 것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논리와 경험에서 추론된 여러 차원의 지혜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표는 협동에 관한 인류의 지혜를 총집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협동조합의 제1원칙인 공유와 공동이용은 협동조합에 오스트롬의 8가지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그리고 참여와 교육)원칙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경영에 비해 굵뜨고 중구난방이 되어 비효율적일 것 같지만 오스트롬과 노박의 규칙에서 협동을 촉진하는 필수적 수단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이 돈과 사람의 동원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데 필수적인 제6원칙,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는 오스트롬의 더 넓은 가버넌스의 존재, 그리고 노박의 네트워크 상호성과 집단선택(집단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공유자원 관리의 핵심 주체인 지역공동체는 또한 혈연선택과 집단선택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니 협동조합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협동의 원리는 시장이나 국가, 공동체에 모두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에는 법에 의한 제도가, 시장에서는 개인 간의 계약이라는 제도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테다. 어쩌면 이들 두 영역에서는 애매한 사회규범을 되도록 회피해야 할 존재, 또는 약탈(악용)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흔히 말하는 회색지대가 그렇다. 하지만 공동체에서는 암묵적 규범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를 세세히 법이나 계약으로 규정하는 순간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은 깨질지도 모른다.

이 세 영역과 자연에 각각 어울리는 인간성과 교류양식,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약점을 <표3>에 요약했다. 이 표에서 붉은 글씨가 플라니의 다양한 사회통합방식이다. 이 그림에서 교환, 재분배, 상호성은 각각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이거나 인간 본성이다. 내 나름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플라니의 뜻대로 시장을 다양한 제도에 의해서 규제하고, 결국 사회에 뿌리박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표3>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 생태경제의 관계

	인간본성	상호작용 메커니즘	가치	단점
시장경제	이기성 (Homo Economicus)	경쟁 (교환)	효율성	불평등, 생태문제, “시장심성”
공공경제	공공성 (Homo publicus)	재분배	평등 (공정성)	리바이어던, 관료화
사회적 경제	상호성 (Homo reciprocans)	협동	연대	가부장성, 배제성
생태경제	공생 (Homo symbiotes)	공존?	지속가능성	세대 간 정의의 불가능성

출처: Jung taemin, 2014

각각의 경제제도는 고유의 상호작용 메커니즘과 가치, 그리고 약점을 지니는데 이들 경제제도를 어떻게 배열하느냐는 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적어도 이 네가지 제도를 어떤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은 사회의 분열, 또는 경직화를 낳을 것이다. 예컨대 1920년대와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낳고 생태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과거의 국가사회주의는 공공경제라는 제도로 사회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료화를 통해 사회를 경직시켰다. 사회적 경제 역시 고유의 가부장성이나 외부에 대한 배타성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낸시 프레이저(Fraser, 2013)가 이중운동에 해방을 추가한 삼중운동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여태까지 플라니의 사상을 현대의 사회이론으로 재해석했지만 이런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정책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어설프게나마 작성한 것이 다음 표다.

아래 <표4>는 사회적경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정책방향이다. 즉 사회적경제란 공유자원을 지역 주민이 이용해서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경제이며 이는 협동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표4> 협동의 규칙과 정책방향

협동의 규칙	장단점과 정책방향
공유와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와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란 공유자원의 생산과 이용 • 공유 이익과 비용의 공정한 분담 • 토론과 의사소통 참여에 의한 딜레마 극복
지역공동체와 네트워크,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는 혈연선택, 반복거래(직접상호성), 평판(간접상호성)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공간 • 집단 정체성의 형성과 제고 • 집단 경쟁에 의한 집단 내 협동 촉진 • 기술혁신을 위한 개방적 학습시스템(open learning system)의 형성 • 자치체 간 규칙의 일관성(시의 정책과 구의 정책)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공동수립(co-construction)과 공동실천(co-production)은 사회적 경제의 자율성을 전제 •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자율성을 전제, 특히 금융
제도와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적 인센티브 등 공식 제도가 사회의 규범, 특히 도덕 규범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수립 시 반영

출처: 정태인 등, 2014

특히 중요한 것은 함부로 보조금이나 상여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는 규범(민주주의와 협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경제인데, 물질적 인센티브는 그러한 규범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각 경제제도를 적절히 배치해서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방법이 존재할까? 플라니의 사회주의는 곧 민주주의에 의한 경제의 규율이다. 이 원칙이 경제제도 통합의 기본원리일지도 모른다.

2) 플라니의 경제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¹³²⁾-사회적경제, 공공경제, 시장경제의 관계

플라니는 경제민주주의자로도 불린다. 그의 사상은 결국 민주주의에 의해서 시장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32) 이 절의 일부는 이병천, 전창환 편, 2013에 실렸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일까?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김종인 조항)이 그 근거다. 즉 헌법은 소득재분배(복지), 그리고 독점규제(재벌개혁)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헌헌법에는 “이익균점권”이 있었으니 우리 헌법은 유구한 “경제민주화”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란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간다는 뜻일텐데 경제민주주의라는 목표는 어떤 모습일까? 불행하게도 이 질문에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답이 없고 그야말로 백화제방의 상태이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곧 민주주의”라는 프리드만(Freedman, M)의 강변 이래 별 관심이 없었고 정치학자들만 띄엄 띄엄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

경제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학자는 정치학자 달(Dahl, R)이다. 그는 적어도 선진 사회의 정치에서는 “1인 1표”라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규범인데, 경제에서는 왜 “기업 괴물(corporate leviathan)”의 전제주의가 규범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정치과 경제가 대칭적이기 위해서는 “작업장 민주주의(workplace democracy)”가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1980년대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도 나타나는데 보울스(Bowls, S) 등의 “민주적 기업”이 그것이고 프리먼(Feeman, R)은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해서 “공유자본주의론”을 완성했다.

기업 내 민주주의를 넘어 롤스(Rawls, J)는 경제에도 자신의 정의론을 적용한 결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를 이상적 사회로 내세우기에 이르렀다(또 하나의 대안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놀랍게도 롤스는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복지국가가 자산 소유(“생산 자산”, production assets)의 양극화를 용인해서 정의의 원칙인 ‘기회 평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자유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결국 롤스는 자산 및 자본재분배를 주장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사실상 독점의 시정(즉 산업구조 상의 문제)을 중심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국가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달과 프리먼은 기업의 민주화를, 그리고 롤스는 재산소유의 민주화까지 주장한 것이다. 이 모두를 일반화한다면 자신의 삶과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경제민주

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류경제학은, 주주(투자자)를 제외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노력과 보상에 대한 계약을 맺었으므로 잉여(또는 잔여, residual)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고 따라서 그들은 투자자(또는 그 대리인인 경영자)의 지휘,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그럴 때만 이윤극대화라는 기업의 목표가 확실해져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 주위는 이런 믿음과 실천으로 가득차 있다.

하지만 주류경제학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모든 계약의 불완전성(모든 상황을 미리 낱낱이 계약서에 반영할 수도 없으며 완벽한 감시와 처벌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 최근의 행동경제학/실험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의 상호성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더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voice), 정 안 되면 회사나 하청관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exit) 힘을 부여하는 것이 경제민주주의의 핵심 과제가 된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적 기업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노동조합의 네트워크인 산별 노조나 전국 노조는, 일부 유럽의 경우 노동자 정당과 결합하여 복지국가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즉 전국적 노조와 사민주의 정당은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조직률이 5% 수준에 머물고 그들이 지지하는 진보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현실 자체만 보면 한국의 경제민주화의 앞날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사회적 경제는 기업 바깥에서 시작되었으며(소비자 협동조합), 그것이 생산자 조합과 금융부문 조합(협동조합 전문 은행이나 보험 등)으로 발전하여 스페인 몬드라곤이나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캐나다의 퀘벡 등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범주가 주민의 삶을 규정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말하자면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바깥에 존재하는 경제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1원(1주) 1표가 아닌 1인 1표의 원칙에 의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민주주의를 처음부터 내장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경제 역시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내디뎠을 뿐이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경제민주주의의 토대이다. 무임승차자에 대한 응징과 구

성원간의 소통이야말로 협동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와 소통은 사회적경제를 운영하는 원리일 뿐 아니라, 여타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금융위기 이래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UN과 ILO와 같은 국제기구도 사회연대경제를 하나의 분과로 다루고 있다. 이탈리아 등 협동조합이 활발한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경제위기 시에 협동조합의 숫자나 규모가 증가했던 것이 사실이다(삭제).

EU가 9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집중한 것은 복지국가의 한계에 직접 맞닿아 있다.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압력과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그리고 출산율 저하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이 모든 현실의 귀결로서의 전후 사회시스템의 위기는 사회/사회적 경제의 ‘부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첫째로 가난과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둘째로 시장과 국가가 아닌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은 실업과 재정적자라는 면에서는 서구보다 낮지만 기본적인 복지도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양극화가 극단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활발해진 시민주도운동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공동체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문화 및 지역공동체운동을 이끄는 다양한 결사체가 국가 및 시장에 새로운 관계 정립을 요구했다. 밑으로부터의 자조적(bottom-up, self-help) 발전이 새롭게 추구되었다(chantier, 2005 참조).

특히 최근의 금융위기는 플라니의 진단을 돌아보게 만든다. 시장만능의 정책으로 사회가 분열되면 이에 대응하는 운동이 발생한다. 결국 21세기 들어 더욱 활발해진 사회적 경제(운동)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완전한 파괴”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1970년대 중반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한 것은 앙리 드로쉬와 클로드 비네가 오랜 전통의 협동조합, 상호회사와 결사체들의 공통점을 “이론화”하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Laville et. al., 2004). 사회적 경제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 대단히 다양한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이 작업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핵심 요소인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이지만 대단히 역사가 깊다. 맑스, 레닌, 그람시 등 좌파 이론가들은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엥겔스는(따라서 맑스도) “공상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로”에서

협동조합운동의 의의와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정했지만 맑스는 자본론 곳곳에서 협동조합을 유력한 이행 대안 중 하나로 상정했다. 레닌도 신경제정책 이후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그람시는 협동조합이 강한 이탈리아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 진지전의 유력한 물질 토대로 협동조합을 상정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역시 마찬가지로였는데 길드 사회주의 등의 영향을 받은 존스튜어트 밀, 그리고 개혁적 케인즈주의자인 미드는 물론 한계혁명의 왈라스까지도 협동조합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예컨대 밀의 다음과 같은 문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당시 경제학자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협동조합 등;역자) 결사체 형태(the form of association)는, 인류가 계속 발전시킨다면 결국 세상을 지배할 것임에 틀림없다...노동자 자신의 결사체가 평등, 자본의 집단적 소유를 기초로, 스스로 선출하고 또한 바꿀 수 있는 경영자와 함께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형태이다.”(Mill, 1871, Meade,1989, p ix에서 재인용)

따라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어떤 이데올로기적 전통과 곧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국제협동조합(ICA)는 어떤 정치적 성향도 거부했었고 한국의 생협운동 또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이런 측면은, 최근 중국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시민사회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되도록 정부나 이데올로기와 부딪히지 않은 채 온건한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Zhao, 2009). 이것은 협동조합을 품고 있는 사회적 경제라는 범주, 그리고 그 배경이라 할 만한 시민사회가 대단히 넓은 외연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에서 주로 쓰는 “시민경제”(civil economy, Zamagni, 2004, 2005, Porta ed, 2004 등 참조)와 프랑스의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역시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는 데 널리 쓰인다. 이탈리아의 시민경제는 대체로 사회적 경제와 시장경제간의 분리에 반대한다. 시장경제 역시 인간의 상호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¹³³⁾ 반면 프랑스의 연대경제는 공

133) 자세한 설명은 브루니, 자마니, 2015를 참조하라. 80년대 이래 복지국가의 위기와 다시 부흥하는 “사회적 경제”(또는 제3부문)는 이들에게 시민경제 복원, 즉 시민적 인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의 신호탄으로 비춰진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경제를 시장의 보완물이나 국가의 보완물로 보는 견해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들에게 사회적경제는 어떤 한 부문이 아니라 시

공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관련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세 영역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을 독자적으로 키워서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을 꾀하려는 정책, 나아가서 이들 영역에 기초한 전체 경제의 민주화를 노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이론가들이 이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아주 다양한 모습을 취했다.¹³⁴⁾ 자본주의 경제가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원리로 사회가 일원화할 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완전한 파괴’(폴라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형성되고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또 국가부문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유형론은 각국이 사회경제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준다.

영미권에서는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회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비영리단체로 구성된 제3부문을 하나의 실체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자유주의형 사회복지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재단이나 자선단체의 자발적 행위가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의 오른쪽 부분이 영미권의 제3부문, 또는 비영리(NPO)부문에 해당한다. 반면 사회(연대)경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유럽, 그리고 캐나다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Laville, et.al, 2004), 특히 사회복지 시스템이 대륙이나 북유럽에 비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는 협동조합과 신용조합, 상호공제회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사회적경제(new social economy)는 80년대 이래의 유럽의 경제침체, 이에 따른 국가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로 교육,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생겨난 새로운 사회조직(예컨대 이탈리아, 스페인의 “사회적 협동조합”, 포르투갈의 “사회연대 협동조합”, 캐나다의 “연대 협동조합”, 스웨덴의 “보육 협동조합”, 덴마크의 “프로젝트 개발”,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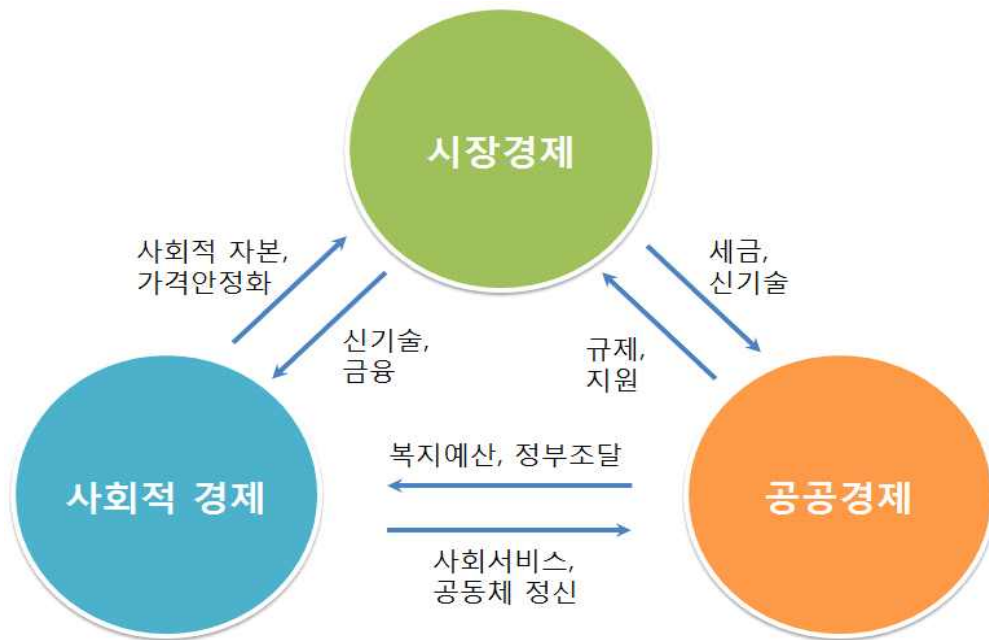
장경제라는 총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동선과 상호성이 작동하는 시장에서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가 이뤄질 수 있다. 저자들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시장은 단순히 물건이 교환되는 장소가 아니며, 인간이 자기 실현을 위해 서로 관계를 맺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사회에서는 전략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시장경제와 분리해서 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4) 심지어 인류는 100만년 가량을 수렵채취시대에 살았는데 이 장구한 기간의 경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인류 생존의 비결이 협동이라고 할 때(노박의 “초협력자”) 이 경제를 사회적경제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공공경제나 시장경제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국과 미국의 “사회적 기업”, “지역개발기업”)들로 과거의 사회적 경제에 비해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회원, 노동자, 소비자, 지역공동체)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것은 현대의 복잡한 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형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국가가 제공했던 사회적 서비스를 “민영화”하면서 시장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담당하게 되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볼로냐시에서는 민영화 서비스의 70%를 협동조합이 이어 받았다. 사회적 기업(영미권)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유럽)이 들은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사회적 배제자들을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최근 2007년 사회적 기업법, 그리고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중 사회적 협동조합 장이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한편 최근 영국의 보수당 정부도 “큰 사회”(big society)를 표방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 좌우파 경제학자가 모두 협동조합을 예찬한 것처럼 위기의 시대에 사회적 경제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을 넘어 지역의 자산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영국의 국가의료체계(NHS)와 같은 기본 복지 시스템을 무너뜨릴 전략이 아니라면 보수당의 이런 정책 역시 거대한 흐름에 편승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자체의 주요 의사결정을 1인 1표로 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이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므로 보수당의 현 정책은 자중지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신사회경제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관계재(relational goods), 연대서비스(solidarity service), 친밀서비스(proximity service)로 불리는데, 이들 서비스는 시장경제나 공공경제가 제공하는 것보다 사회적 경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런 서비스는 수요자가 돈이 부족하거나 공급자의 수익률을 맞추지 못해서(수요곡선에서 균형 가격 아래 오른쪽 부분) 시장경제에서는 아예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데 나는 이를 “시장의 근원적 한계”라고 부른다. 한편 공공경제는 관료적 속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전달에서 경직성으로 보이므로 지역공동체에 뿌리박은 사회적 경제가 더 유연하고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관한 한국의 각종 통계도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서비스(교육, 보육, 의료, 노인 요양), 환경 관련 서비스(재생 에너지, 쓰레기 처리, 조림 등), 문화 서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2> 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와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림 2>는 각 경제제도 간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므로 기술혁신과 금융제도의 발전에 유리하다. 반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자분을 형성하여 전체 사회의 (거래)비용을 낮춰주며 공공경제에는 재정절감의 이익을, 시장경제는 가격안정의 이익을 줄 수 있다. 공공경제는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보통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는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행동규칙을 제공한다.

현재 사회적 경제는 그 비중이 적으므로 시장가격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커지는 경우 시장가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경제는 사회적 자분을 공급하므로 시장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제품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교육과 보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경제는 가격이라는 면에서 시장경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시장경제에 대해서 대안적 경영의 준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의 소비자 협동조합은 대단히 강해서 월마트나 까르푸, 테스코 등이 약탈가격 등을 통해 받 붙이기 어렵다.

한편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하듯 강력한 이윤동기는 여러 측면의 혁신을 이뤄낸다. 이에 비해 ‘연대동기’는 새로운 수요, 새로운 상품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에 뒤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일어난 기술 및 제도혁신을 사회적경제로 수용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에밀리아 로마냐나 몬드라곤이 R&D나 교육을 강조하고 네트워크의 핵심조직으로 대학과 연구소를 세우는 것은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다. 즉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동행하거나 보완하는 존재이며 시장경제의 양극화 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전략에 공공경제, 특히 지방자치체 수준의 공공경제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경제의 규모와 형태는 나라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공공경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복지국가 유형은 각국 사회적 경제의 차이를 일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복지시스템과 사회적 경제의 관계에 관해서는 세가지 가설이 있다(Salamon & Anheier, 2000). 첫째는 이질성이론(heterogeneity theory)인데 시장실패와 국가실패가 동시에 발생하는 곳에 비영리부문(사회적경제)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실패란 다수결 원리에 의해 선택되지 못한 부문에 복지가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질적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복지는 적을 것이고, 동시에 비영리부문은 클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존재에는 대단히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추론은 실증적으로 기각된다(Salamon et.al, 2000, Salamon et.al. 2003). 이 주장은 일단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만 인종문제가 심각한 후진국에는 두가지 실패가 모두 존재하면서도 비영리부문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상호의존론(interdependence theory)은 비영리단체가 국가의 영역에서 활동하지만 국가보다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개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발성의 실패”(voluntary failure) 때문에, 즉 동원 가능한 자원의 부족(“자선의 부족”, phillanthropic insufficiency)이나 “자선의 가부장성”, phillanthropic parochialism) 때문에 비영리 부문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여전히 필요하다. 셋째는 사회적 기원론(social origin theory)이다. 이 가설은 배링턴 무어의 민주주의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론을 전거 삼아서 각국 사회적 경제와 제도의 역사적 궤적에 따라 국가와 비영리부문 간의 관계를 유형화한다.

<표5> 복지국가유형과 비영리부분의 규모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비영리 부분의 규모	
	적음	많음
낮음	국가주의(statist) 일본, 중남미국가	자유주의(liberalist)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영미형 국가
높음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tic) 핀란드 오스트리아	조합주의(corporatist)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Salamon, Sokolowsky, Anheier, 2000, p15(표3)와 p18(그림7)에서 재구성

대체로 유럽국가들은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 강해서 국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역사적 이유), 사회복지 지출이 많아도 소득수준이 높아서 사회경제의 재원조달이 일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으며(경제적 이유) 종교와 시민정신에 따라 자선 등이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사회적 이유). 사회민주주의 모델보다 조합주의 모델의 비영리부분이 더 큰 것은 20세기 초중반에 노동계급 정당에 의해 철저한 복지개혁이 이뤄지기 보다 각 계급의 타협에 따라 전통적 사회경제(구사회경제)가 ‘잔존’해서 복지의 전달체계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모형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인에 따라 정부의 개입을 최소로 억제한 가운데, 개인의 자발성에 의해 사회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하는 경우로 사회복지와 비영리부분이 일정 정도 대체관계를 보인다.

물론 한국은 국가주의유형에 속한다. 1960-80년대 중반의 개발 동안에 국가는 경제발전에 재원을 집중했고 사회복지를 공동체(60년대)와 가족(70-80년대)이 떠맡은 결과 지역공동체가 붕괴 상태에 이르렀고,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에 다다른 후에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여전히 사회복지가 최소한으로 제약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나는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이 한국의 자생적 사회적 경제를 완전히 뿌리뽑았다고 생각한다. 일제 시대인 1920-30년대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 내의 각종 협동조합, 상호공제회, 두레 등이 총독부와 관제 협동조합에 의해 해산당했고 1960년대에 부활한 민간 협동조합(신협, 소비조합) 운동은 새마을운동(새마을금고 포함)에 의해 사실상 제거되었다.

한편 한국의 교육이나 의료복지의 확대는 공적 보조금을 받아 시장경제가 전달하는 경로를 따랐다. 1990년대 중반 이래의 ‘시장화’ 기조 속에서 병원이나 학교 등 사적 조달의 주체들은 스스로의 이익 추구를 위해 미국식 제도를 요구하면서도 국가의 보조는 지속되거나 확대되기를 원하는 일견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 진영은 공교육, 공공 의료기관의 확대와 함께 학부모나 환자 등 수요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만일 사적 방식이 사회적 경제의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면(또는 사회경제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공공성과 수요자의 참여를 동시에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한국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유형과 조합주의 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취약한 사회적경제는 기능적으로 공공경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공공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적기관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서비스 분야(의료나 보육, 교육)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컨대 공공부문 민영화의 일종이었던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을 다른 의미의 PPP(People Public Partnership), 또는 CPP(Citizen Public Partnership)으로 바꿔낼 수 있다. 또한 독일의 2차 노동시장의 역할이 그렇듯, “사회적 경제영역의 잠재적 고용 능력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주체”(Birkholzer, 2005)이다. 사회적 경제는 정의상 일자리의 창출에 적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도설계를 잘 하면 공동체, 시장, 그리고 국가는 서로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Bowles & Gintis, 2002)”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예컨대 한국의 협동조합법 제정)는 두 영역과의 보완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보론> 협동조합은 왜 희귀한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세계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급증한 바 있다. 그러면 협동조합은 왜 위기에 강한 것일까? 사회적 경제라는 범주 자체가 사회적 딜레마 해결의 오랜 지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부족을 보호한다거나 품앗이로 모내기를 한다든가, 스스로 강물이나 공동 숲을 관리하는 규칙을 만들고 지켜온 것이 모두 사회적 경제에 속한다.

그런데 왜 협동조합은 지배적 범주가 되지 못한 것일까?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는 상황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더 많은 단기적 이익을 약속하는 자본주의 기업을 선택해 왔다. 경제학자들은 협동조합의 융성과 쇠퇴기에 간헐적으로 협동조합은 왜 희귀한가를 해명하려 했다. 물론 그 이론적 수단엔 주류경제학이었고 결론은 언제나 협동조합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거나 성장하더라도 주식기업으로 '타락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이들의 모델에서 협동조합은 노동자관리기업(Labor-Managed Firm, 이하 LMF), 즉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직체로 나타난다.

인간이 전적으로 이기적이지는 않다고 했지만 많은 경우에 인간은 실제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호모에코노미쿠스 가정에 입각한 경제학자들의 협동조합 비판은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 또 어떤 이유로든 현실에서 협동조합 또는 노동자관리기업이 자본주의적 기업, 또는 투자자관리기업(Kapital-Managed Firm, 이하 KMF)에 비해 희귀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KMF인가, 아니면 LMF인가는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는가, 아니면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하는가로 갈린다. 바꿔 말하면 투자자가 노동을 고용하느냐, 노동자가 투자를 고용하느냐의 문제이다. 다우(Dow, 2000)는 "경제학은 자본주의 기업의 우위에 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실로 새뮤얼슨(Samuelson, 1957)은 경쟁시장모델에서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느

* 정태인, 2013을 요약한 것이다. 또 이 글의 일부는 수정, 보완되어 정태인, 2015에도 실렸다.

냐, 아니면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느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실로 경제원론 수준에서 단지 기술을 표현하는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에는 노동 또는 자본의 통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현실에서 이 둘 간의 근본적 차이는, 물리적 자산의 소유권은 언제나 바뀔 수 있지만 인간에 대한 소유권은 쉽게 이전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한마디로 “노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능력은 양도(alienable)될 수 없다”(Dow, 2000, 2003, Elerman, 1997, 2004). 또한 노동이라는 요소는 상당한 이질성을 보이지만 금융자산은 그렇지 않다. 즉 자본은 화폐의 양으로 환원가능하고 그 양의 의사를 결정하지만 노동은 사람의 속성이어서 하나의 양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의 근본이 있다.

우선 자본동원의 면에서 KMF는 주식시장을 통해 유한책임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또는 단순히 거품이 생긴다 해도)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 반면 LMF의 경우는 조합원의 가입비(up front fee)와 비분리 자산(Indivisible Reserve, 협동조합에 유보되는 자산은 조합이 해산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이라는 제약 속에서만 자본을 동원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이전은 노동자 구성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주식시장에 해당하는 회원권(membership, 조합원권) 시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전통적 협동조합의 경우 회원권의 구매란 그가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KMF에 비해 쉽게 매매가 일어날 수 없다. 또 탈퇴자(판매자)가 높은 가격에 신경을 쓴다면 조합원 노동력의 질이 무시될 수도 있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일수록 노동력의 질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역선택). 또한 일반적으로 집단적으로 소유된 자산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문제(여기서는 오용이나 남용)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소유는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Alchian & Demsetz, 1972)여서 감시의 태만이 일어날 수 있다.

흔히 LMF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기피되는데 가장 평범하지만 일반적인 이유는 은행이 LMF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서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한 비민주적 기업을 선호하거나(Gintis, 1989), 만일 LMF가 고도로 특화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담보로 사용되기 어려우며(Williamson, 1988) 은행의 역선택에 대해서 신뢰할만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 또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이유도 덧붙일 수 있다. 또한 민주적 결정 원칙을 지키면서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때도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한다(Putterman, 1993).

한편 1주1표에 의한 의사결정은 최대 주주에 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1인 1표에 의한 의사결정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노동자의 구성이 이질적이고 규모가 클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Hansman, 1990, Kremer, 1997). 다수결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평균적 노동자들이 높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 할 것이므로 고능력자는 LMF를 기피할 것이다(Kremer, 1997).

이상 1980년대 이후에 발전한 계약이론이나 신제도주의 이론에 의한 비판 외에도 고전적인 워드-도마-바넥(W-D-V firm)의 비판이 있다. LMF는 노동자/조합원 1인당 순수입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급대응에 비탄력적이며 심지어 수익성이 좋을 때 고용을 줄이거나, 비조합원 노동자를 고용하여 KMF로 타락할 것이다(이른바 '워드효과'). 또한 은퇴에 가까운 노동자일수록 미래의 투자수익을 누릴 수 없으므로 현재의 투자에 반대할 것이다(Pejovich, 1992, Jensen & Meckling, 1979). 따라서 과소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거나('시야 문제 horizon problem') 새로운 조합원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공동소유문제 common property problem'). 또한 소규모 협동조합은 기술혁신에도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문제는 두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어떤 이유로든 현재는 KMF가 지배적인 사회라는 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모든 제도가 지배적

범주인 KMF의 성격에 따라 구성된다면 LMF가 점 점 더 불리해지는 경로의존성이 작용할 것이다. 예컨대 평가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대출 기피라든가, 불신 때문에 지급해야 하는 프리미엄이 그러하다.

반면에 추론의 결과가 사실에 비취 기각되는 경우도 많으며 한편의 단점이 다른 쪽의 장점에 의해 보완되는 사안들도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컨대 LMF가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는 데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야문제'나 '공동소유문제' 때문에 과소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정신이 잘 스며든 조합의 구성원들은 장기시야를 가지고 조합 내에 자본을 축적하여 장기투자를 한다든가, 상위 기관에 기금을 조성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비분리자산의 축적이 일정한 비율로 이뤄지는 것(몬드라곤의 경우 이윤의 30%를 재투자)은 합판협동조합에서 보듯, 경기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안정적 축적을 돕는다. LMF는 경기 상황에 대해 주로 임금의 변화로 대응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Navarra 2009, Craig & Pencavel, 1992)이 보장된다. 따라서 W-M-D 모델이 예측하는 워드효과는 현실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비분리자산은 경기변동에 대해서 일종의 자동안정장치의 역할을 하며 이것이 노동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상당 규모의 조합 가입비(노동자 협동조합의 경우 월급의 일정액을 나눠서 내고 퇴직 시 일정한 이자를 붙여 되돌려 받는데 이는 사실상 퇴직금과 유사하다)와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설립(몬드라곤의 노동금고, 퀘벡의 데자르댕은행, 에밀리아 로마냐의 우니폴 등), 그리고 상위 조합의 기금 조성(이탈리아의 경우 단위 조합은 수익의 3%를 기금으로 낸다)은 금융 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제도들이다.

한편 감시와 응징이라는 면에서도(이는 협동의 필수조건이다) 잔여청구권이 있는 감시자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앨키앤과 뎀제츠의 주장과 달리 동료 간의 상호감시가 더 효율적이어서 감시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Putterman, 1984)노동자 간에 상대적으로 높은 합의(commitment), 신뢰가 존

재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상호감시가 이뤄진다. 한편 감시에 관한 한, 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현실에서 더 심각하므로 감시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KMF 역시 계약의 불완전성 때문에 노력(effort)의 양을 완전히 조절할 수 없으므로 (홀름스툼과 밀그롬) 언제나 노동자에게 추가 유인을 주어야 하며, 실업의 위험에 대한 보험에 해당하는 추가 프리미엄도 제공해야 한다(스티글리츠의 암묵 계약이론). 현실에서 LMF는 적은 감시자와 이윤공유로 높은 생산성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Kruse, 1993).

다우(Dow, 2000)는 LMF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LMF가 성공할 조건을 제시하는데, 대체로 자본의 규모가 적고, 자산특수성이 적으며 동질적 노동자가 팀워크와 정보공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들고 있다. 이 외에도 LMF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시에 준하는 사회회계표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회원권의 자유로운 매매는 불가하더라도 입회비를 가상의 균형가격에 맞추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협동조합,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사회적경제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주로 금융과 인력 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는 금융 상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원활하게 인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¹³⁵⁾ 또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네트워크를 이뤄서 단위기업의 영세성, 인력과 기술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몬드라곤이나 에밀리아 로마냐, 그리고 퀘벡 모두 네트워크 만들기에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3) 한국의 불평등과 소득주도성장 - 폴라니의 거시경제론

“노동시장, 토지시장, 화폐시장이 시장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인간과 자연이라는 사회의 실체 및 사회의 경제조직이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경제라는 ‘사탄의 멧뜰에 노출된다면, 그렇게 무지막지한 상품 허구의 경제체제가 몰고 올 결과를 어떤 사회도 단 한 순간도 견대내지 못할 것이다”(“거대한 전환”, 244-245)

“경제위기는 소득양극화와 사회적 배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는 종종 사회정치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체제는 기후온난화, 생물다양성의 파괴, 그리고 에너지-식량 위기 등 인류 전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다원적 경제 “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한다”(“서울선언”)

현재 세계는 최소한 이중의 직접적 위기를 맞고 있다. 불평등의 심화와 생태위기가 그것이다. 폴라니의 허구의 상품, 즉 노동, 토지(자연), 화폐는 곧 생산요소이기도 하다. 주류 경제학에서 이들 요소는 하나의 수치(스칼라)로 환원되어 생산함수로 들어가고, 그 기술적 성격에 의해 (생산)효율성을 판단 받는다. 흔히 이 생산함수는 콤퍼글라스(CD)함수라는 일차동차 함수(더 일반적으로는 불변교차탄력성함수(CES FCN))의 모양을 취한다고 가정된다. 여기에 완전경쟁이라는 시장조건이 덧붙으면 이제 모든 생산요소는 자신의 한계생산성에 따라(즉 마치 각 요소의 소유자가 사회에 기여한 바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된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가정에서 신고전파 생산이론과 성장이론이 전개된다.¹³⁶⁾

이 때문에 주류경제학은 분배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보울리는 실제로 이 분배 몫이 일정하다고 주장했고(“보울리의 법칙”), 쿠즈네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발

136) 이를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이, 저 유명한 “자본논쟁” 또는 캠브리지-캠브리지 논쟁(미국의 하버드대학과 MIT대학이 있는 곳도 캠브리지이다)이다. 폴라니레빗에게 물어 본 결과, 폴라니는 이 논쟁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가 1960년대에 이미 중세와 고대의 경제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도 폴라니에게 거시경제 모델을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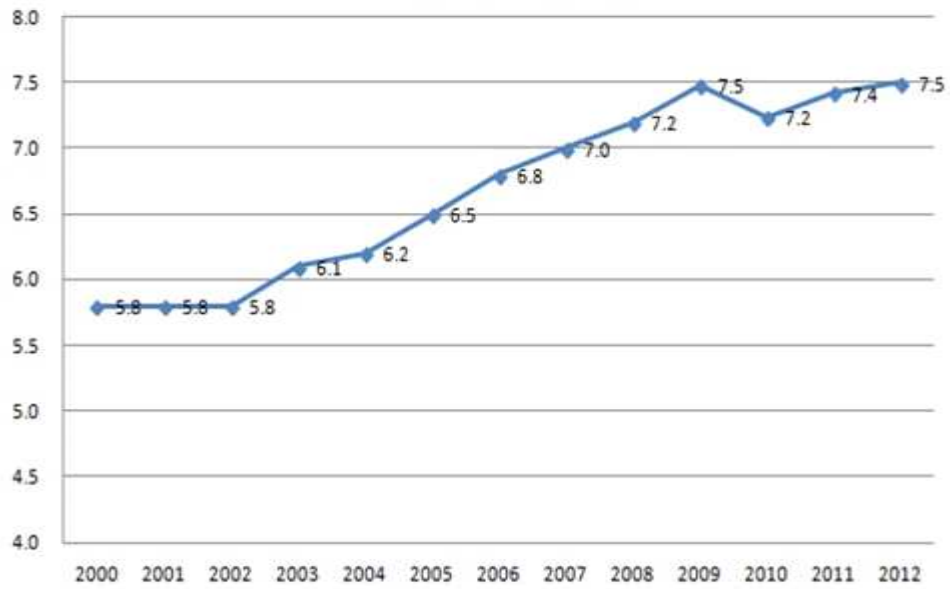
전 초기에는 분배가 악화되지만 일정 단계가 지나면 개선될 거라고 예언했다(“역U자 가설”). 이에 따라 성장에만 신경쓰면 그만이고 선불리 분배문제를 건드렸다가는 상황만 악화시킬 거라는 주장은 지금도 주류경제학의 신조에 속한다. 이런 주장은 케네디 대통령의 “밀물이 오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는 정치적 구호로 표현됐고 지금도 한국의 성장론자들이 신봉하는 교의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피케티라는 프랑스의 43살짜리 경제학자가 이 모든 주장과 구호를 단숨에 엮어버렸다. 그의 무기는, 어느 누구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는 장기 통계, 즉 역사적 사실이다. 그가 초점을 맞춘 수치는 “어떤 시점의 한 나라 순자산(피케티의 ”자본“)을 그 해의 국민소득으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beta=W/Y$, W 는 민간순자산, Y 는 국민소득)이다. 예컨대 한국의 2014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순자산)를 국민소득으로 표현하면 몇 배나 될까를 표현하는 수치이다. β 에 자산수익률을 곱하면 그 해 자산소유자들이 가져간 몫이 될 것이다($a=r\beta$). 그는 이 회계적 항등식에 “자본주의의 제1 근본법칙”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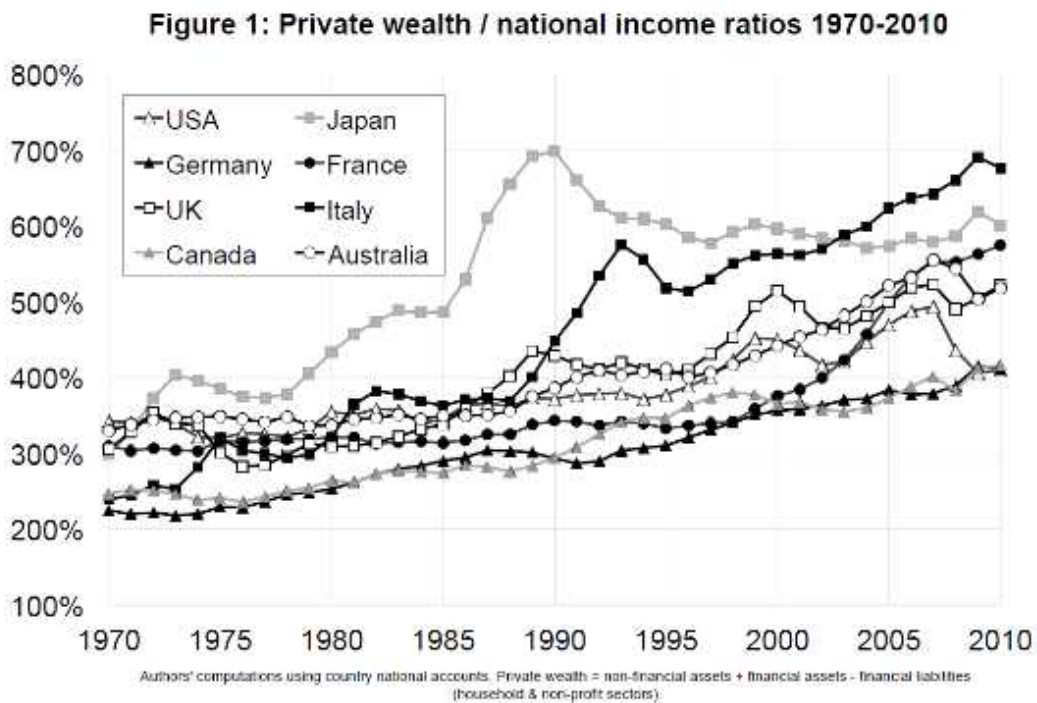
2014년 5월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아주 중요한 보고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를 펴냈다. 이 두 기관은 국민계정 통계의 최고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국민대차대조표”(세계적으로도 이 표를 만들기 시작한 건 10년 밖에 되지 않는다)를 만들고 있다. 피케티의 자료 중 기능별 분배(자본 몫과 노동 몫의 분할) 역시 국민계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는 바로 피케티 지표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 직접 나온 수치는 β 값의 근사치이다. 한은과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국부)은 1경 630조.6조원으로 국내총생산(1,377.5조원)의 7.7배로 추계되었고 밝혔다. 이 수치를 피케티의 비율로 바꾸려면, 1) 분자의 국민순자산에서 정부의 자산을 빼서 민간 순자산을 계산하고 2) 분모의 국내총생산을 국민소득(국내총생산-감가상각+해외순수취소득)로 바꾸면 된다. 현재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부록과 한은 통계 데이터베이스)로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추계가 가능하다. 그 결과가 <그림3>이다.

<그림3>과, <그림4>의 2000년 이후 각국의 β 값 추이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수치는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프랑스만 한국과 비견될 정도이다.



<그림3> 한국의 β (=민간순자산/국민총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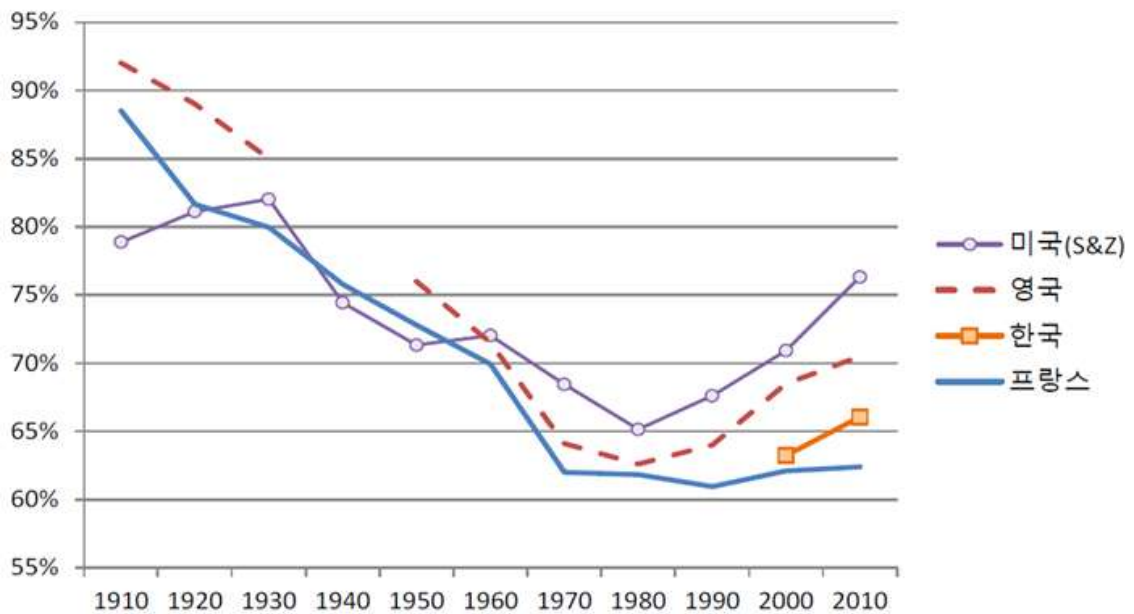


출처: Piketty & Zucman, 2014.

<그림4> 세계 각국의 β 값 추이

β 는 민간의 순자산(부)를 한 해의 국민소득으로 나눈 수치이다. 당연히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부의 집적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 자체가 분배 상황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국민 모두 똑같은 양의 부동산과 생산자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국대의 김낙년교수가 피케티와 마찬가지로 세금자료로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상위 10%는 자산의 66%를 가지고 있고 하위 1%는 고작 1.7%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출처: 김낙년, 2015, p15

<그림5> 상위 10% 자산 비중의 국제비교

또한 <그림6>를 보면 노동소득 역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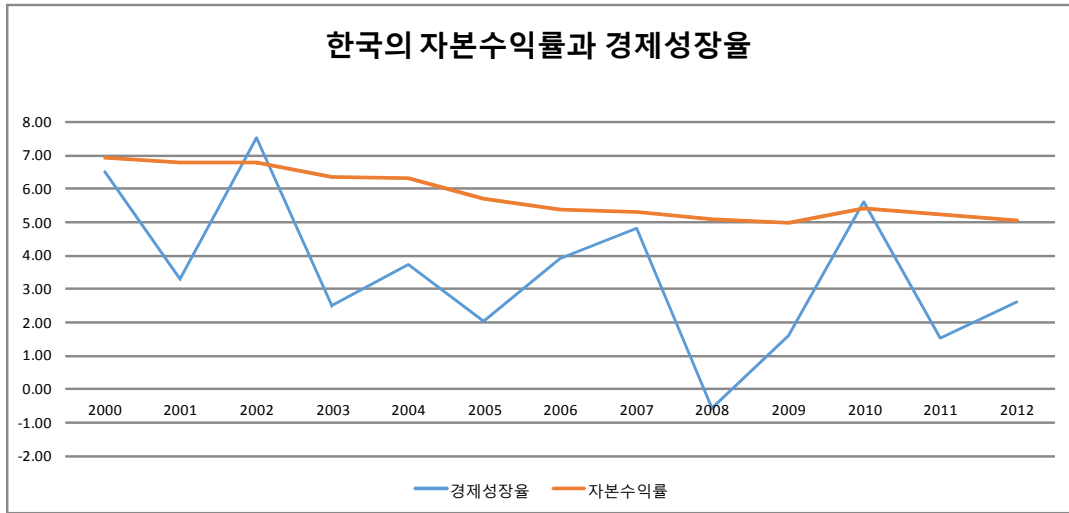
출처: 김낙년, 2014

<그림6> 최상위 1% 소득 비중의 국제비교

피케티의 제3법칙에 따르면 자본의 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으면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된다. 짧은 기간이지만 피케티 방식으로 한국의 자본수익률을 계산하면 수익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해서 5% 수준이지만 경제성장률은 2015년 현재 2.6% 가량 되므로 점점 격차가 벌어진다. 즉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건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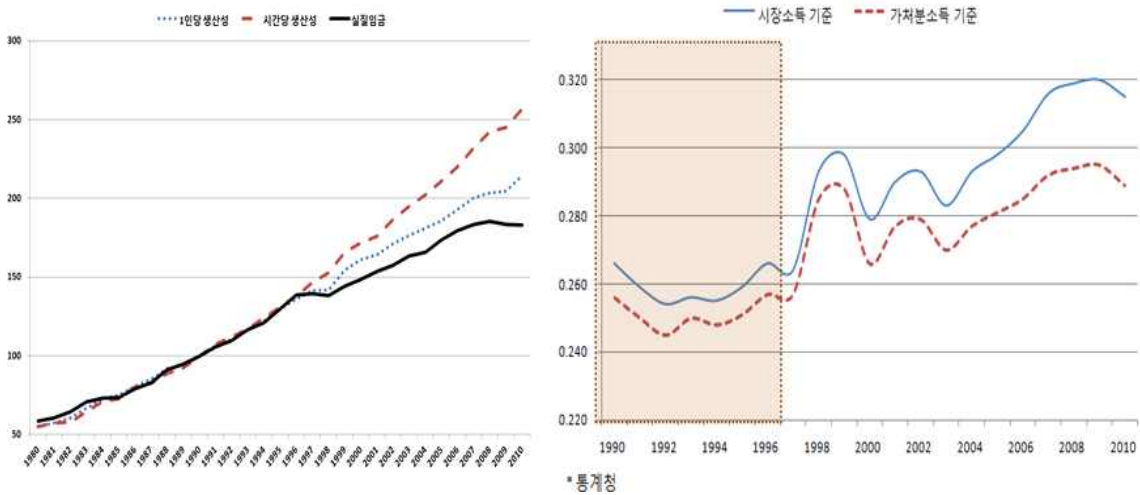
피케티는 자본수익률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유를, 신고전파 성장론에 입각해서 생산요소의 교차탄력성이 1보다 큰 데서 찾았고, 이 때문에 좌우 경제학자들의 집중적 비판 대상이 되었다.¹³⁷⁾

137) 자본논쟁까지 연결되어 있는 다소 복잡한 논의이지만 요약하면, 잘 작동하는 생산함수란 1) 현실의 생산함수가 규모의 불변함수(CRS)여야 하고, 2) CRS함수라도 집계 조건은 아주 엄격하며, 근사적으로 집계한다고 하더라도 1), 2)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이상 “집계문제”), 현실의 함수가 존재할 수 없으며, “잘 작동하는 생산함수의 외양이 과연 그런 게 존재하는지에 관해 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외양은 회계항등식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항등식이 산출물 가치와 투입물 가치를 연결하고 있다”(이상, “추정문제”, Fisher, 2005, p490). 즉 집계생산함수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계생산함수를 쓰는 거시 모델은 모두 허구 위에서 있는 것, 플라니의 언어로 “형식경제학”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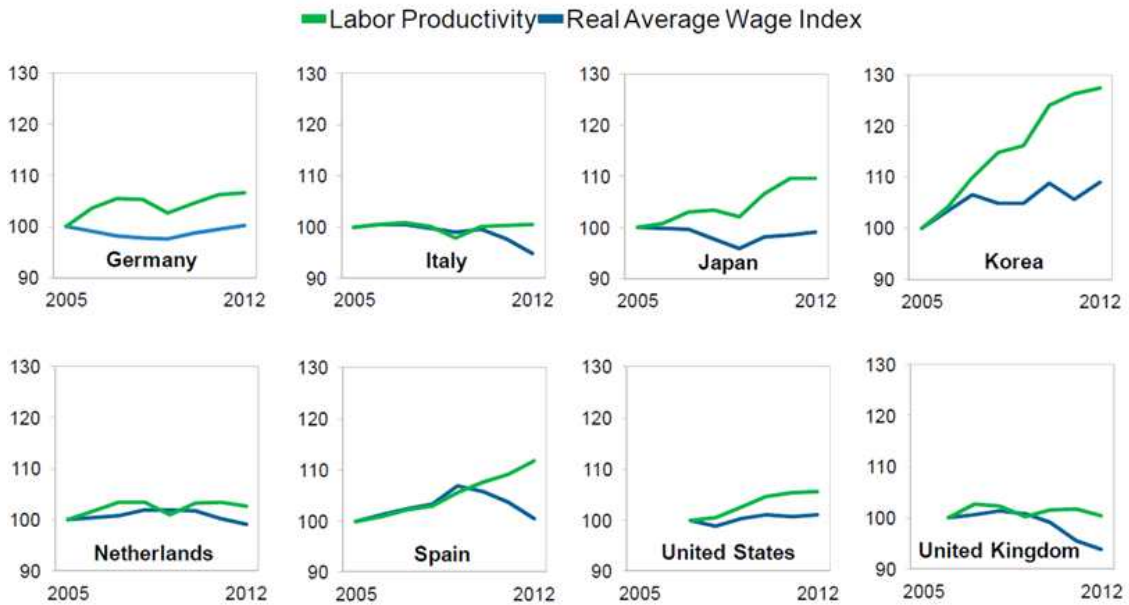
<그림7> 한국의 자본(자산)수익률과 실질국민소득 증가율

하지만 생산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피케티의 논지에 따라 불평등의 심화를 얘기할 방법은 찾을 수 있다. 포스트케인지언들의 소득주도성장이론(임금주도성장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소득몫과 자본소득몫의 격차는 실질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율의 차이에서 바로 도출된다.



<그림8> 한국의 실질임금과 실질생산성 증가율의 격차와 지니계수의 추이

<그림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5년경부터 한국의 실질임금과 실질생산성 증가율 간의 괴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는 지니계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득불평등(즉 노동소득 몫의 하락)은 2005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출처: IMF, 2005

<그림9> 각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증가율 추이

한편 196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자산과 소득분배 양 면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에 속했다 (우대형, 2014 참조). 해방 후 농지개혁을 한 데다 한국전쟁으로 지주계급이 거의 소멸했기 때문이다. 지주들에게 돈 대신 준 지가증권이 전시 인플레이션으로 휴지조각으로 바뀌었다. 지주계급이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까지 모두 장악한 동남아나 중남미와 비교할 때 동아시아가 경제성장이 빨랐던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70-80년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때문에 자산 불평등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위의 그림들에서 확인한 것처럼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실질임금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아서 자산가들이 가져가는 임금

몫이 크고, 이들의 몫은 다시 부동산 등 자산구입에 쓰여서 자산 불평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임금소득 몫이 증가했을 때 경제성장율이 오를 것인가는, 그 나라의 경제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경제구조와 자산가들의 행동양식에 따라 설비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노동자의 소득증가가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소득몫이 늘어나면 경제성장율도 올라가는 “임금주도국가”에 속한다(Onaran, Galanis, 2012, 홍장표, 2014 a,b 참조).

이에 따라 분배를 개선하면 성장률도 올릴 수 있다. 요즘 한국의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바로 이런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뿌리를 대고 있다. 여기서 ‘소득’은 임금소득을 말하며 임금소득은 1인당 평균임금*노동자수(고용)이므로 임금주도, 소득주도, 고용주도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한국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소득주도로 표현하는 쪽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을 노동시장정책, 간단히 말해서 “임금이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가히 상전벽해다. 지난 50년 간의 수출주도(-부채주도) 성장기조에서 임금 인상은 수출경쟁력을 낮추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조차 시장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고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늘리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분배 상황(‘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거의 일직선으로 나빠지고 있다. 시장의 분배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런 경우 상당한 폭으로 복지를 증가시켜도 과거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다. 실제로 두 민주정부가 애써서 복지를 늘렸지만 지니계수로 보면 1990년대 초반보다 불평등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구조에 따라(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임금인상이 총수요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부경대 홍장표교수의 계량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한국도 소득주도경제에 속하며, 나아가서 투자와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정책을 아우르는 정책기조이며 그들의 경제학 방법론을 집약한 용어이다. 예컨대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힘들이 작용한 결과이며 이렇게 분배가 결정된 이후에 다른 경제변수가 결정된다.

또한 상품의 가격은 기업의 독점력에 따른 마크업(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가산하는 것)이 결정하므로,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력관계가 중요하다. 금융정책에서도 포스트케인지언들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포스트케인지언의 정책기조는 각 이해관계자(보통 모델에서는 노동자, 기업, 금리생활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실제 역사를 봐도 그렇다. 1960년대 이래 로빈슨이나 칼레츠키 등 ‘캠브리지 케인지언’들(포스트케인즈주의의 창시자들)이 적극적으로 옹호한 “소득정책”(incomes policy, 초기에는 임금정책이라고 불렀다)은 현재 소득주도성장론의 원형이다. 현재 세계의 경제학계는 90% 이상이 신고전파경제학자(더 정확히 말하면 신합의경제학, New Consensus Economics)이므로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이 실제로 주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한 건 이 때가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다.

로빈슨 등은 노동조합의 강화 뿐 아니라 고용주연합(예컨대 대한상의)의 단결을 통한 중앙교섭을 지지했다.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장기침체’에 대해서 노동자와 고용주, 그리고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70년대 영국에서는 와일드캣 파업이 돌출하면서 중앙교섭에 실패했고 노동당은 정권을 잃었다. 대처의 신자유주의로 향한 길이 열린 것이다.

임금정책이 놀라운 성공을 거둔 곳은 스웨덴이었다. 당시 노총의 이론가였던 렌과 마이드너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다. 1950년대 초반 렌-마이드너 모델은 수출대기업의 임금을 제한하고 내수중소기업의 임금을 끌어 올리는 ‘연대임금’을 제안했다. 대기업 고용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한 제안이었고 오직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가 문제였다. 임금 인상에 따라 파산을 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을 위해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준비되었다. 이후 이 정책은 공공부문의 확대와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했다.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야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도 아니다. 포스트케인지언의 가격설정이론에 따르면 한국 임금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대기업의 마크업 가격에 있다. 실로 한국의 재벌은 생산물 시장 뿐 아니라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가공할만한 독점력을 휘두른다. 하청단가의 후려치기가 바로 그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분 만큼 하청단가를 내려서 중소기업의 과실을 대기업이 전부 빼앗을 수도 있다. 과실의 일부는 대기업 노동자에게 나눠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대

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재벌들이 전체 노동자 임금이 올라야 기업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 공동교섭에 의한 하청단가 결정(이윤공유제 등)이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이다. 또 대기업 노동자가 전체 임금인상분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에게 돌아가는데 합의하고 앞장서서 싸울 수 있을까? 현재의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 단기적인 이익을 양보할 수 있을까?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포스트케인지언들은 장단기 모두 적극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긴축정책에 반대한다), 특히 생태정책을 옹호한다. 즉 현재와 같은 ‘과소투자’(마이클 스펜스)의 시대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생태인프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즉 소득주도성장론은 생태투자를 정책패키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나라 전체의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케인지언들은 세계적인 ‘장기침체’가 부와 소득의 분배 악화에 따른 총수요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각국은 내수 부족에 대해서 한편으론 수출주도성장(중국과 독일)으로, 다른 한편으론 부채주도성장(미국과 영국)으로 대응했다. 한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수출주도에 부채주도(주택 등 소비자금융의 급등)를 결합한 모델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계는, 140%에 달하는 부채비율 때문에(2015년말 현재 1200조원) 더 이상 빚으로 소비를 늘릴 수 없다. 수출주도-부채주도성장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의 소득주도성장론은 현재 한국에 절실한 “분배를 통한 성장” “균형성장” “합의에 의한 성장”의 길이다. 또한 “생태혁신을 통한 성장”의 길이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론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가 출선해서 자본가와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압력도 가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힘한 오솔길’이기도 한다.

사회적경제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다. 아니, 사회적경제조직은 시민사회 대표 중 하나로 사회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주체이다. 사회적경제야말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한 경제조직이다. 자본소득(즉 배당)과 노동소득(임금)의 분배가 조합원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내의 임금격차도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노동소득내 불평등도 최소화한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경제는 소득주도성장

론 실천의 이상적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생태문제를 다루는 데도, 신고전파의 생산함수는 적절하지 않다. 생산요소 간의 무한한 교체 가능성을 상정하기 때문이다. 플라니의 사상을 거시경제학적으로 표현하려면 현재로서는 포스트 케인지언 모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계량경제학으로 생태문제를 연구하는 대다수 생태경제학자들은 포스트케인지언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구분우 2012, 칼 폴라니, 반경제의 경제학-경제계산과 자연주의 신화, 비르투.
- 김 균 2001, 칼 폴라니와 자유주의 비판(이근식 황경식편,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 이병천 2004, “칼 폴라니의 제도경제학과 시장사회비판”, 사회경제평론 23
- 이병천 2009, “호혜의 경제, 공생의 사회-칼 폴라니에게 배우는 공동체의 사회경제학“(이정우외, 행복경제 디자인, 바로 세움, 수록).
- 임종철 1998, 칼 멩거 연구, 경제논집, 37/1, 서울대 경제연구소.
- 최기준 2001, 경제제도와 행동동기에 대한 경제인류학적 제안-칼 폴라니와 모스그룹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회경제평론, 16호.
- 홍기빈 2009, 옮긴이의 말(홍기빈, 거대한 전환, 길 수록)
- 김낙년 2014, “한국의 소득불평등, 1933-2012:소득세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사학.
- 김낙년 2015,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낙성대연구소 위킹페이퍼.
- 우대형 2014, “한국경제성장의 역사적 기원”, 경제사학회 발표문.
- 이병천, 전창환 편 2013, 사회경제민주주의의 경제학-이론과 경험, 돌베개
- 이정우 2014, “토마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어떻게 볼 것인가?”, 글항아리.
- 자마니, 브루노 2015, 제현주역,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북돋움.
- 정태인, 이수연 2013,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
- 정태인 등 2014,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은 2015,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 한국은행, 통계청 2014,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
- 홍장표 2014a,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임금주도 성장 모델의 적용 가능성”, 사회경제평론, 43호.

- 홍장표 2014b,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소 워킹 페이퍼.
- 三浦 徹 外 편 2004, 比較史のアジア-所有 契約 市場 公正, 東京大出版會.
- 若森みどり 2011, 카를·폴라니-: 市場社會·民主主義·人間の自由, NIT出版.
- 宮嶋博史 2013,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Publications (홍성태역, 위험 사회, 새물결, 2006).
- Bottomore T. 1985, *Theories of Modern Capitalism*, George Allen & Unwin.
- Burroway M. 2003, For a Sociological Marxism: The Contemporary Convergence of Antonio Gramsci and Karl Polanyi, *Politics and Society*, 31(2).
- Cangiani M. 2010, From Menger to Polanyi-The Institutional Way, in *Austrian Economics in Transition* ed. by H. Hagemann et al., Palgrave Macmillan.
- Dale G. 2010, *Karl Polanyi, The Limits of the Market*, Polity Press.
- Dalton G. 1965, Primitive, Archaic and Modern Economies : Karl Polanyi’s Contribution to Economic Anthropology and Comparative Economy, in J.Helm (ed.), *Essays in Economic Anthropology*, Proceedings of the 1965 Annual Spring Meeting of the American Ethnological Society.
- Dalton, G. "Comment", *Research in Economic Anthropology* 4, 1981.
- Duncan C.M. & D.W.Tandy(eds.)1994, *From Political Economy to Anthropology*, Black Rose Books.
- Ford L.R. 2010, Marx Weber on Property-an effort in interpretative understanding, *Social-Legal Review*, vol.6.
- Granovetter M.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No.3
- Gudeman S. 2001, *The Anthropology of Economy*, Blackwell.
- Gudeman S. 2008, *Economy’s Tension-The Dialectics of Community and Market*, Berghahn Books,

- Halperin R.H. 1984, “Polanyi, Marx and the Institutional Paradigm in Economic Anthropology”, in *Research in Economic Anthropology*, vol.6 edited by B.L.Issac, JAI Press
- Halperin R.H.1994, *Cultural Economies, Past and Present*, University Press of Texas. Hann (1998),
- Lie, John 1991, “Embedding Polanyi’s Market Society, ” *Sociological Perspectives*, 34(2).
- Pearson H.W.1977, Editor’s Introduction, in Polanyi 1977.
- Polanyi K. 1947 , Our Obsolete Market Mentality, *Commentary*, Feb.3 , in Polanyi 1968. (홍기빈 역,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에 번역수록, 책세상, 2002).
- Polanyi K.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Rinchart & Co.(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길, 2009)
- Polanyi K. 1947a, Our Obsolete Market Mentality, *Commentary*, 3(2).(George Dalton (ed.), *Primitive, Archaic and Modern Economies: Essays of Karl Polanyi*, Beacon Press, 재수록)
- Polanyi K. 1947b, “Appendix”, in Polanyi 1968.
- Polanyi K. 1957,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Free Press(이종욱 역, 초기제국에 있어서의 교역과 사상, 민음사, 1994)
- Polanyi, K. 1957, “Aristotle Discovers the Economy, ” in Karl Polanyi, Conrad Arensberg & Harry Pearson (eds.)
- Polanyi, K. 1966, *Dahomey and the Slave Trade: An Analysis of an Archaic Econom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Polanyi, K. 1968, *Primitive, Archaic and Modern Economies: Essays of Karl Polanyi*., George Dalton (ed.), Boston: Beacon Press.
- Polanyi, K. 1971, Carl Menger’s Two Meanings of “Economic”, in G.Dalton (ed.), *Studies in Economic Anthropology*,
- Polanyi, Karl 1977, *The Livelihood of Man*. New York: Academic Press(박현수 역, 인간의 경제, vols 1-2.풀빛).

- Stjerano S.2004, *Solidarity in Europe-The History of an Id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edberg R. 1998, *Marx Weber and the Idea of Economic Soci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wedberg R. 2011, Marx Weber's central text in economic sociology, in M.Granovetter & Swedberg R. , *Sociology of Economic Life*, 3rd ed., Westview Veblen T. 1904, *The Theory of the Business Enterprise*.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Books.
- Weber M. 1924, *Wirtschaftsgeschichte: Abriss der universalen Sozial-und Wirtschafts-geschichte, aus den nachgelassenen Vorlesungen*, herausgegeben von S.Hellmann und M.Palyi 2te Auflage, Munchen und Leipzig (조기준 역, 사회경제사, 삼성출판사, 1987)
- Weber M. 1972, *Wirtschaft und Gesellschaft.Grundriss der verstehenden Soziologie. 5.*, revidierte Aufl., Studienausgabe, [besorgt von J.Winckelmann], Tubingen:J.C.B.Mohr(Paul Siebeck)(박성환역, 경제와 사회1, 문학과 지성사, 1997)
- Yagi K. 2010, Carl Menger after 1871-Quest for the reality of 'Economic Man', in *Austrian Economics in Transition* ed. by H. Hagemann et al., Palgrave Macmillan.
- Bowles,S., Gintis,H 2002,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Governance*, *The Economic Journal*, 112, Nov.
- Birkholzer,K 2005, *Development and Perspectives of the Social Economy or Third Sector in Germany, meimo.*
- Block,F., Sommers, M. 2014, *The Power of Market Fundamentalism, Karl Polanyi's Critique*, *Harvard Univ. Press.*
- Burawoy 2013, *Marxism after Polanyi*, in Michelle & Satgar ed., *Marxism in the 21st Century*, *Wits Univ. Press*, pp.34-52.
- Dale, G. 2010, *Social Democracy, Embeddedness and Decommmodification:On the Conceptual Innovations and Intellectual Affiliation of Karl Polanyi*, *New Political Economy*, V15, N3.
- Fraser, N. 2013, *A Triple Movement?*, *NLR*, May-June.
- Jung, Taein 2014, *A Model of Pluralistic Economy Based on Polanyi's Idea*, presented for the *Karl Polanyi International Conference*.
- Nowak, M. 2006, *Five Rules for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V314, December.
- Onaran,O., Galanis, G. 2012,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13.

Ostrom,E.2010, “*Beyond markets and states: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
AER.

Ostry,J.Berg.A., Tsangarides,C., 2015,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21st Century*, Havard Univ. Press

Piketty & Zucman 2014, *Capital is Back: Wealth-Income Ratios in Rich Countries 1700-2010*,
QJE, pp 1255-1310.

Polanyi, K. 1957,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s: Economies in history and theory*, CM
Arensberg, HW Pearson.

PolanyiLevitt, K. 2013, *From the Great Transformation to the Great Financialization*, On Karl
Polanyi and Other Essays, Zed Books.

Salamon, L.,Sokolowsky, Anheier, H. 2000, *Social Origins of Civil Society:Explaining the
Nonprofit Sector Cross-Nationally*, presented at the ARNOVA Conference Nov.

Stiglitz 2001, Foreword in 2014(홍기빈 역)